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407-01

정책보고서 2018-31

담배 규제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최은진 · 이난희 · 윤시몬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금연사업성과측정 및 효과 분석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공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및 담배제품불법거래근절에 관한 의정서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건강증진재단, 2013(공저)

【공동연구진】

이난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윤시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용역 과제 『담배규제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정책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 최 은 진

연 구 원 : 이 난 희

윤 시 몬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7
제2장 세계보건기구 FCTC의 국내 이행 현황 고찰	39
제1절 세계보건기구 FCTC의 주요 정책내용	41
제2절 국내 담배규제 정책의 동향	46
제3장 외국의 담배 규제 관련 제도	53
제1절 호주	58
제2절 미국	73
제3절 영국	80
제4절 프랑스	90
제5절 캐나다	96
제6절 일본	100
제7절 시사점	108
제4장 담배규제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111
제1절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113
제2절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인 인식조사	116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31
제1절 담배규제정책의 사각지대	133
제2절 정책제언: 담배규제의 성과향상을 위한 이행	138

제3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41
참고문헌	143
부 록	147
부록 1. 각국의 금연정책 동향	148
부록 2. 설문조사표	151

표 목차

〈표 1-1〉 연구추진 과정	38
〈표 2-1〉 세계보건기구 FCTC의 주요 조항과 부속서의 개요	42
〈표 2-2〉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 요약표	46
〈표 2-3〉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과 우리나라 법제도 비교 요약표	47
〈표 2-4〉 담배규제법 및 유사한 법령의 비교표	48
〈표 2-5〉 담배의 종류에 따른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기준 현황	50
〈표 3-1〉 Summary of MPOWER measures	56
〈표 3-2〉 국가별 법제도 요약표	56
〈표 3-3〉 호주의 국가 담배관리 프로그램(2016년 12월 말 기준)	58
〈표 3-4〉 호주의 성인 흡연율	59
〈표 3-5〉 호주의 성인(18세 이상) 흡연율(2016.12.31.기준)	59
〈표 3-6〉 호주의 청소년(12-17세) 현재 흡연율(2014)	60
〈표 3-7〉 호주의 주별 자동차 내 금연 조항	63
〈표 3-8〉 호주의 담배 규제 정책	71
〈표 3-9〉 미국의 국가 담배규제프로그램(2016년 12월 말 기준)	73
〈표 3-10〉 Summary of MPOWER measures	74
〈표 3-11〉 미국 성인의 흡연율(2016.12.31.기준)	75
〈표 3-12〉 미국의 담배 규제 정책	77
〈표 3-13〉 영국의 국가 담배규제프로그램(2016년 12월 말 기준)	81
〈표 3-14〉 Summary of MPOWER measures	81
〈표 3-15〉 영국의 성인 흡연율(2016.12.31.기준)	82
〈표 3-16〉 영국의 청소년 흡연율(2016)	82
〈표 3-17〉 영국의 흡연 관련 정책	87
〈표 3-18〉 프랑스의 담배 관련 정책	92
〈표 3-19〉 캐나다의 흡연 관련 정책	99
〈표 3-20〉 일본 비바이시 간접흡연 방지 조례의 개요	101
〈표 3-21〉 일본 동경도 간접흡연 방지조례(대상시설 및 흡연금지 장소의 범위) 안	102
〈표 3-22〉 일본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노상흡연금지 조례 규제 현황	103
〈표 3-23〉 일본의 담배 관련 정책	107

〈표 4-1〉 온라인 설문조사대상 현황	116
〈표 4-2〉 남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18
〈표 4-3〉 여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19
〈표 4-4〉 남자 현재흡연자의 담배제품별 사용현황	120
〈표 4-5〉 여자 현재흡연자의 담배제품별 사용현황	120
〈표 4-6〉 흡연자의 흡연행동 특성	121
〈표 4-7〉 과거흡연자의 과거흡연행동 특성	123
〈표 4-8〉 담배제품 선택의 요소	124
〈표 4-9〉 담배 광고판촉후원정보에 대한 인식	125
〈표 4-10〉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인식	125
〈표 5-1〉 FCTC 협약과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이행과제	140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체계도	38
[그림 2-1] 2025년 국가별 흡연율(15세이상) 예측통계	41
[그림 2-2] WHO FCTC의 주요 조항별 이행 동향	43
[그림 4-1] 지난 3년간 담배규제정책의 성과 요인	114
[그림 4-2] FCTC의 이행을 위해서 향후 5년간 강화되어야 할 정책 10가지	114
[그림 4-3]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책요소	115
[그림 4-4] 흡연자의 성별 흡연장소 비교	123
[그림 4-5] 흡연자 유형에 따른 간접흡연 경험 장소	126
[그림 4-6] 담배규제정책확대의 우선순위	127
[그림 4-7] 사회적 특성에 따른 담배규제정책의 우선순위(직업별)	128
[그림 4-8] 건강취약 특성에 따른 담배규제정책의 우선순위	129
[그림 4-9] 담배규제정책별 응답자의 간접흡연경험빈도수	130
[그림 5-1] 담배규제정책의 추진틀	14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WHO담배규제기본협약(FCTC)추진 개요

-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16일 비준하였음(66번째 비준국).
- WHO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2003년 제53차 WHO 총회에서 19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담배규제기본협약이 통과됨(2003.5.21.). 2005년 11월 30일 40번째 국가가 비준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년 2월말 국제법으로 발효됨.
- 181개 당사국(2018년 10월 현재), 전세계 인구의 90% 포괄

□ 2018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8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됨.

- 담배의 광고, 판촉, 후원(제13조)관련 오락매체에서 담배묘사를 규제를 위한 이행촉구 등을 담은 결의문이 채택됨.
- 담배의 성분공개 및 규제(제9조 및 제10조)와 관련하여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담배성분분석 관련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세계보건기구와의 협업을 지속하는 결정문이 채택됨.
- 껀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규제관련 유럽연합의 결정문이 채택됨.
- 담배업계의 방해활동 대응, 담배경작의 지속가능한 대체활동지원, 환경보호에 대한 결정문이 채택됨.
- 담배제품의 불법거래근절에 대한 의정서가 발표됨에 따라 비준과 이행이 촉구됨.
-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달성을 위한 주요 도구로써 FCTC의 적극적인 이행이 촉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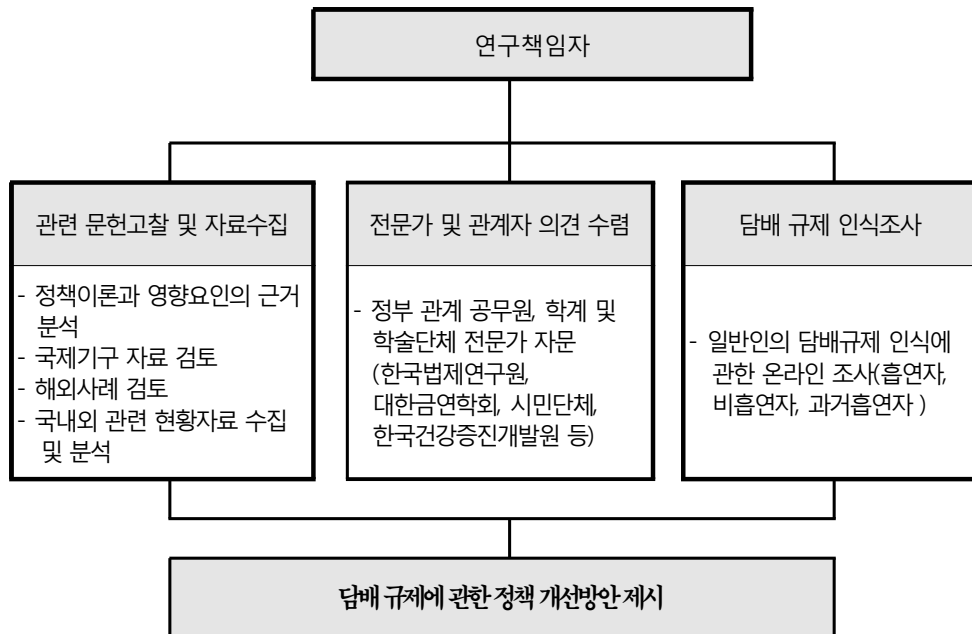
2 담배 규제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 흡연문제에 대하여 전 지구적 조망이 필요하다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세계보건기구의 첫 번째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이 2005년에 성안을 달성하였음.
-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시작으로 인해 효과적이고 근거 있는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예산확보전략과 활용에 대한 정보와 국가들의 사례가 공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West, 2006).
- 전세계적으로는 2030년까지 매년 약 5백 만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저소득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1천 만명 이상으로 이 국가들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서 대표적으로 담배에 대한 관리와 규제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되어 있음.
- 담배 소비의 감소를 위해서는 금연의 해악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금연운동도 필요하지만, 담배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 담배 소비를 촉진시키는 기업광고의 억제 등과 같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활동들이 병행되어야 함. 즉 담배 소비의 감소라는 궁극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연 정책의 수립 및 금연운동과 같은 담배 소비자에 대한 소비감소의 유도과 담배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국가적 규제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
- 본 연구에서는 담배규제정책의 개선을 통하여 담배규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범위 및 연구 방법

- 담배 규제에 대한 국제적 근거와 이론적 고찰
 -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및 프로토콜 고찰
 - 주요 국가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반영 현황 분석
 - 담배세법과 담배규제법을 각각 분류 중인 해외 사례 조사

[그림 1] 연구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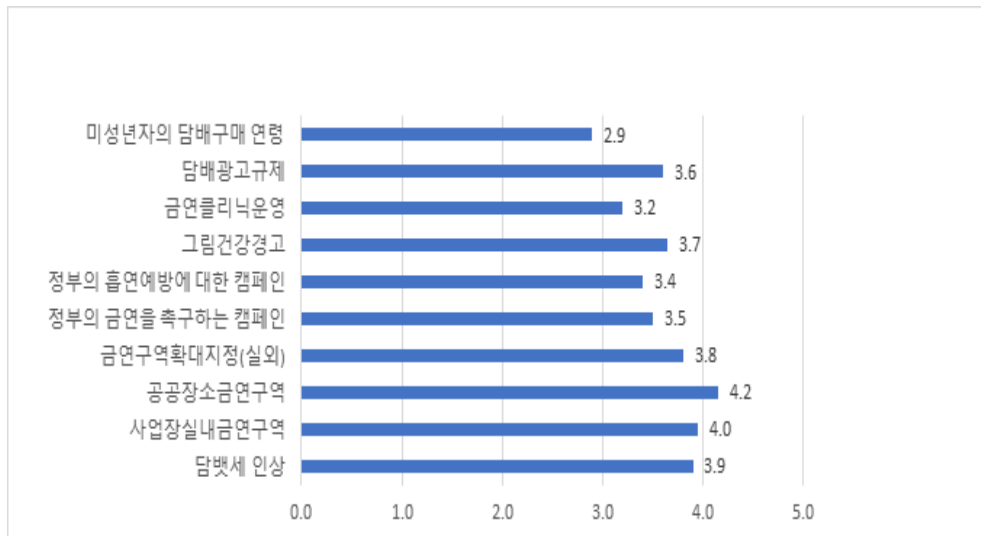


- 담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제시
 - 담배규제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서면자문 20명, 11월 중 조사)
 - 일반인(흡연자, 비흡연자, 과거흡연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10월 30일~11월 26일): 전체 5,280명, 흡연자 3,221명, 과거흡연자 1,171명, 비흡연자 888명

3.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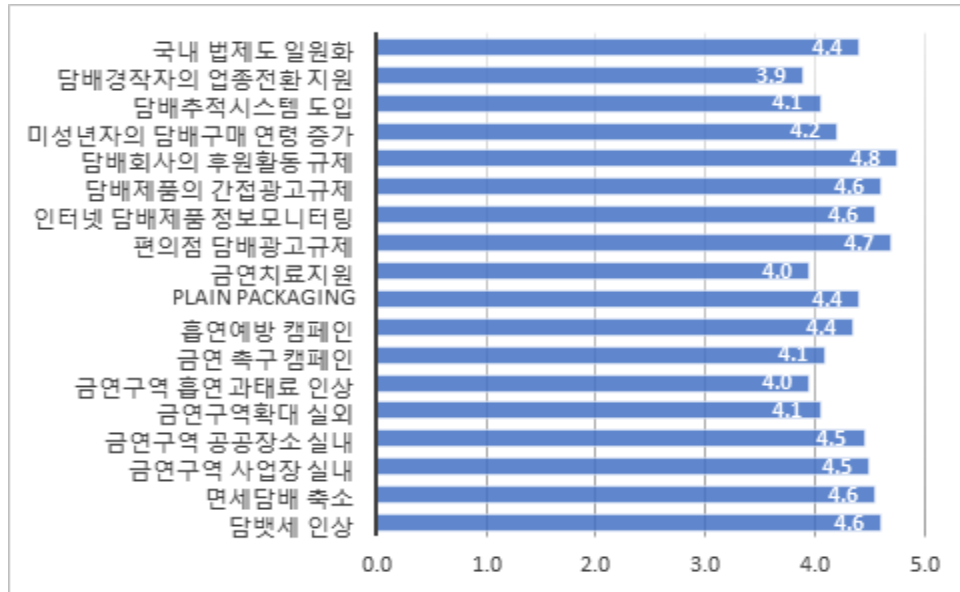
- 최근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남자성인흡연율(2017년 기준, 38.1%)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청소년 흡연율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가향담배, 전자담배가 미성년자의 흡연을 조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성인 흡연자의 금연의향을 감속시킬 수 있다는 데에는 엇갈린 의견이 있었음.
- 지난 3년간 담배규제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균적 의견은 공공장소 실내금연구역, 사업장 실내금연구역 정책 확대였음.
- 미성년자 담배구매 연령규제정책에 대한 성과는 가장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금연클리닉운영도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림 2] 지난 3년간 담배규제정책의 성과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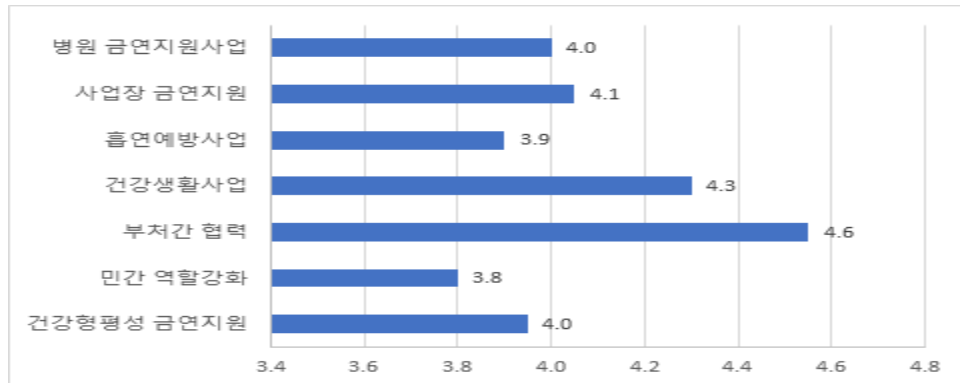
주: 전체 항목 평균은 5점 만점에 3.6임.

[그림 3] FCTC의 이행을 위해서 향후 5년간 강화되어야 할 정책 10가지



주: 전체 항목 평균은 5점 만점에 4.3임.

[그림 4] 흡연을 감소를 위한 정책요소



주: 전체 항목 평균은 5점 만점에 4.1임.

□ 세계보건기구의 FCTC의 이행을 위해서 향후 5년간 강화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담배회사의 후원활동규제,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등 담배회사의 판촉활동에 대한 규제가 가장 중요한 규제대상으로 분석되었음. 그 다음으로는 담뱃세 인상과 금연구역의 지속적인 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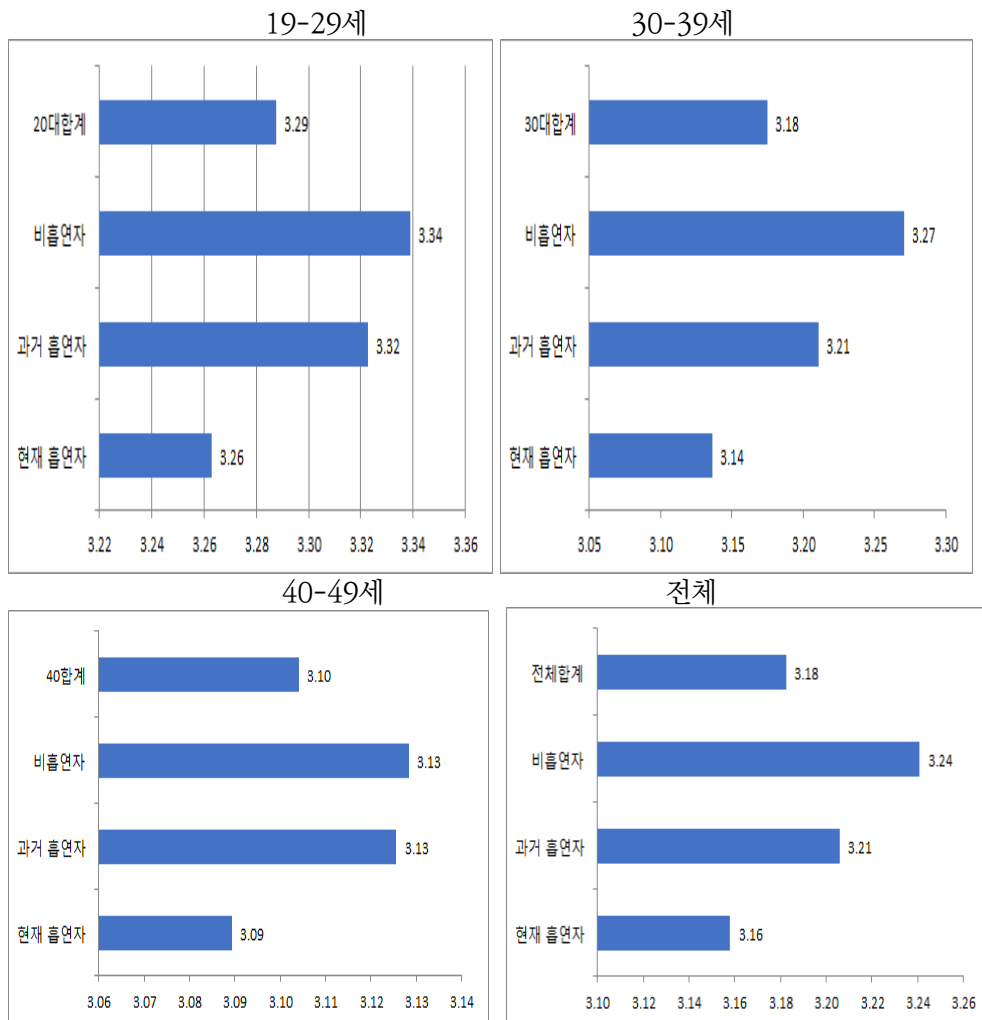
- 우리나라국민의 흡연을 감소를 위한 주요 정책요소는 중앙부처간에 협력을 통한 노력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되었음.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같이 전반적인 건강 증진사업을 통해 금연생활을 유도하는 것에 또한 많은 의견이 모아졌음.

4.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

- 온라인 조사 응답자의 연령대는 19~49세로 총 5,280명이었음. 흡연자 3,221명, 과거흡연자 1,171명, 비흡연자 888명이었음.
- 본 조사샘플의 연령대별로 주관적 건강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의 점수는 낮아졌음. 흡연자와 과거흡연자, 비흡연자의 주관적 건강수준을 비교하면 비흡연자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낮은 연령대의 비흡연자 응답자 군에서 주관적 건강수준의 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본 연구의 조사가 단면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건강수준은 비흡연 남성과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모두 높았음.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남자 과거흡연자에서 가장 많았음.

[그림 5] 연령대별 주관적 건강수준 점수와 흡연여부의 비교

(단위 :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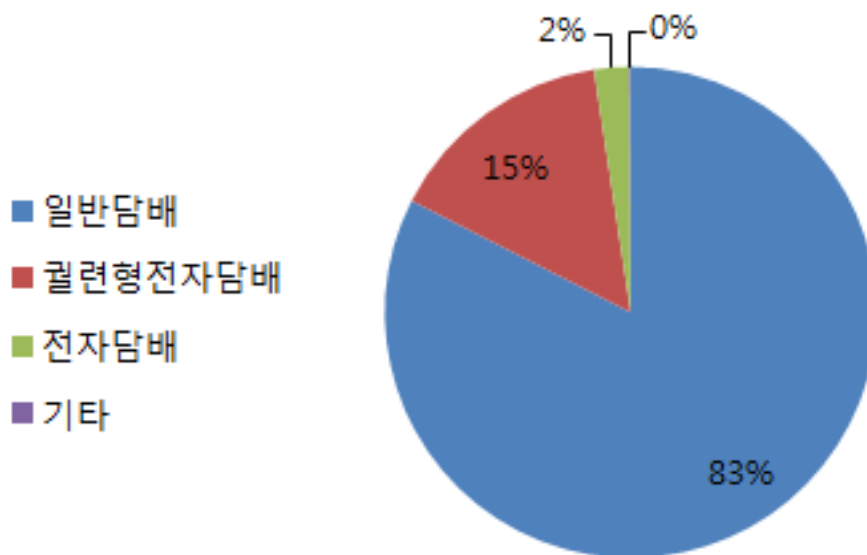
주: 점수는 1-5점으로 높은 점수가 건강수준이 좋다는 응답임.

- 응답자의 지역별 구성은 대도시 51.7%, 중소도시 45.7%, 농어촌 2.6%임.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 21.4%, 대학교 69.3%, 대학원졸 이상 9.4% 등임. 직업별로는 비생산직(사무직, 서비스업 등) 70.2%, 생산직 10.4%, 기타(학생, 주부, 무직) 19.4% 등이었음. 개인이 속한 가구의 평균 월소득은 300만원 이하 31.8%, 301-500만원 40.7%, 501만원 이상 27.5% 등이었음.

8 담배 규제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 담배제품 사용유형은 남자 흡연자의 경우 일반담배(궐련)사용이 82.0%였음.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5.7%였음. 연령별로 궐련형 전자담배사용비율을 보면 30-39세 연령대에서 19.9%로 가장 많았음.
- 여자 흡연자는 85.9%가 일반담배(궐련)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음.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비율은 연령별로는 40-49세 연령대에서 14.3%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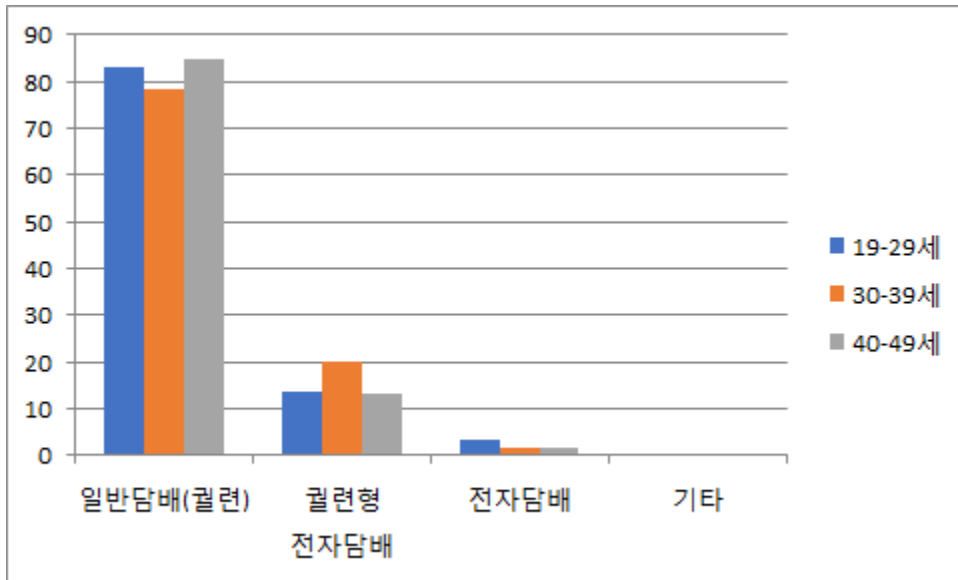
[그림 6] 현재흡연자의 담배제품별 사용현황(전체)



[그림 7] 현재흡연자의 담배제품별 사용현황(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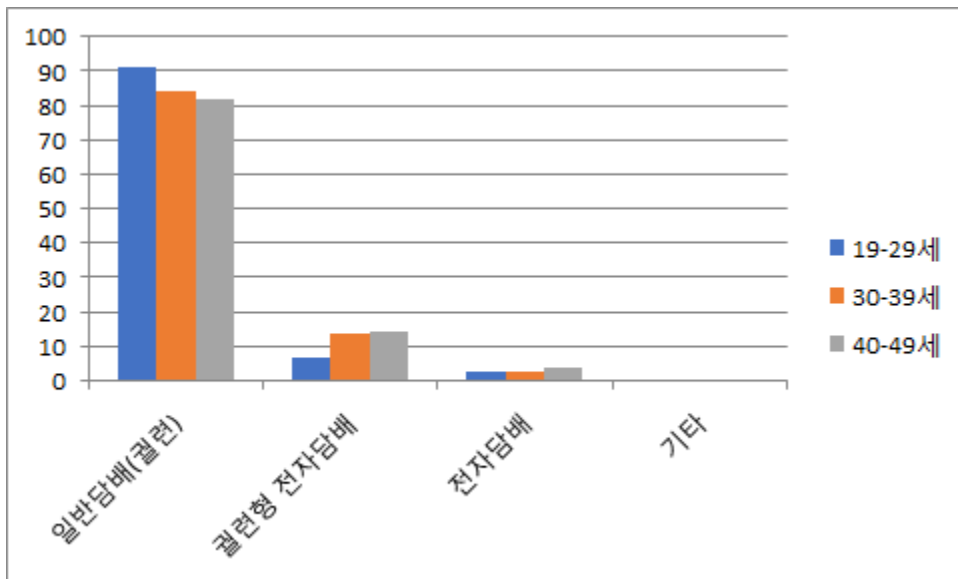
남자 흡연자

(단위: %)



여자 흡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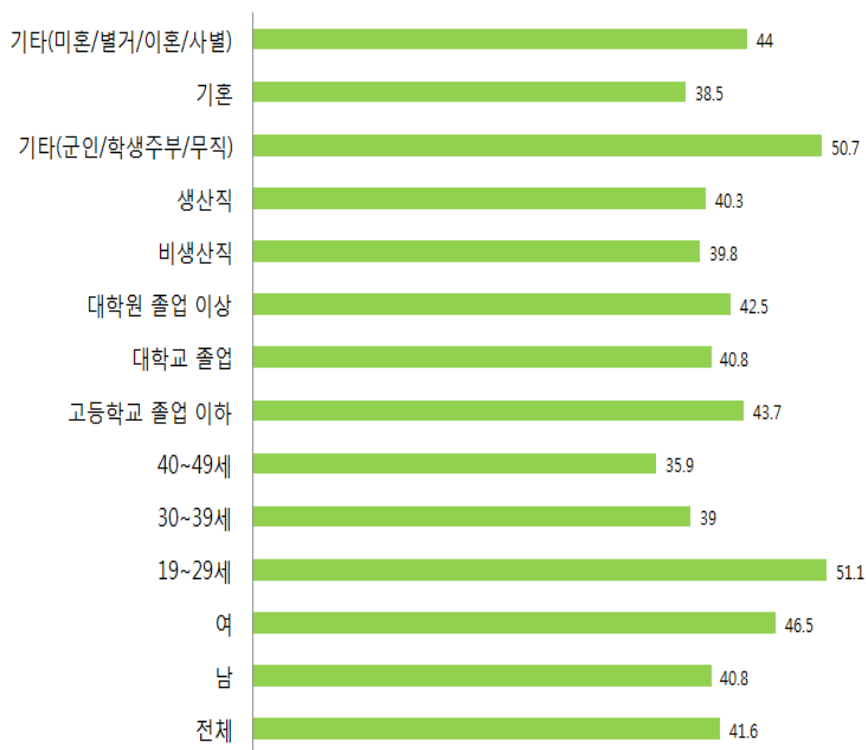
(단위: %)



10 담배 규제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 남자흡연자 중 일반담배(궐련) 사용자의 담배 니코틴 함량은 평균 0.29mg, 타르함량은 평균 3.12mg이었음. 여자흡연자중 일반담배(궐련) 사용자의 담배 니코틴 함량은 평균 0.28mg, 타르함량은 평균 3.13mg이었음.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용하는 담배제품의 타르함량이 적게 나타났음.
- 흡연자의 흡연시작연령은 남자 19.2세, 여자 19.9세였음. 하루 평균 흡연량은 일반담배(궐련) 12.5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13.8개비였음.
- 담배제품을 선택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에서 가향성분 60%, 디자인 15% 등이었고, 성별 비교시 여성에게서 가향성분 선호도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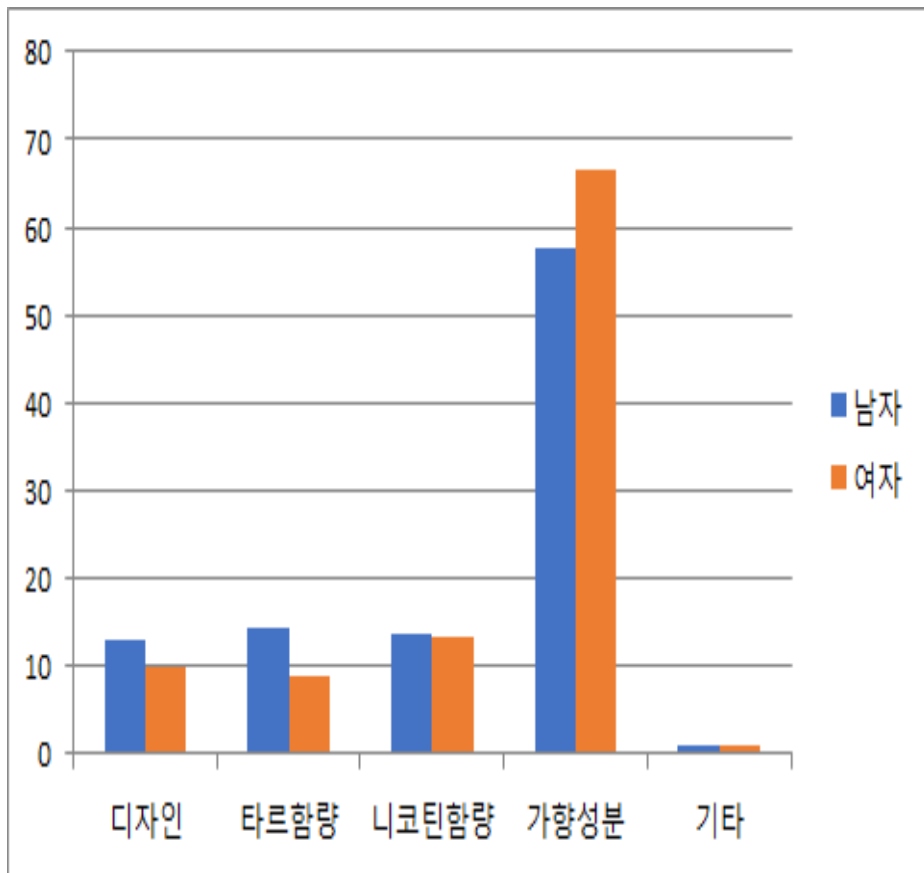
[그림 8] 가향담배사용자의 일반적 특성



- 흡연자의 담배선택요인은 가향성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음. 가향담배를 사용하는 지에 대한 질문항목에 대해서는 껴련사용자 40%, 껴련형 전자담배사용자 44.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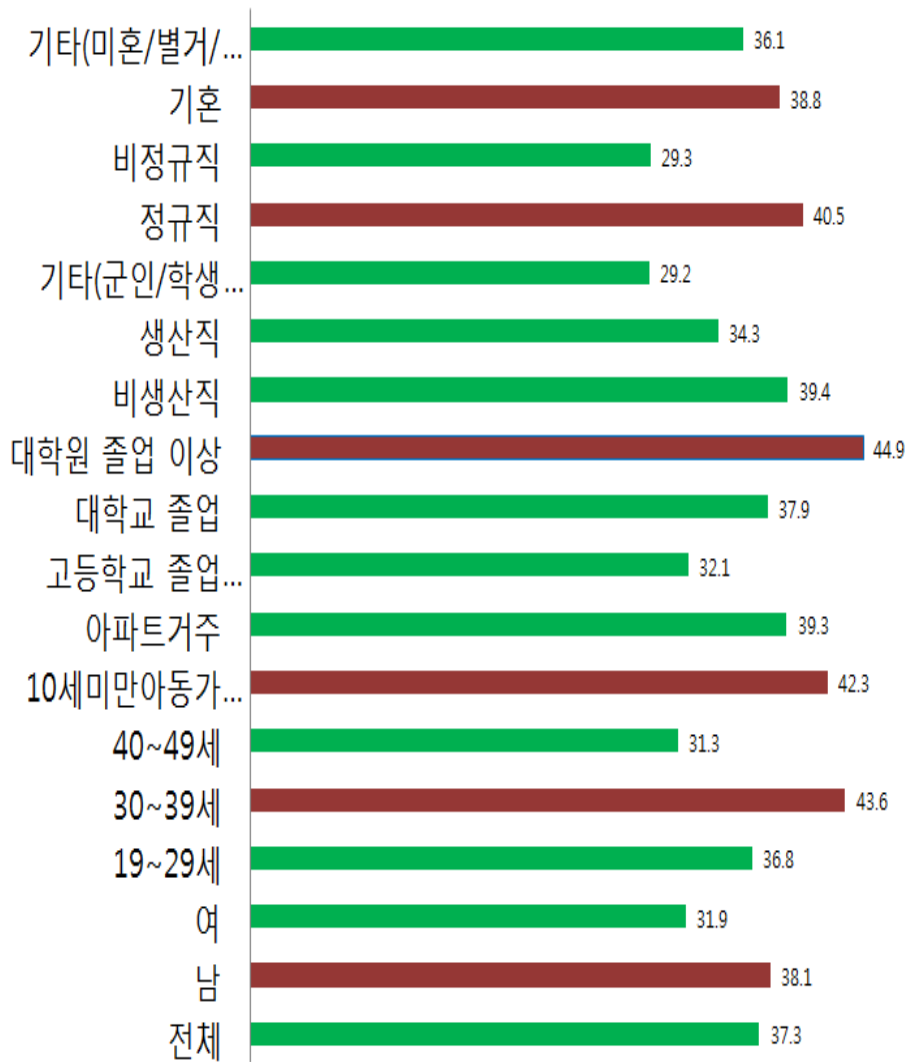
[그림 9] 흡연자의 담배선택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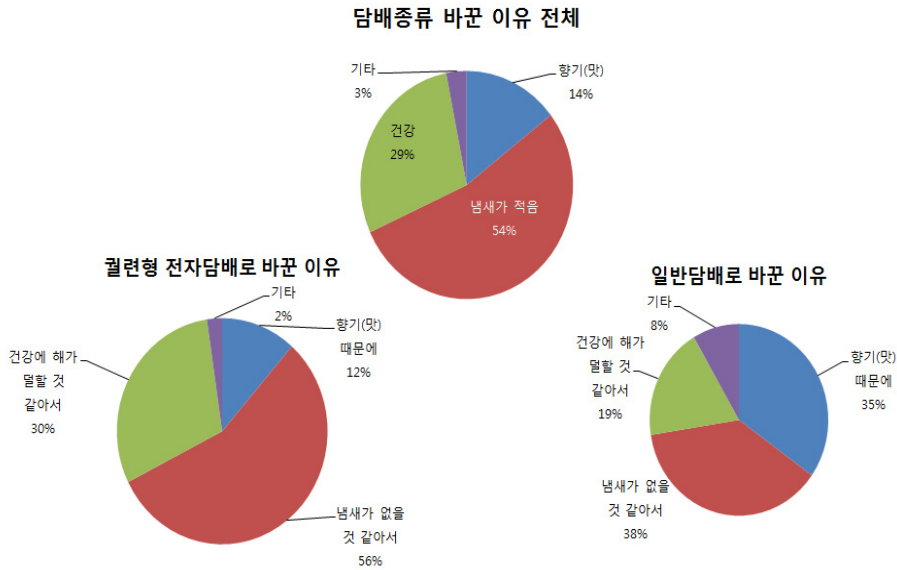


- 일반담배(껴련)에서 껴련형 전자담배로 브랜드스위치를 해본 경험률은 37%였고, 브랜드 스위치의 주된 이유는 냄새가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56%였음. 전자담배를 사용할 때 전자기기로 인한 손상경험은 7%였음.

[그림 10] 최근 1년간 일반담배에서 쉐련형 전자담배로 바꾼 경험자의 일반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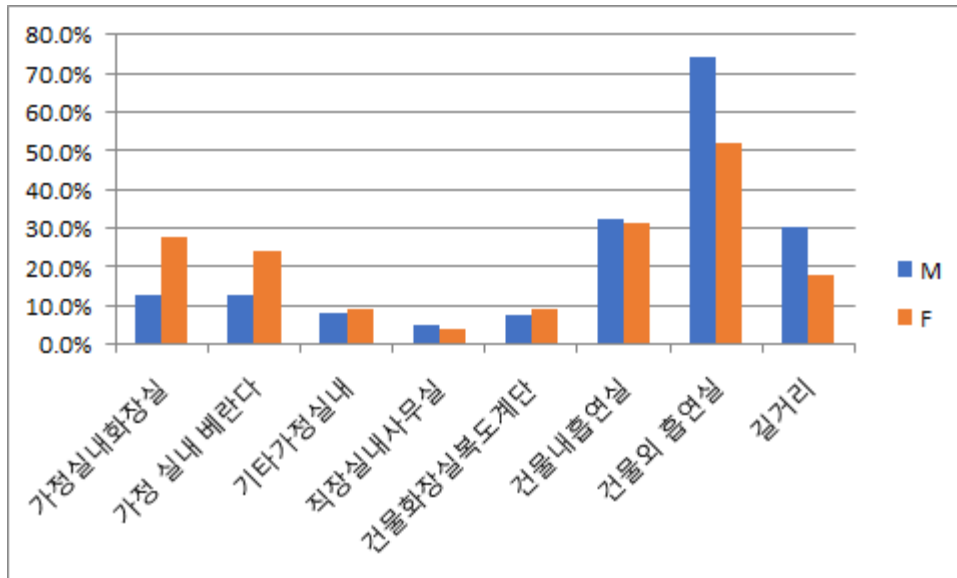


[그림 11] 최근 1년간 담배를 바꾼 이유에 응답 현황



- 주된 흡연장소는 건물 외 흡연장소 71%, 건물내 흡연실 32%, 길거리 28% 등이었음.
- 흡연자의 주된 흡연장소는 남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여성은 가정실내 화장실, 가정실내 베란다, 건물내 화장실, 복도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성은 건물외 흡연실, 길거리에서 피우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음.
- 흡연행동의 유형별로 간접흡연 경험장소를 보면 실외 길거리에서 가장 많았음. 그 외 간접흡연 경험장소는 아파트 계단, 복도, 베란다 등이 많았고, 직장 의 실내공간 등 많았음.

[그림 12] 흡연자의 주된 흡연장소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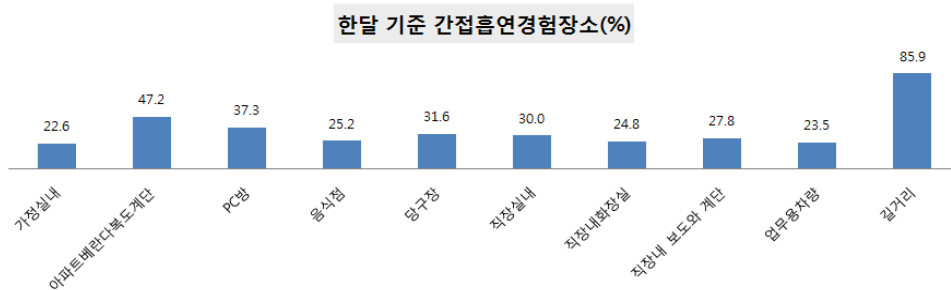


주: 1. 가정실내화장실 *** 2. 가정실내베란다*** 3. 기타 가정실내, 4. 직장실내사무실, 5. 건물화장실복도, 6. 건물내 흡연실, 7. 건물외 흡연실**, 8. 길거리***

○ 간접흡연 경험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간접흡연의 경험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10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정실내에서의 간접흡연경험이 낮았음.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가정실내에서 간접흡연경험율이 높게 나타났음.

○ 금연구역에서 과태료 부과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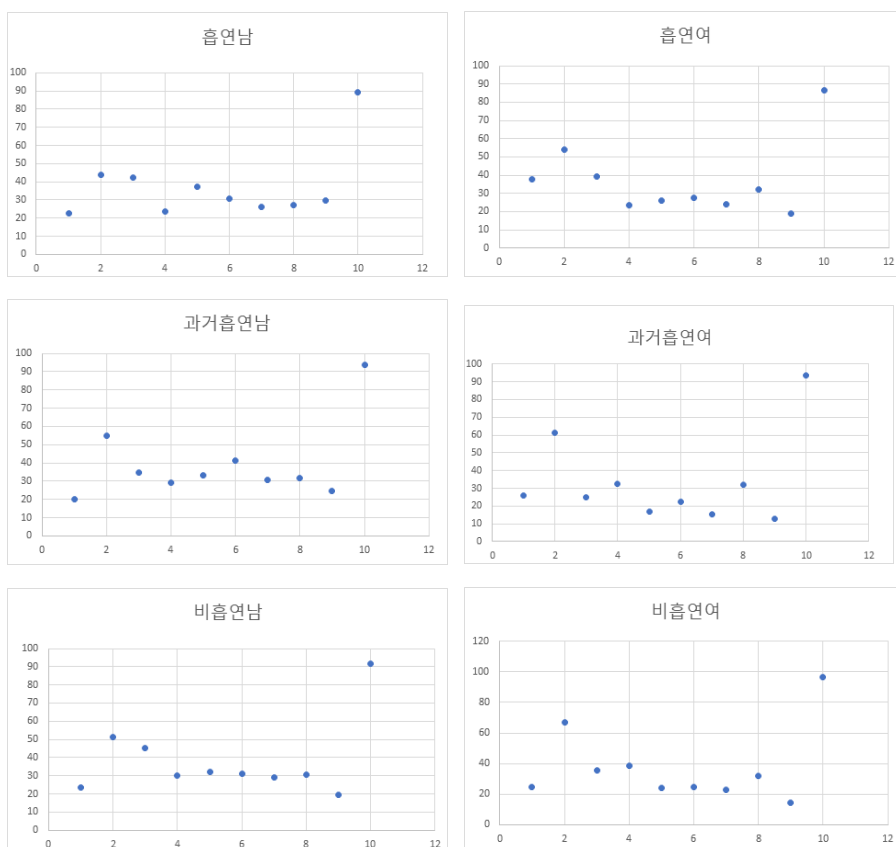
[그림 13] 간접흡연 경험장소(한 달 기준, 복수응답)



비교자료: KNHANES 2016 7월기준 간접흡연경험율 : 공공장소 22.3%, 직장 17.4, 가정 6.4%

[그림 14] 성별, 흡연여부별 간접흡연경험장소 (한달기준,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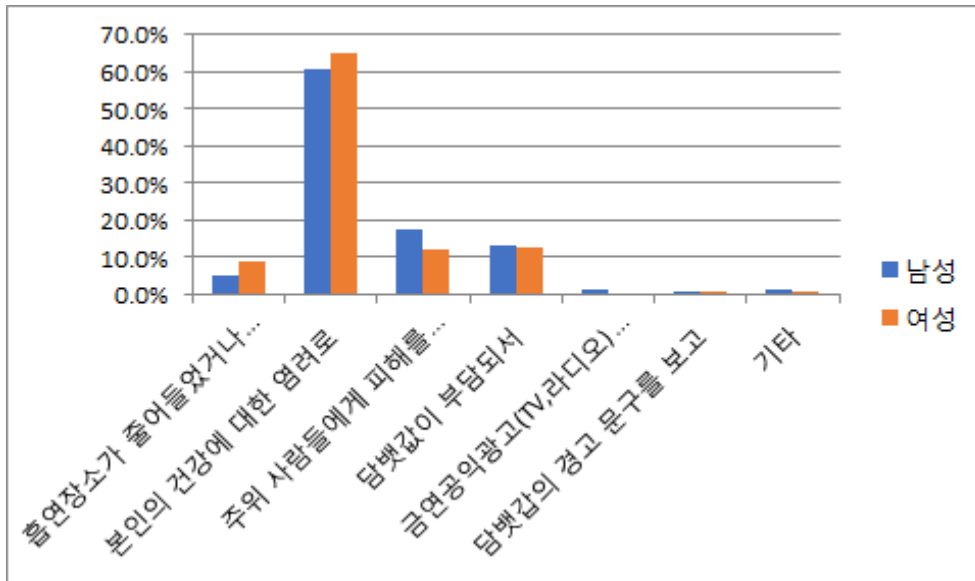
(단위: %)



주: 간접흡연 경험장소: 1. 가정 실내, 2. 아파트 베란다, 복도, 계단, 3. PC방, 4. 음식점, 5. 당구장, 6. 직장(사업장) 실내, 7. 직장 내 화장실, 8. 직장 내 복도와 계단, 9. 업무용 차량, 10. 길거리

- 흡연자의 66%는 흡연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해 보았음. 본격적인 금연시도 경험률은 46.4%였음. 금연하려는 주된 이유는 본인의 건강 61%, 주변인의 간접 흡연 우려 17% 등이었음.

[그림 15] 흡연자의 최근 금연시도 이유에 대한 성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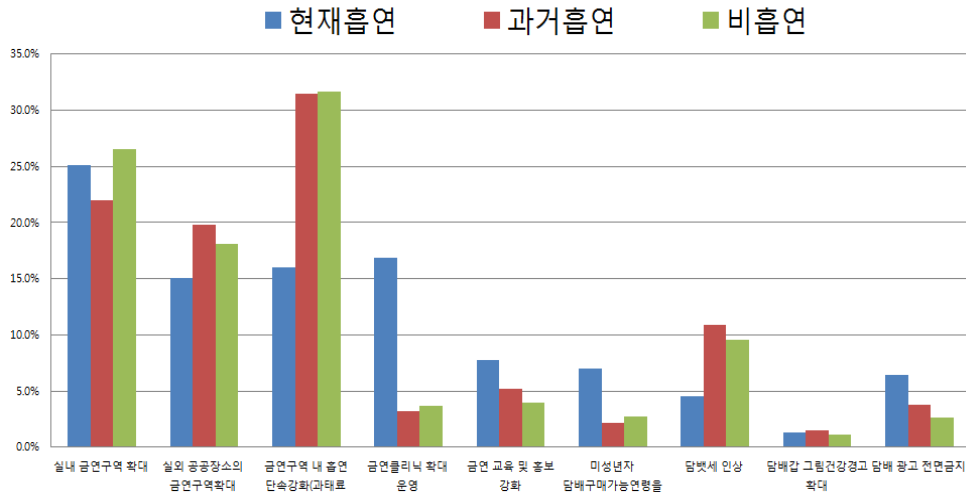


주: 금연시도의 이유=> 흡연장소가 줄어들었거나 없어서; 본인의 건강에 대한 염려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간접흡연); 담뱃값이 부담되서; 금연공익광고(TV,라디오); 담뱃갑의 경고문구를 보고; 기타

-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면세담배를 더 구매했다는 경험률은 41%였음.
- 편의점 가판대의 광고가 흡연욕구를 더 증가시킨다는 응답이 여성흡연자와 과거흡연자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진열된 담배에 대한 구매욕구는 여성 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음.
- 일반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담배규제정책은 금연구역내 흡연단속강화, 실내금연구역확대,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구역확대, 금연클리닉 확대운영, 담뱃세 인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남자 흡연자의 응답에서는 실내 금연구역확대와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확대운영이 필요도가 높았음.

[그림 16] 일반인이 인식하는 담배규제정책의 우선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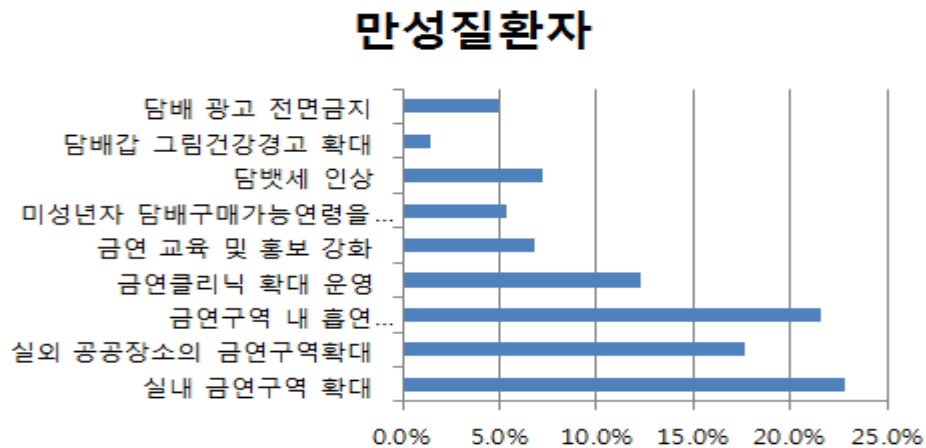


주: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 1. 실내 금연구역 확대, 2.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 3.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강화(과태료 인상), 4.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5. 금연교육 및 홍보강화, 6. 미성년자담배구매가능 연령지연, 7. 담뱃세 인상, 8. 담배갑 그림건강경고 확대, 9. 담배 광고 전면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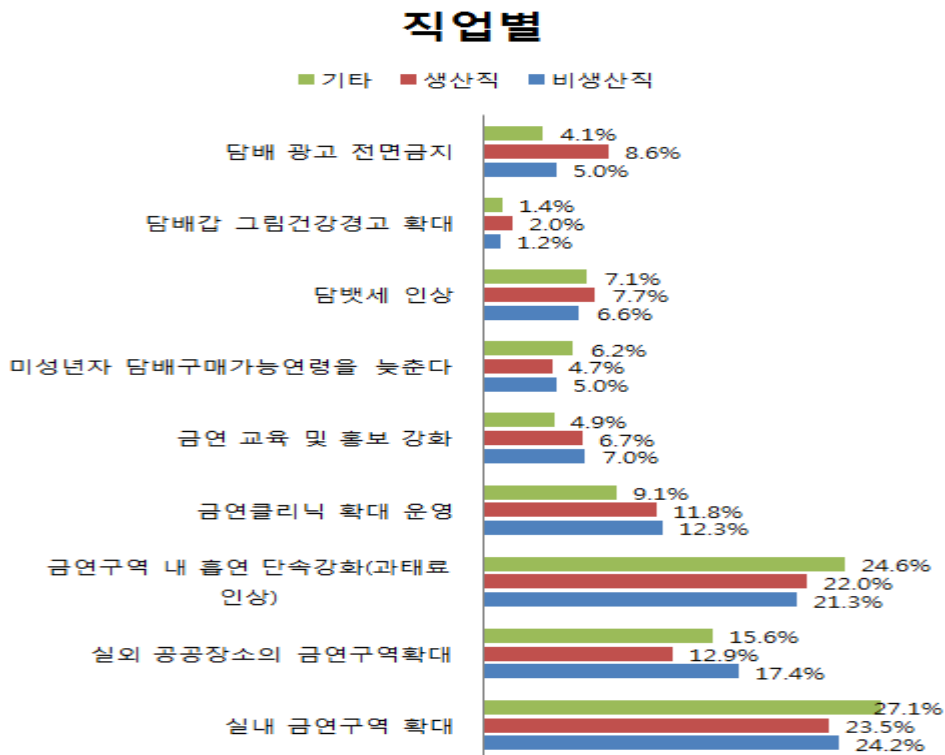
○ 담배규제정책 중 Plain packaging의 영향에 대한 설문항목에서는 비흡연자의 흡연예방효과에 대해서 42%가 영향이 클 것으로 인식하였음.

○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는 직업별, 만성질환유무별, 어린이동거가정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향후 정책추진시 대상인구집단의 건강취약상태, 직업상의 특성, 간접흡연경험을 고려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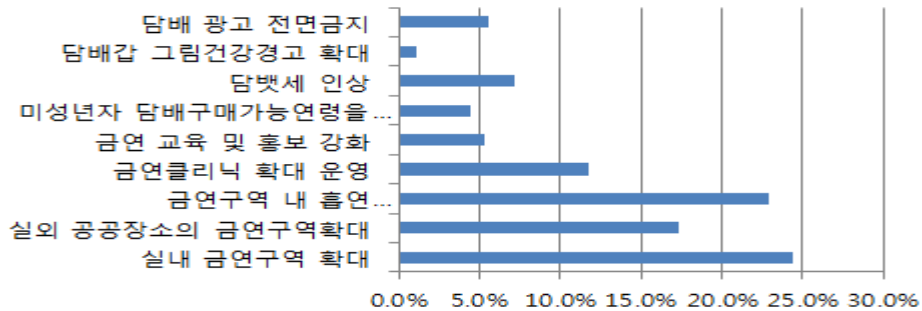
[그림 17] 건강취약 특성에 따른 담배규제정책의 우선순위



[그림 18] 사회적 특성에 따른 담배규제정책의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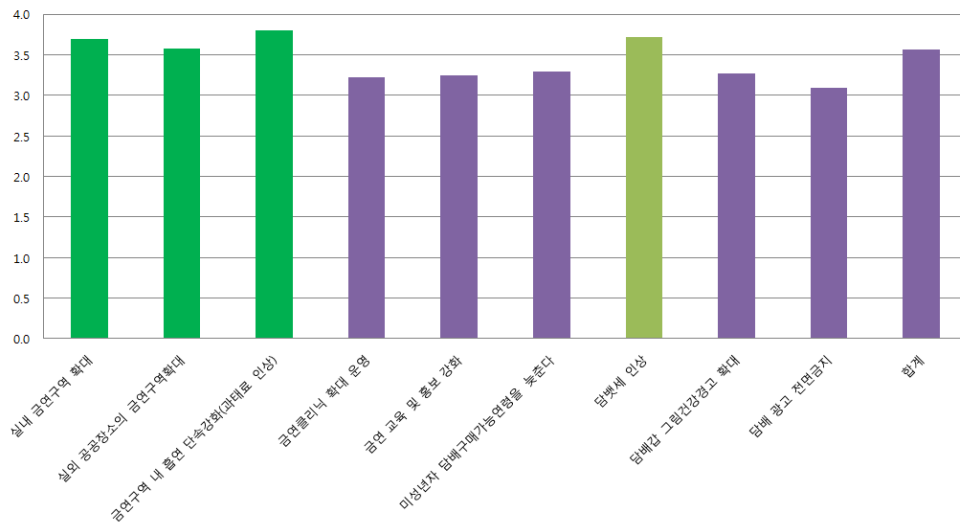
어린이동거가정



[그림 19] 담배규제정책별 응답자의 간접흡연경험빈도수

(단위: 월간 간접흡연경험 총 건수)

월간 간접흡연경험의 빈도중심 분석



5. 외국 담배관련 법제도 현황

- 담배의 정의 : 담배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통해 포괄하는 경향이 있음(EU, 미국, 캐나다). 신종담배를 포섭할 수 있음.
- 담배소매인지정제도: 상당수 거리기준을 두고 있고, 인구수를 고려하여 지정(이탈리아, 일본, 오스트리아, 미국, 중국 베이징시 등)
- 유해성분관리: 미국 FDA 시판전승인명령제도를 통해 담배회사로부터 담배제품의 포괄적인 정보를 제출받음. 제품조성 및 원료성분함량, 첨가제, 제형, 블랜딩방법, 발화율 분해율 등의 성능시험기준 등, 담배의 건강위험성 관련 모든 연구조사자료, 안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험실, 비임상, 임상자료 등
- 담배첨가물규제: 풍미증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주는 첨가물질에 대한 규제(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EU)
- 담배광고규제: 소매점 내 광고금지(호주, 영국, 프랑스(일부), 미국(일부), 아이슬란드, 태국, 홍콩, 칠레 등)

가. 호주

- 흡연 욕구를 낮추고자 2013년부터 담배갑의 포장을 단순화하는 ‘단순포장(Plain Packaging)법’ 시행하였으며,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고자 어린이가 동승할 경우 차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개인공간에서의 금연도입
- 호주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따라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나. 미국

- FCTC를 비준하지는 않았으나, 2009년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 제정으로 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유해성분 기준 설정, 담배제조 사전승인, 경고문 표시 및 광고 규제, 담배제품에 ‘mild, light’ 등 표시 금지,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하

는 가향담배(flavored cigarettes) 판매를 금지 등 포괄적인 담배관리 제도를 시행

- 흡연자 금연정책으로 청소년의 흡연개시율을 낮추고, 니코틴 의존성 치료에 메디케이드 보증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체 주정부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임
- 병원, 치과병원, 약물치료시설 등 보건시설에서의 담배차단장치를 점차 확대

다. 영국

- 표준화된 담배 포장을 도입하고, 향료 사용 금지, 담배 제품 광고 금지 등 FCTC 이행을 위한 여러 정책 시행
- 담배소비세를 인상하여 흡연을 억제하며, 금연헬프라인 운영으로 금연 지원

라. 프랑스

- 담배규제 방안으로 가격정책은 주로 「조세일반법전」, 비가격정책은 「공중보건법전」에서 규정
-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2001/37/CE 지침」과 「공중보건법전」을 근거로 하여 발표한 「2003년 3월 5일의 아레테」에서 담배제품의 성분 기준 설정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1년 12월 1일의 아레테」를 통해서 담배 제품의 생산에 사용한 모든 성분들과 그 양을 보건담당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마. 캐나다

-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담배규제법(Tobacco Control Act) 및 규정을 책임지고, 5개 지역별 보건당국은 주 정부 법 및 규정을 집행함

- 담배관리 방안으로 가격정책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담배세법(Tobacco Tax Act)」 및 담배세법 규정으로 책임관리하고 있고, 보건부가 비가격정책으로, 「담배법」, 「비흡연자 건강법」, 「비흡연자 건강 규정」 및 「담배제품 관리 규정」, 「담배제품 정보 규정」 등으로 관리

바. 일본

- 재무성에서 「담배세법」, 「담배사업법」, 「일본담배주식회사법」, 「담배경작조합법」 등으로 제조허가, 광고, 경고문구 등 담배관련 총괄업무를 담당함.
- 후생노동성의 「건강증진법」을 통한 간접흡연 방지와 경제산업성의 「미성년자 껌연방지법」에 의한 친권자처벌 조항처럼 부모에게 자녀들의 흡연에 대해 책임을 지워 가정에서의 철저한 금연지도를 유도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및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음.

〈표 1〉 국외 법제도 요약

추진정책명	추진내용	국외 사례
담배가격	담배세금 인상	캐나다: TVPA(2018, S.C.1997, c.13) - Customs Act, 관세법 [R.S.C.,1985, c.1(2nd Supp.)]
		프랑스: Code général des impôts, 조세일반법전(Article 572)
		일본: 담배세법(1984), 담배사업법(1984), 담배 지방세 부과에 관한 기본법(1950), 소비세법(1988) - たばこ税法, 담배세법(1984) - たばこ事業法, 담배사업법(1984) - 담배 지방세 부과에 관한 기본법(1950) - 소비세법(1988)
		호주: 소비세법, 관세법
금연구역정책	담배연기로부터 보호(금연구역 지정) 및 분연정책	캐나다: TVPA(2018, S.C.1997, c.13) - Non-smokers' Health Act [R.S.C., 1985, c. 15 (4th Supp.)]
		프랑스: Code de la santé publique, 공중보건법전(2000) - 우리의 건강시스템의 현대화에 대한 법률안, LOI n° 2016-41 du 26 janvier 2016 de modernisation de notre système de santé)
		일본: 건강증진법(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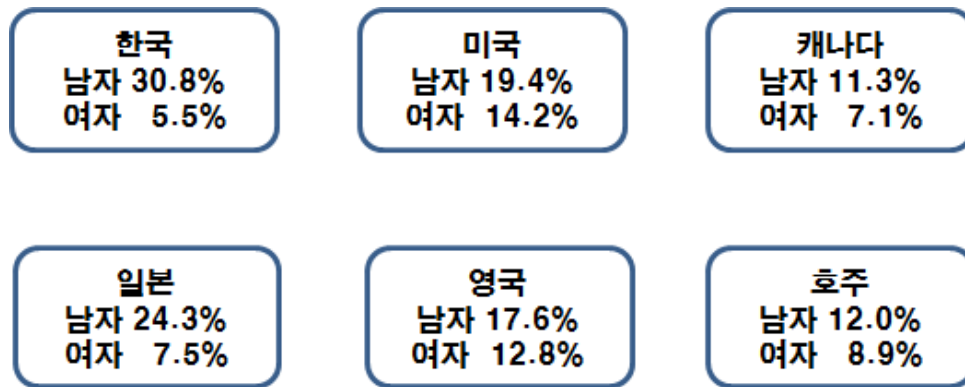
추진정책명	추진내용	국외 사례
		호주: 실내공공장소 흡연금지(2000)
		영국: Smoke-free(Private Vehicles) Regulations 2015 자동차 내에서 흡연금지
담배갑 건강경고	흡연의 위험에 대한 경고(경고그림, 그림, 금연홍보)	캐나다: TVPA(2018, S.C.1997, c.13) - Tobacco Products Labelling Regulations (Cigarettes and Little Cigars) [SOR/2011-177]
		프랑스: Code de la santé publique, 공중보건법전(2000) - 우리의 건강시스템의 현대화에 대한 법률안, LOI n° 2016-41 du 26 janvier 2016 de modernisation de notre système de santé)
		일본: 담배사업법(1984), 건강증진법(2002)
		호주: 담배제품에 그림경고 75% 이상, Plain Packaging(2011)
담배광고판축후원규제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	캐나다: TVPA(2018, S.C.1997, c.13)
		프랑스: Code de la santé publique, 공중보건법전(2000) - 우리의 건강시스템의 현대화에 대한 법률안, LOI n° 2016-41 du 26 janvier 2016 de modernisation de notre système de santé)
		일본: 담배사업법(1984), 건강증진법(2002)
		영국: 문화스포츠행사에 담배회사 후원금지(2002)
금연교육홍보(흡연예방교육 등)	금연지원서비스 제공(금연상담)	캐나다: TVPA(2018, S.C.1997, c.13) - Non-smokers' Health Act [R.S.C., 1985, c. 15 (4th Supp.)]
		프랑스: Code de la santé publique, 공중보건법전(2000) - 우리의 건강시스템의 현대화에 대한 법률안, LOI n° 2016-41 du 26 janvier 2016 de modernisation de notre système de santé)
		일본: 건강증진법(2002)
흡연자치료지원 정책	금연지원서비스 제공(금연상담)	캐나다: TVPA(2018, S.C.1997, c.13) - Non-smokers' Health Act [R.S.C., 1985, c. 15 (4th Supp.)]
		프랑스: Code de la santé publique, 공중보건법전(2000) - 우리의 건강시스템의 현대화에 대한 법률안, LOI n° 2016-41 du 26 janvier 2016 de modernisation de notre système de santé)
		일본: 건강증진법(2002)
환경보호(17, 18조)	환경 유해물질 발생 저감	프랑스: Code de la santé publique, 공중보건법전(2000) - 우리의 건강시스템의 현대화에 대한 법률안, LOI n° 2016-41 du 26 janvier 2016 de modernisation de notre système de santé)
		일본: 직장공기환경기준 - 사무소위생기준규칙(1972년 노동성령 제43호)
미성년자 보호정책	아동청소년 및 미성년자 보호	캐나다: TVPA(2018, S.C.1997, c.13) - Tobacco(Access) Regulations (SOR/99-93)

추진정책명	추진내용	국외 사례
		프랑스: Code de la santé publique, 공중보건법전(2000) - LAW No. 2003-715 of July 31, 2003 to Restrict Tobacco Use Among Youth
		일본: 건강증진법(2002) - 미성년자흡연방지법(1900)

6. 국제기구의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 세계보건기구에서 예측한 바 있는 2025년 흡연율은 선진국 중에서는 캐나다의 흡연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됨. 담배규제정책이 강화된 국가일수록 흡연율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0] 2025년 국가별 흡연율(15세이상) 예측통계



주: WHO Global report on trends in prevalence of tobacco smoking 2000-2025-Second edition.

- 세계보건기구의 만성질환(Non Communicable Disease)전략 정책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WHO. Global Status Report on noncommunicable diseases 2010: Description of the global burden of NCDs, their risk factors and determinants)
 - 만성질환예방 관련 공통적인 위험요인은 담배사용, 위험음주, 불건강한 다이어트, 신체활동부족, B형간염백신접종 등임.

- 담배 위험요인감소를 위한 핵심 개입전략으로는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 (금연구역), 담배의 유해성 경고, 담배제품의 광고금지, 담뱃세인상 등 네 가지임.

○ 세계보건기구의 Tobacco Free Initiative에서는 담배규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보급하고 있음.

- 수요감소와 관련된 핵심적인 개입전략은 MPOWER의 여섯 가지로 요약됨. (모니터링,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 금연치료지원서비스, 건강경고, 담배 광고금지, 담뱃세인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에서 건강과 웰빙분야(3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로서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이 포함되어 있음. 핵심적인 이행분야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 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에서는 영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2030년까지 15 개 개발도상국 당사국의 협약이행을 지원하게 됨.

○ 2018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제8차)가 개최되었음. 협약 당사국 181개국 중 148개국이 참여하였음.

- Medium-Term Strategic Framework이 승인되어 2019~2025년까지 세계적인 차원에서 담배규제를 강화하는 전략이 마련되었음. 주요 내용은 담배규제정책추진에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것,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 확보, 국가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을 확보하고 다부분간의 협력적인 노력 증진 등이 포함됨(WHO COP8 provisional item 7.1).
- 2005년 이래로 담배에 대한 접근성 감소와 담배제품의 판촉을 제한하는 정책적 성과를 확인하였음. 협약 제5.3조와 관련하여 공중보건정책을 담배산업의 투자전략으로부터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함.
- 담배경작자의 업종전환 지원은 사안으로 보면 중요성이 작을 수 있으나 FCTC 이행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미진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함.

○ 담배제품의 불법거래근절에 관한 의정서

- FCTC의 부속규약인 담배제품의 불법거래근절에 관한 의정서가 2018년 9월 25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10월 제8차 당사국총회후에 의정서의 제1차 당사국회의(48개 당사국)가 개최되었음. 이 회의에서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하였고 불법거래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관련 정보와 의사소통을 할 것임. 차기 당사국회의는 제9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되는 시기에 맞추어 진행할 예정임.

7. 결론 및 정책제언

가. 세계보건기구 FCTC 협약이행을 위한 추진 과제

조항	주요 내용	이행과제	본 연구의 조사분석 결론
5.3조	담배업계로부터 공중보건정책의 보호	다부문적인 종합적인 전략과 계획마련/ 인프라 강화	- 금연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함.(담배광고전면규제, 금연구역확대 등을 위한 조치)
6조	담배 가격 및 조세정책	담뱃세 인상과 면세담배 축소/ 신종담배 과세에 대한 지속적 관리	- 담배선평도의 변화가 흡연율감소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신종담배규제 강화 필요. - 담배가격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함. - 면세담배로 구매하는 비율증가우려로 구매범위를 축소해야 함.
8조	담배연기노출로부터 보호	전면적인 완전한 보호	-실내 전면 금연구역화,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대책 강화 -실외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흡연자 대상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의 사회적 규범화 증진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함.
9조와 10조	담배제품성분 규제/담배제품 공개 정책	담배성분과 배출물을 측정하고 정보를 공개함/ 가향성분규제	-연령 증가, 학력 증가에 따라 사용담배의 니코틴, 타르함량이 감소하므로 건강효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교육홍보와 성분규제 필요.
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오도성 문구 금지, 그림경고는 주요 표시면의 50%이상	-포장 및 라벨규제로 담배광고효과를 감소시키고, 흡연예방효과를 증대시켜야 함.
13조	담배의 광고판촉후원금지	포괄적인 금지(편의점 담배진열대 규제, 광고금지 등)	-편의점 담배진열, 담배광고는 청소년, 금연 중인 과거흡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

조항	주요 내용	이행과제	본 연구의 조사분석 결론
14조	담배의존에 대한 금연치료	금연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효과성 있는 금연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함(행동요법, 니코틴대체요법).
16조	미성년자 담배구매 및 판매금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접근성금지	-미성년자,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편의점 담배 광고금지, 가향담배 규제 등 필요함.
17조	담배 재배농가의 대체, 전환정책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담배 재배 대체정책 추진/ 담배산업종사자, 노동자, 담배경작자 보호	-담배경작자의 전환 지원필요에 긍정적임. -담배제조와 생산을 친환경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흡연자집단에서 높음. 담배산업의 환경유해성에 대한 인식개선교육홍보 필요.
18조	담배농업과 제조 관련 환경보호와 보건		

주: 전문가조사결과와 일반인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하였고,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음.

자료: WHO FCTC (2016) Global Progress Report.

김대진, 권경희 (2015) 미국 담배제품 규제 현황 및 고찰.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3호. 131-149

유현재 등 (2015) 담배회사 CSR 활동 및 간접 마케팅의 사례분석과 대중적 효과분석연구. 서강대학교, 보건복지부

임민경, 조홍준 (2018) 세계 담배규제정책의 흐름과 한국의 현황 대한의사협회지. 3월호 61(3) 148-156.

정재도 (2015) 담배제품 규제입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연구 15(4); 1221-1264.

최성은 (2015) 전자담배 관리방안 및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건복지부.

나. 담배규제정책의 사각지대

1) 담배제품의 선호도 변화

○ 일반담배를 소비하다가 쉼련형 전자담배로 바꾸는 주된 이유에는 건강에 해가 적을 것 같다는 잘못된 인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가향담배는 학생 같은 어린 연령층에 더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확인되었음. 가향담배를 비롯한 다양한 담배제품의 성분과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은 국민의 인식과 선택을 개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일반담배를 피우다가 최근 1년간 쉼련형 전자담배로 바꾸었다는 경험은 남성에서 많았고, 연령대는 30대에서 많았음. 10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사는 사람에서 더 많았고, 기혼자일수록 쉼련형 전자담배로 바꾼 비율이 높았음. 학력별로는 대학원졸업이상에서 쉼련형 전자담배로 바꾼 비율이 높았음.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에서 더 많았음. 쉼련형 전자담배로 바꾼 이유는 냄새

(56%), 건강(30%), 향기, 맛(12%) 등이었음.

- 가향담배의 사용은 성별로는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하고, 연령대로는 20대에서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직업별로는 기타(군인, 학생, 주부, 무직 등)에서 많이 사용하였음. 학력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하이거나 대학원졸업이상에서 더 많은 경향을 보였음. 미혼의 젊은 여성층에서 더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향후 여성건강보호정책강화에 반영해야 할 것임.

2) 생활속 직간접 담배광고

- 편의점 담배광고와 담배제품진열은 청소년의 흡연과 구매욕구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음(황지은 등, 2018). 즉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담배회사의 마케팅이 청소년에 집중한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음.
 - 유현재 등(2017)의 연구에서는 흡연청소년의 흡연욕구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청소년의 담배구매욕구를 증가시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유현재 등(2015)의 담배회사 CSR연구 FGI에서도 편의점 담배제품진열이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길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성인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응답되었음.
- 2018년 연구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에서는 흡연욕구증가경험이 신제품 고시때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음. 새로운 담배제품의 고시방식이 비흡연성인에게도 흡연의 욕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성인의 경우는 과거흡연자, 즉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더 흡연욕구를 유발시키는 영향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즉 편의점 담배제품진열과 담배광고는 흡연자의 금연을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3) 담배가격

- 담배가격은 담배에 대한 접근성 감소와 관련 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관련이 있음(강은정 등, 2009). 2005년 담뱃세인상, 2015년 담뱃세 인상은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담배값 인상의 폭이 컸던 2015년의 효과는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고, 남자흡연을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건강불평등을 개선하는데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음(장영수, 2018).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수행한 대국민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는 담배가격인상, 금연교육홍보강화, 금연구역확대,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담뱃갑 경고그림도입, 담배광고진열금지 등의 순서로 인식되고 있었고, 담뱃값 인상의 재원활용방안으로는 흡연자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캠페인교육 외에 기타 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이선영, 황지은, 2015)

4) 흡연장소

- 실내 금연구역에 있는 흡연실은 간접흡연보호의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실외 금연구역 내에 있는 흡연장소는 금연문화를 규범화하고 정착시키려는 사회정책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 FCTC 제8조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권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적발만 하는 단속업무가 강력해질수록 흡연자의 반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빌딩 밀집지역 회사원의 금연을 독려해야 하는 사업주 측의 관심과 협조 부족으로 흡연자를 계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개인 사유지에 길거리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협조받기 어려움.
- 흡연자는 담배산업활동의 희생자이며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 건강불평등 정책의 대상임.
 - 실내금연구역관리를 위해 과태료부과를 하는 대신 적극적인 금연순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니코틴패치 보급과 금연서비스 지원)

- 흡연자를 위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가 필요함.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흡연자들에게 패치를 제공해주며 행동요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결과적으로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실 설치에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지자체의 건강증진담당인력과 주민,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임. 지역별로 흡연실 설치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해야 함.

다. 담배규제의 성과향상을 위한 이행과제

- 그동안 담뱃세 인상, 담배갑 그림경고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 성과와 흡연율감소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선진국의 흡연율통계에 비하여 우리나라 남자 흡연율감소가 답보상태라는 점에서 국내 정책의 통합적 점검과 협력적 추진이 필요함.
- 개인의 인식과 행태변화를 지원하는 노력 외에 담배회사의 활동을 규제하는 모든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특히 편의점 담배광고, 담배 진열 등을 없애야 함.
- 간접흡연은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어 건강을 위협함. 국가적으로는 대기오염 원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내오염원으로서 미세먼지관리정책도 강화되어야 함.
- 실외 공공장소에서 건강취약 인구집단을 포함한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확대가 필요함.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지도관리와 금연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간접흡연 경험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생산이 필요함. 인구집단의 특성에 따라 간접흡연경험자를 세분화하고 주거공간과 모든 공공장소에서 경험하는 통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인구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간접흡연의 경험 비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건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반영하여야 함.

○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근거를 생산하는 것도 필요함. 기존의 역학적인 연구 혹은 정책 연구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담배산업과 정책결정을 둘러싼 이해관계, 정책과정, 정책결정가 및 일반국민들의 담배규제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및 변화, 담배산업 마케팅 전략 분석과 파급효과, 담배규제 정책변화에 따른 담배산업의 대응 전략 모니터링, 미디어의 담배 및 담배규제정책 관련 보도에 관한 프레임 연구 등 다방면에서 근거를 생산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용어: 담배규제, FCTC, 결련형 전자담배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흡연은 폐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및 다른 각종 암 등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다. 평균적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7년 정도 수명이 짧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임신 중 흡연은 유산, 조산, 사산의 위험을 높이고, 태아가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을 높인다(Mackay, J & Eriksen, 2002). 청소년기의 흡연은 호흡기계의 문제와 폐의 발육을 저해하고, 성인기의 흡연으로 이어져서 폐암과 같은 보다 심각한 건강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중독과 관련이 되어 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청소년 흡연행동은 정서적 심리적 문제, 음주문제 및 폭력,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등 여러 위험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¹⁾

전세계적으로는 2030년까지 매년 약 5백만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저소득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1천만 명 이상으로 이 국가들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담배세 인상과 흡연의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 확산, 공공장소 및 작업장에서의 금연, 담배 판촉과 광고의 포괄적 금지, 금연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대 등이 모두 담배사용을 감소시키고 흡연의 폐해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흡연문제에 대하여 전 지구적 조망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는 담배생산국의 대부분이 선진국인 반면 담배소비국은 대부분 저소득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이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가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어린 아동과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에 의하면 담배소비의 감소를 위해서는 흡연과 간접흡연의 유해성, 담배로 인한 경제, 보건측면의 부정적 영향과 금연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일

1) http://www.who.int/tobacco/research/youth/health_effects/en/index.html

반인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보건관계자, 대중매체전문가, 정책결정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이후 금연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²⁾을 비준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하여 금연구역확대, 담뱃세 인상, 담배갑 건강경고문 및 경고그림 도입, 담배광고판축규제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담배사용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정책이 확대되어 왔다.

2030년까지 유엔 지속가능개발계획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하여 17개의 분야별 정책목표(Goals)가 개발된 바 있다. 건강정책목표(Goal 3)는 9가지 세부 목표가 있고,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도구로 FCTC의 실행이 권고되고 있다. 또한 9가지 건강정책목표 중 세 번째 목표는 정신건강 증진과 비감염성질병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1/3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오충현, 2015).

FCTC의 담배규제정책내용은 담배수요 감소정책과 담배공급 감소 정책으로 크게 구분된다. 담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은 다시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으로 구분된다. 가격정책은 담배에 대한 조세정책과 면세담배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비가격정책은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 담배제품의 내용과 성분공개 정책,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규제정책, 담배광고 판촉 후원규제, 담배의 존치료정책, 일반인대상 교육 등이 포함된다. 담배제품의 공급감소정책은 불법거래방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담배재배에 대한 대체활동지원 등이 포함된다. FCTC에서는 담배의 생산, 운송, 수령, 소지, 유통판매, 구매 등을 규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무허가로 담배를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인터넷판매 등을 금지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한다. FCTC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권고되는 정책은 MPOWER로 표현된다. 담배사용과 예방정책의 모니터링(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담배연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Protect people

2) 비준국 181개국. <http://www.who.int/fctc/cop/en/> 207. 9. 4. 인출

from tobacco smoke), 담배사용을 중단하도록 도움 제공(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담배광고와 판촉과 후원을 금지하는 입법추진(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담뱃세 인상(Raise taxes on tobacco) 등이다.³⁾

우리나라의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에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최근 쉐련형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가 출시되면서 담배규제정책은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및 식약청 등에서 관련된 입장을 내고 있으나 명확한 규제방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⁴⁾

본 연구의 목적은 담배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담배규제정책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FCTC를 중심으로 국내 담배규제정책의 추진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FCTC기반의 담배규제정책을 중심으로 국내 현안을 고찰하고, 국외 법제도를 분석하며, 전문가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담배 규제에 대한 국제적 근거와 이론적 고찰

-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및 프로토콜 고찰
- 주요 국가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반영 현황 분석
- 담배세법과 담배규제법을 각각 분류중인 해외 사례 조사

○ 담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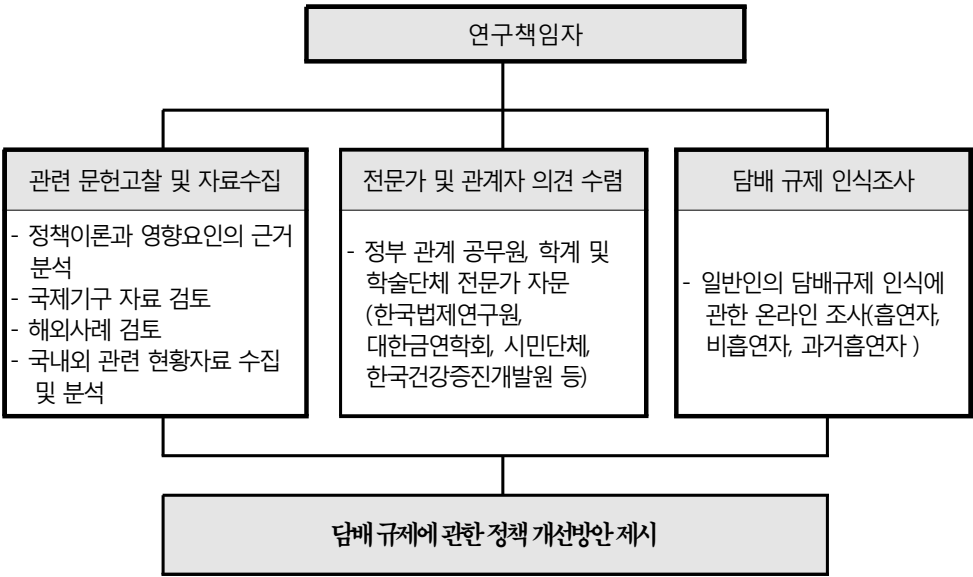
- 담배규제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서면자문)

3) 세계보건기구 Tobacco Free Initiative의 2011년 책자 MPOWER 참조
<http://www.who.int/tobacco/publications/year/en/>

4) 김재진, 담배산업관리체계 적정화 방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12

- 일반인(담배사용자, 비사용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전체 5,280명, 흡연자 3,221명, 과거흡연자 1,171명, 비흡연자 888명

[그림 1-1] 연구체계도



〈표 1-1〉 연구추진 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4	5	6	7	8	9	10	11	
국내 담배규제와 관련된 현황 분석									
담배규제에 대한 국제적 근거와 이론적 고찰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담배제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일반인 온라인인식조사)									
담배의 효율적 규제관리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제시									
최종보고서 작성									
추진진도 (%)	20	30	40	50	60	80	90	100	

제 2 장

세계보건기구 FCTC의 국내 이행 현황 고찰

제1절 세계보건기구 FCTC의 주요 정책내용

제2절 국내 담배규제 정책의 동향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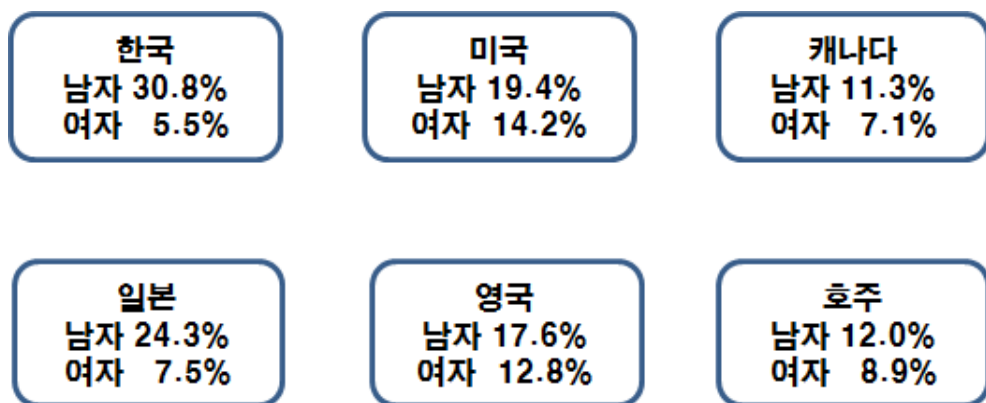
세계보건기구 FCTC의 국내 이행 << 현황 고찰

제1절 세계보건기구 FCTC의 주요 정책내용

세계보건기구 FCTC를 비준한 국가는 181개 당사국이 있고, 전세계인구의 90% 포괄한다. 담배제품의 불법거래근절의정서에는 48개 당사국(프랑스, 독일, 영국, EU 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예측한 바 있는 2025년 흡연율은 선진국 중에서는 캐나다의 흡연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규제정책이 강화된 국가일수록 흡연율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1 참조).

세계보건기구 FCTC는 담배의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이 있다. 수요 감소를 위한 비가격정책에는 담배연기 노출로부터의 보호, 담배제품 내용물의 규제와 공개, 담배제품포장 및 라벨규제, 교육 및 의사소통, 훈련, 담배의 광고와 판촉과 후원, 담배의존 및 금연관련 수요감소 정책 등이 있다.

[그림 2-1] 2025년 국가별 흡연율(15세이상) 예측통계



주: WHO Global report on trends in prevalence of tobacco smoking 2000-2025-Second edition.

담배의 공급감소 정책에는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 청소년담배판매와 구매금지, 담배경작의 대체활동 지원 등이 있다. 2018년 9월부터 국제적 의정서로 발효된 불법 거래근절 의정서는 담배의 허가제도, 추적제도, 보안 및 예방조치,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운송의 정책, 면세판매 규제, 정보보안 및 공유정책, 국제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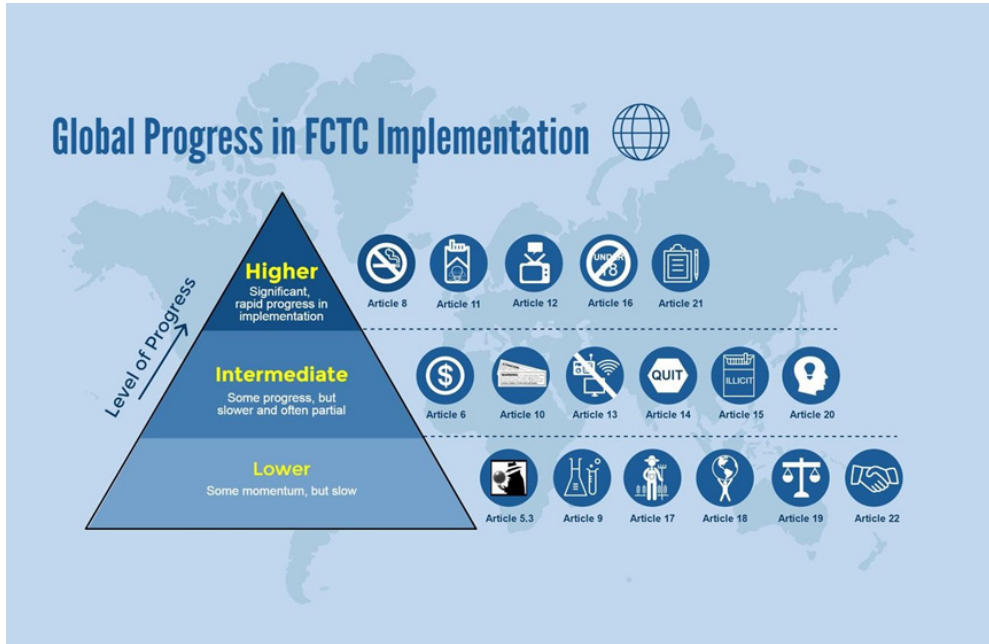
〈표 2-1〉 세계보건기구 FCTC의 주요 조항과 부속서의 개요

FCTC 조항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 및 부속서
5.3조	담배업계로부터 공중보건정책의 보호	◎
6조	담배 가격 및 조세정책	◎
8조	담배연기노출로부터 보호	◎
9조	담배제품성분 규제	◎부분
10조	담배제품 공개 정책	
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
12조	일반인 인식과 교육, 의사소통, 훈련	◎
13조	담배의 광고판촉후원금지	◎
14조	담배의존에 대한 금연치료	◎
15조	불법적인 담배제품거래의 근절	의정서(2018년 9월 25일발효)
16조	미성년자 담배구매 및 판매금지	
17조	담배 재배농가의 대체, 전환정책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담배 재배 대체정책 권고사항 (2014년 승인)
18조	담배농업과 제조 관련 환경보호와 보건	
19조	담배규제관련 민형사상 책임	
20조	연구, 감시체계, 정보교환	
21조	보고 및 정보교환	
22조	국제협력	

자료: https://www.who.int/fctc/treaty_instruments/en/

세계보건기구 FCTC의 비준국의 정책에서 이행수준이 높은 조항은 금연구역 지정, 담배의 라벨규제, 일반인인식과 교육훈련, 미성년자 담배판매구매금지 등이었다. 상대적으로 담배 가격인상정책, 담배의 정보공개, 금연지원, 담배의 불법거래근절 등은 중간정도로 이행하는 수준이었다(Chung-Hall et al., 2018).

[그림 2-2] WHO FCTC의 주요 조항별 이행 동향



자료: Chung-Hall J, Craig L, Gravely S., Sansone N, Fong(2018) Impact of the WHO FCTC over the first decade: a global evidence review prepared for the impact assessment expert group. Tobacco Control, 1-10; doi:10.1136/tobacco control-2018-054389.

WHO FCTC의 담배불법거래의정서는 2012년 11월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서울)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지난 2018년 9월 국제적 협약으로 발효되었다. 의정서의 목적은 모든 유형의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에 있다. 이 의정서는 FCTC 협약 제15조를 기반으로 하여 당사국이 담배제품의 불법거래근절을 위해 허가제도, 판매지역표시제도, 생산과 유통 통제제도 강화조치를 채택, 시행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의정서의 구조는 총 10장 47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배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제1장(1-3) 도입: 주요 용어의 정의(불법거래, 궤련, 압수, 제한적 인도, 제조장비 증에 대한 정의)
- 제2장(4-5) 일반적 의무: 불법거래 방지를 위하여 공급망규제, 세관 경찰과의 협조체제 수립, 국제협력 및 정보교환, 재정자원마련, 개인정보보호 등

- 제3장(6-13) 공급망 규제: 제조허가승인, 고객주의 의무(due diligence), 추적, 기록의무, 보안 및 예방조치, 인터넷 소매금지,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운송
 - (제8조 추적관리) (3항)코드나 도장과 같이 독특하고 안전한 고정식 식별 표시(이후로 특수표식)를 본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에 모든 담뱃갑(궐련), 포장에 부착하거나 그 일부로 만들고, 10년 이내에 기타 담배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화(FCTC15조2항)
 - (제9조 기록보관) 개인 및 법인관련 기록을 최소 4년 보관
 - (제11조)인터넷, 전자통신 및 새로운 기술에 의한 판매금지
 - (제12조) 의정서 발효 후 3년 이내에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반출시 담배유통에 대한 효과적 규제이행. 담배제품반출시 동일 컨테이너 내에 담배제품과 비담배제품이 혼합되지 않도록 금지.
 - (제13조) 모든 면세담배가 본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조치,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에 근거기반연구 보장_FCTC협약6조의 의무사항 준수
- 제4장(14-19) 위법행위 조치: 범죄행위처리, 제품 및 장비의 폐기
- 제5장(20-31) 국제협력
- 제6장(32) 보고: 보고 및 정보교환
- 제7장(33-36) 제도적 준비 및 자원: 당사국총회, 사무국, 의정서의 이행지원
- 제8장 분쟁해결,
- 제9장 의정서의 개발,
- 제10장 최종조항 등

우리나라 관련 법에서의 담배 불법거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담배사업법: 담배제조, 수입판매, 도매업의 등록제, 우편 및 인터넷판매금지 등(법제 11조, 12조, 13조, 27조, 28조 등)
- 관세법: 위조, 밀수출입에 대한 처벌(관세법 235조, 269조 등)
- 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해약물(담배포함)의 판매, 대여, 배포금지 (법제 26조 1항)

2015년 출범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에서 건강과 웰빙분야(3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로서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이 포함되어 있다. 핵심적인

이행분야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의 만성질환(Non Communicable Disease)전략 정책에서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WHO. Global Status Report on noncommunicable diseases 2010: Description of the global burden of NCDs, their risk factors and determinants). 만성질환예방 관련 공통적인 위험요인은 담배사용, 위험음주, 불건강한 다이어트, 신체활동부족, B형간염백신접종 등이다. 담배 위험요인감소를 위한 핵심 개입전략으로는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금연구역), 담배의 유해성 경고, 담배제품의 광고금지, 담뱃세인상 등 네 가지이다.

세계보건기구의 Tobacco Free Initiative에서는 담배규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보급하고 있다. 수요감소와 관련된 핵심적인 개입전략은 MPOWER의 여섯가지로 요약된다(모니터링,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 금연치료지원서비스, 건강 경고, 담배광고금지, 담뱃세인상). 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에서는 영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2030년까지 15개 개발도상국 당사국의 협약이행을 지원하게 된다.

2018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제8차)가 개최되었다. 협약 당사국 181개국중 148개국이 참여하였다. Medium-Term Strategic Framework이 승인되어 2019~2025년까지 세계적인 차원에서 담배규제를 강화하는 전략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담배규제정책추진에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것,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 확보, 국가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을 확보하고 다부분간의 협력적인 노력 증진 등이 포함된다(WHO COP8 provisional item 7.1).총회에서는 2005년 이래로 담배에 대한 접근성 감소와 담배제품의 판촉을 제한하는 정책적 성과를 확인하였다. 협약 제5.3조와 관련하여 공중보건정책을 담배산업의 투자전략으로부터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담배경작자의 업종전환 지원은 사안으로 보면 중요성이 작을 수 있으나 FCTC 이행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미진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FCTC의 부속규약인 담배제품의 불법거래근절에 관한 의정서가 2018년 9월 25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10월 제8차 당사국총회 후에 의정서의 제1차 당사국회의(48개 당사국)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하였고 불법거래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관련 정보와 의사소통을 할 것이다. 차기 당사국회의는 제9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되는 시기

에 맞추어 진행할 예정이다.

제2절 국내 담배규제 정책의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더불어 본격적인 국민보건을 위한 담배규제정책이 시작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담배에서 담뱃세 일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었다. 담뱃세 인상은 2005년과 2015년에 있었다.

〈표 2-2〉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 요약표

		-1997	1998-2004	2005-2010	2010-현재
총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1995)	건강증진기금사업, 금연홍보사업(1998)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2005)	2013년 1월 FCTC의 담배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의정서 서명
담배 수요 감소 정책	가격정책 (조세정책 및 면세담배 규제)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라 1997년부터 건강증진기금부과 (갑당2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2002년 갑당 150원 - 2004.년12월 국민건강증진기금 갑당 354원(담뱃값 총500원인상)	- 2009년 군면세 담배 폐지	- 2014년 12월 담뱃값 2천원인상(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 841원) (2014년 7월 각종 신종담배에 대한 부담금부과 신설) - 2017년 10월 쉐련형 전자담배 소비세인상 결의
	비가격정책 (금연구역, 라벨, 광고, 금연서비스, 교육홍보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구역 지정, 담배광고제한, 담뱃갑건강경고문구 등)	-2003년 금연구역 확대 강화 (국민건강증진법) -2002년 담배 타르, 니코틴 함량 표기(담배사업법) & KT&G 민영화	- 2008년 12월 담뱃갑 발암물질 5가지 표기 추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2010년 4월 지자체 금연구역 지정권, 과태료 부과 등 (국민건강증진법개정) 금연클리닉, 금연콜센터기반조성 (2005)	- 2011년 가향물질 표시제한 - 2014년 면적100㎡이상 음식점 등 전면금연 실시 - 2015년 그림경고 표기 의무화 - 2014년 담뱃갑 오도문구사용 제한 (담배사업법) - 2017년 당구장 등 금연구역지정확대
담배공급감소정책 (담배 불법무역, 청소년 담배구매 및 판매금지)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3항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금지 - 1989년 미성년자에 의한 담배판매금지 (담배사업법)	-	-	- 2013년 1월 FCTC의 담배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의정서 서명

자료: 김재진(2008) 담배산업관리 적정화방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보건복지부(2004) 금연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5) 보건복지백서; 최은진, 이난희, 여지영, 김대중, 강일신, 양현석, 이성규. (2013)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및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대응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표 2-3〉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과 우리나라 법제도 비교 요약표

항목	담배규제기본협약	관련 국내법
담배가격과 조세	(6조) • 담배소비의 감소라는 보건 목표에 기여하기 위하여 담배제품에 대한 조세정책 및 적절한 경우에는 가격정책을 시행	• 담배에 부담하는 세금 (담배사업법 제18조) 담배판매가격신고제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 (최종공급가의 10%) (지방세법 제229조)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260조의 3) 지방교육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환경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국민건강 증진부담금
	(6조) • 면세담배, 무관세담배 제한	• 면세와 무관세 담배 제한 (지방세법 제232조 1항5, 부가가치세법 제 12조1항9, 국민 건강증진법 제23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 1항제6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지방세법 제 232조2항 및 시행령 제176조) • 군면세담배 2009년 폐지
담배성분	(9조, 10조) • 담배제품의 성분에 대한 규제	• 담배성분의 표시의무 (담배사업법제25조의2(담배성분의 표시),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의3(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에서 타르 및 니코틴 함량표시규정) • 군면세담배 2009년 폐지
라벨 규제	(11조) • 담배제품의 포장 및 오도 문구의 사용금지	• 담배사업법제25조의5(담배 오도문구의 사용제한) 및 시행령제10조(오도문구등의 범위) ① 라이트 또는 light ② 연한, 마일드 또는 mild ③ 저타르 또는 low tar ④ 순 또는 純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사한 내용 결합표시
	(11조) • 건강경고문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2(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등 표시)
금연구역 설치	(제8조) •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질병·장애초래에 대한 과학적 증거 인정 • 실내 작업장·대중교통수단·실내 공공장소 및 적절한 경우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국내에서는 필요한 조치 시행, 국외에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촉구	• 16개 공중이용시설, 국립공원, 산림에서의 금연시설 또는 흡연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학교,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 등 16개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어린이 환자 이용시설인 의료기관 학교 등은 금연시설로 지정 (자연공원법 제26조)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산림에서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금지 • 지자체 금연구역설치(제9조제5항), 금연구역흡연자 과태료 10만원 이내 부과(제34조제3항)

자료원: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웹사이트: https://www.who.int/fctc/treaty_instruments/en/

〈표 2-4〉 담배규제법 및 유사한 법령의 비교표

법령(제정년도)		주요 내용
담배사업법 (1988)	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담배의 제조업, 수입, 판매 등에 관한 허가, 결격사유 담배의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 저발화성 담배 제조수입성능인증, 담배성분표시, 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참여, 오도문구사용제한 등
국민건강증진법 (1995)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내용	금연을 위한 조치(담배자동판매기설치 장소지정), 금연구역지정, 담배경고문구표시, 가향물질함유표시제한, 담배광고제한 등)
청소년보호법 (1997)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대여 금지, 제조 및 수입된 유해약물에 유해표시 의무
화장품법 (1999)	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화장품의 제조·유통에 관한 사항과 화장품의 안전기준, 표시, 광고 등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02)	목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영업허가·신고, 품목제조신고와 제조, 사용기준 및 광고, 표시,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법 (2003)	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의료기기의 제조, 수리업, 판매업, 임대업, 의료기기의 취급(기준, 기재사항 및 광고, 부작용 관리)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관리법 (1990년 유해화학물질관리 법에서 2013년 법명개정)	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영업자 관리,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먹는 물 관리법 (1995)	목적	이 법은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수질관리, 개발허가, 시설기준, 영업허가 및 표시기준, 품질검사, 광고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983)	목적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사업허가·등록, 공급 및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농약관리법 (1957)	목적	이 법은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영업의 등록, 농약의 등록,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농약의 유통관리, 광고,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법령(제정년도)		주요 내용
자동차관리법 (1962년 도로운송차량법에 서 1987년 법명개정)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합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자동차 등록, 자동차안전기준인증, 부품의 성능·품질인증, 내압용기 안전기준,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청소년보호법 등 다양한 법제도에 따라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담배를 유해약물로 규정하여 청소년유해표시의무가 있다. 동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4의 4에서 유해표시의 내용 및 유해표시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유해표시의 내용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표시의 방법은 담뱃갑 뒷면 면적의 1/5 이상 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글자의 크기, 글자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색상에 대해서는 바탕색과 보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담배제품은 니코틴함유여부에 따라 분류되는데, 금연껍, 트로키제, 구강용해필름, 패취제 등은 일반의약품이며, 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의약외품과 전문의약품이 있다. 일반적인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공산품에 해당한다. 201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제6조의 담배 세금부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하여 개발한 기본 원칙에서는 모든 담배에 대하여 담뱃세를 부과하는 체계를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담배제품간 가격차이가 많을수록 대체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담배제품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⁵⁾

5) 2012년 제5차 당사국총회 결과자료 p. 52-56;

http://apps.who.int/gb/fctc/PDF/cop5/FCTC_COP5_DIV5-en.pdf. 2017.10.31. 인출

〈표 2-5〉 담배의 종류에 따른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기준 현황

구분		특성	담배소비세 과세기준	국민건강증진부 담금 과세기준
피우는 담배	제1종 쥘련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쥘련 제조기를 이용하여 쥘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0개비당 1,007원	20개비당 841원
	제2종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1그램당 36원	1그램당 30.2원
	제3종 엽쥘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을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1그램당 103원	1그램당 85.8원
	제4종 각련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輕加香) 하거나 다소 고급인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쥘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1그램당 36원	1그램당 30.2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연초고형물 1그램당 88원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 연초고형물 1그램당 73원
	5의2.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1그램당 364원	1그램당 1050.1원
씹거나 머금은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1그램당 364원	씹는담배 1그램당 34.4원 머금은 담배 1그램당 534.5원
냄새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1그램당 26원	1그램당 26원

자료: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제60조(담배의 구분), 제61조(조정세율)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담배회사는 비교적 덜 유해한 담배를 생산하고자 노력해 왔다. ‘라이트’, ‘울트라라이트’, ‘마일드’ 등의 상표명을 사용하여 덜 유해한 것으로 인식하게 마케팅해 왔다. 그러나 유해물질이 적다고 표시된 담배도 연소되는 과정에서 보통 담배에서와 동일한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이 생성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를 비롯, 많은 국가에서 오도성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유기농재배로 생산된 쥘련에서도 발암물질이 있다는 점 때문에 “유기농”이라는 표현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에서는 '위험완화담배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s)의 승인 및 유통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위험완화제품이란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담배제품들과 연계된 담배로서 질병의 위해 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판매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담배제품을 뜻한다. 현재 담배규제의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위험완화담배에 대하여 심사하고 승인하는 권한이 있으나 지금까지 승인된 것은 없다. 현재 필립모리스의 IQOS에 대한 심사를 2017년 12월까지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⁶⁾

첨가제 없는 담배의 경우 제조 공정에서 향료나 응축물 또는 습도 유지제, 연소 보조제와 같은 첨가제를 추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소를 통해 무수히 많은 건강에 유해한 성분과 발암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건강에 유해한 것은 마찬가지이며, 함유된 니코틴은 중독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해하다. 궤련에 사용하는 활성탄 필터(carbon filter)는 매우 큰 표면과 통기성 구조의 탄소 및 흑연으로 이루어진 검은색의 가벼운 분말이나 과립이다. 이 커다란 표면 덕분에 다른 성분과 결합할 수 있음. 하지만 담배 연기에서 나온 발암물질을 제거할 수는 없다. 활성탄 필터가 흡연을 통한 건강 유해성을 줄인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건강증진재단, 2012).

무연 담배는 장기간 다량의 니코틴을 배출하기 때문에 의존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European commission에서는 2012년 말 전자담배에 대한 니코틴 농도 제한(1ml당 20g 상한선), 가향담배판매금지, 담뱃갑 경고문구 표시 등을 포함한 담배 규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6년부터 시행하였다.⁸⁾

6) <https://www.fda.gov/tobaccoproducts.newsevents/ucm576895.htm> 2017년 10월 26일 인출
<https://www.fda.gov/TobaccoProducts/Labeling/MarketingandAdvertising/ucm304465.htm>
 2017년 10월 24일 인출

7) 독일암연구센터, 담배아틀라스, 2009.

8) EU Tobacco Products Directive 개정안
http://ec.europa.eu/health/tobacco/products/index_en.htm

제 3 장

외국의 담배 규제 관련 제도

- 제1절 호주
- 제2절 미국
- 제3절 영국
- 제4절 프랑스
- 제5절 캐나다
- 제6절 일본
- 제7절 시사점

3

외국의 담배 규제 관련 제도 <<

담배 회사는 전 세계 시장에 확장하기 위해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공중보건의 주요 위협이 되고 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담배로 인해 목숨을 잃고, 담배로 인한 질병은 HIV/AIDS, 말라리아 및 결핵을 합한 것보다 높다. FCTC의 근거기반의 강력한 법적 조항을 최대한으로 이행하는 것만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이다.

현재까지 전세계 181개 이상의 국가가 세계보건기구의 FCTC에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MPOWER 즉 흡연실태와 금연정책에 대한 모니터링(M)과 담배의 위험에 대한 경고(W) 외의 4개 전략(담배연기로부터 국민 보호[P],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O], 담배회사의 광고·판촉·후원에 대한 규제[E], 담뱃세 인상[R]) 등을 실행하고 있다.

FCTC는 담배 제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당사국들이 담배 산업의 상업 및 기타 기득권에 의한 간섭으로부터 공공 보건정책을 보호해야한다는 당위성(requirement)과 같은 기타 핵심적인 조항이 들어있다. 조약의 범위는 생산지, 공장, 판매에 이르는 담배의 생산 및 유통 등 전체적인 사슬을 포함한다.

2011년에 유엔 총회에서는 WHO의 “담배 규제 기본 협약 이행 가속화” 약속을 포함하여 비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총회 고위급 회담의 정치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2016년 11월 인도의 델리에서 개최된 WHO FCTC 제7차 당사국회에서는 비전염성 질병에 관한 글로벌 모니터링 프레임워크(Global Monitoring Framework on Noncommunicable Diseases)에도 포함되어 있다. 비전염성질환은 15세 이상의 사람들의 현재 흡연율을 30% 감소시키는 글로벌 자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다. WHO FCTC의 당사국이 아닌 회원국들은 WHO56/8 Rev.1 세계보건 총회 결의에 의해 가능한 한 빨리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FCTC 이행보고서 등을 참고로 하여 호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외국의 담배규제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 Summary of MPOWER measures

정책		내 용
M	모니터링	성인과 청소년 모두를 위한 대표 및 정기 데이터 (Recent, representative and periodic data for both adults and youth)
P	금연 정책	모든 공공장소는 완전 금연(또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법규 적용) (All public places completely smoke-free (or at least 90% of the population covered by complete subnational legislation))
O	금연프로그램	국가금연 line, NRT와 비용 절감 서비스 모두 (National quit line, and both NRT and some cessation services cost-covered)
W	건강 경고	모든 적절한 특성을 가진 큰 경고 (Large warnings with all appropriate characteristics)
	대중매체	공중파TV와 라디오를 포함한 최소 7개 appropriate characteristics을 가진 국가캠페인 수행 (National campaign conducted with at least seven appropriate characteristics including airing on television and/or radio)
E	광고금지	전국 TV, 라디오 및 인쇄 매체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형태의 직접 및 / 또는 간접 광고 금지 (Ban on national TV, radio and print media as well as on some but not all other forms of direct and/or indirect advertising)
R	세금정책	판매가의 51-75%가 세금 (51-75% of retail price is tax)
	2008년 이후 저가 담배	Cigarettes less affordable -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2000개짜 사는 데 필요한 1인당 GDP가 2008년과 2016년 사이 평균적으로 증가함 (Cigarettes less affordable- per capita GDP needed to buy 2000 cigarettes of the most sold brand increased on average between 2008 and 2016.)

자료: WHO.(2017).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7 Country profile Australia. p.12.

〈표 3-2〉 국가별 법제도 요약표

추진정책명	추진내용	국외 사례
담배가격	담배세금 인상	캐나다: TVPA(2018, S.C.1997, c.13) - Customs Act, 관세법 [R.S.C.,1985, c.1(2nd Supp.)]
		프랑스: Code général des impôts, 조세일반법전 (Article 572)
		일본: 담배세법(1984), 담배사업법(1984), 담배 지방세 부과에 관한 기본법(1950), 소비세법(1988) - たばこ税法, 담배세법(1984) - たばこ事業法, 담배사업법(1984) - 담배 지방세 부과에 관한 기본법(1950) - 소비세법(1988)
		호주: 소비세법, 관세법
금연구역정책	담배연기로부터 보호(금연구역 지정) 및 분연정책	캐나다: TVPA(2018, S.C.1997, c.13) - Non-smokers' Health Act [R.S.C., 1985, c. 15 (4th Supp.)]
		프랑스: Code de la santé publique, 공중보건법전(2000) - 우리의 건강시스템의 현대화에 대한 법률안, LOI n° 2016-41 du 26 janvier 2016 de modernisation de notre système de santé)

추진정책명	추진내용	국외 사례
담배갑 건강경고	흡연의 위험에 대한 경고(경고그림, 그림, 금연홍보)	일본: 건강증진법(2002)
		호주 실내공공장소 흡연금지(2000)
		영국: Smoke-free(Private Vehicles) Regulations 2015 자동차내에서 흡연금지
		캐나다: TVPA(2018, S.C.1997, c.13) - Tobacco Products Labelling Regulations (Cigarettes and Little Cigars) [SOR/2011-177]
		프랑스: Code de la santé publique, 공중보건법 전(2000) - 우리의 건강시스템의 현대화에 대한 법률안, LOI n° 2016-41 du 26 janvier 2016 de modernisation de notre système de santé)
담배광고판촉후원규제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	일본: 담배사업법(1984), 건강증진법(2002)
		호주 담배제품에 그림경고 75%이상, Plain Packaging(2011)
		캐나다: TVPA(2018, S.C.1997, c.13)
		프랑스: Code de la santé publique, 공중보건법 전(2000) - 우리의 건강시스템의 현대화에 대한 법률안, LOI n° 2016-41 du 26 janvier 2016 de modernisation de notre système de santé)
		일본: 담배사업법(1984), 건강증진법(2002)
금연교육홍보(흡연예방교육 등)	금연지원서비스 제공(금연상담)	영국: 문화스포츠행사에 담배회사 후원금지(2002)
		캐나다: TVPA(2018, S.C.1997, c.13) - Non-smokers' Health Act [R.S.C., 1985, c. 15 (4th Supp.)]
		프랑스: Code de la santé publique, 공중보건법 전(2000) - 우리의 건강시스템의 현대화에 대한 법률안, LOI n° 2016-41 du 26 janvier 2016 de modernisation de notre système de santé)
		일본: 건강증진법(2002)
		캐나다: TVPA(2018, S.C.1997, c.13) - Non-smokers' Health Act [R.S.C., 1985, c. 15 (4th Supp.)]
흡연차치료지원정책	금연지원서비스 제공(금연상담)	프랑스: Code de la santé publique, 공중보건법 전(2000) - 우리의 건강시스템의 현대화에 대한 법률안, LOI n° 2016-41 du 26 janvier 2016 de modernisation de notre système de santé)
		일본: 건강증진법(2002)
		캐나다: TVPA(2018, S.C.1997, c.13) - Non-smokers' Health Act [R.S.C., 1985, c. 15 (4th Supp.)]
		프랑스: Code de la santé publique, 공중보건법 전(2000) - 우리의 건강시스템의 현대화에 대한 법률안, LOI n° 2016-41 du 26 janvier 2016 de modernisation de notre système de santé)
		일본: 건강증진법(2002)
환경보호(17, 18조)	환경 유해물질 발생 저감	프랑스: Code de la santé publique, 공중보건법 전(2000) - 우리의 건강시스템의 현대화에 대한 법률안, LOI n° 2016-41 du 26 janvier 2016 de modernisation de notre système de santé)
		일본: 직장공기환경기준 - 사무소위생기준규칙(1972년 노동성령 제43호)

추진정책명	추진내용	국외 사례
미성년자 보호정책	아동청소년 및 미성년자 보호	캐나다: TVPA(2018, S.C.1997, c.13) - Tobacco(Access) Regulations (SOR/99-93)
		프랑스: Code de la santé publique, 공중보건법 전(2000) - LAW No. 2003-715 of July 31, 2003 to Restrict Tobacco Use Among Youth
		일본: 건강증진법(2002) - 미성년자흡연방지법(1900)

제1절 호주

1. 현황

호주는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WHO FCTC)에 2003년 12월에 서명하였으며, 2004년 10월에 비준하였다.

호주의 인구는 약 2천4백만 명이며, 고소득(high-income) 국가이다. 호주는 담배 관리에 관한 국가의 목표가 있으며, 담배관리를 위한 국가단위의 기관을 가지고 있다. 담배관리를 위한 정부지출은 2016년도 말 기준으로 155,084,345AUD (112,326,945USD, 1268억1천7백만원)이었다.

〈표 3-3〉 호주의 국가 담배관리 프로그램(2016년 12월 말 기준)

구 분	내용
담배 관리에 관한 국가정부 특정 목표 Specific national government objectives in tobacco control	Yes
담배 관리를 위한 국가 기관 또는 기술 단위 National agency or technical unit for tobacco control	Yes
전담 직원 수 Number of full-time equivalent staff	26
담배관리에 대한 정부 지출(2015년) Government's expenditures on tobacco control, latest available year(2015), in currency reported by country	AUD 155,084,345 ¹⁾

주: 1) 담배관리조치에 대한 법적 challenges를 defending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Does not include costs associated with defending legal challenges against tobacco control measures.)

2. 호주의 흡연 관련 정책

가. 담배 사용 및 예방 정책 모니터링

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호주의 흡연율은 지난 20년 동안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최근 3년 동안에는 흡연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AIHW, 2017, p.7).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4세 이상 현재 흡연율은 14.9%(남 17.1%, 여 12.8%)이며, 매일 흡연율은 12.2%(남 13.8%, 여 10.7%)이다.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은 2013년 60%에서 2016년 62%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담배를 사망을 초래하는 약물로 간주하거나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적다.

호주에서는 무연담배(씹는 담배 또는 oral snuff)는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허가없이 최대 1.5kg를 수입할 수 있다. 호주에서 무연담배의 흡연율은 조사되지 않고 있으나, 흡연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3-4〉 호주의 성인 흡연율

(단위: %)

구분	2001	2004	2007	2010	2013	2016
현재 흡연	23.2	20.7	19.4	18.1	15.8	14.9
매일 흡연	19.4	17.5	16.6	15.1	12.8	12.2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2017). National drug strategy household survey 2016: detailed findings. p.16.

〈표 3-5〉 호주의 성인(18세 이상) 흡연율(2016.12.31.기준)

(단위: %)

	현재	매일	가끔	이전 흡연	흡연경험 없음
남	17.1	13.8	3.2	24.1	58.8
여	12.8	10.7	2.2	21.6	65.6
전체	14.9	12.2	2.7	22.8	62.3

주: 1) 현재 흡연은 모든 담배에 적용/"현재" 흡연은 지난 7일 동안 최소 한 개피 이상의 담배를 피웠다는 것을 의미함. 이전흡연자는 평생 최소 100개피 또는 그에 해당하는 흡연을 하고, 현재에는 흡연하지 않음.("Former smoker": Smoked at least 100 cigarettes (manufactured and/or roll-your-own) or the equivalent amount of tobacco in their life, and reports no longer smoking.)

흡연경험 없음은 100개피 또는 그에 해당하는 흡연을 한 적이 없는 경우임.("Never smoker": Never smoked 100 cigarettes (manufactured and/or roll-your-own) or the equivalent amount of tobacco)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6). National Drug Strategy Household Survey detailed report 2016. Canberra: AIHW. Available at: <https://www.aihw.gov.au/reports/illicit-use-of-drugs/ndshs-2016-detailed/contents/table-of-contents>

호주의 12-17세 청소년 흡연율은 크게 감소하여 2011년과 7%에 비해 2014년 현재 흡연율 5%를 기록하고 있으며, 12세의 94%, 17세의 61%가 평생 흡연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호주의 청소년(12-17세) 현재 흡연율(2014)

(단위: %)

	남	여	전체
12세	1.2	0.9	1.1
13세	1.8	1.8	1.8
14세	3.1	4.0	3.5
15세	5.1	5.9	5.5
16세	10.3	7.3	8.8
17세	13.4	10.9	12.1

자료: Australian Secondary School Students Alcohol and Drug Survey(ASSAD), 2014

호주에서는 담배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한 지지는 일반적으로 높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법률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도가 높다. 전자담배에 대한 정책으로는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제한 및 광고시기와 장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호주에서는 4세 이상 18세 미만에게는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ASSAD, 2014, p.7). 호주에서 12-17세 및 14-19세에서 흡연을 한 적이 없다는 비율은 각각 98%, 94%였다.

호주에서 흡연은 예방이 가능하지만, 조기 사망 및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며, 건강 및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호주에서는 2011년, 흡연으로 인해 약 1만 9천명이 사망했으며, 질병과 상해 중의 9.0%를 차지하여 가장 부담이 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 흡연이 폐암의 80%, 만성폐색성폐질환의 75%를 기록했다. 식도암은 54%, 입 및 인두암은 46%로 거의 절반이 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호주 정부 규제 연혁

- 1973년: 모든 담배갑에 건강 경고문을 부착하기 시작함.
- 1976년: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나오는 담배에 관한 모든 광고를 일체 중지함.
- 1986~2006년: 1998년부터 직장 내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을 시작해 2006년까지 서서히 그 단계를 확장함.
- 1990년: 호주 내에서 출판되는 신문과 매거진 속 담배 광고를 금지함.
- 1992년: 호주 정부는 담배 소비세를 높이게 됨.
- 1993년: 전면적으로 담배광고 금지법 1992이 제정돼 방송물이나 출판물 내 담배광고가 전면 법적으로 금지됨.
- 1994~2003년: 레스토랑 내 흡연 금지운동이 시작됨.
- 1998~2006년: 호주 전역 담배를 판매하는 매장의 담배 진열을 전면 금지 방안 검토
- 2006년: 담배 겉표지에 시각적인 담배 경고문 부착이 요구되기 시작함.
- 2010년: 2010년 5월 30일 호주 정부는 25%의 특수판매세를 담배에 부과해 평균 2.16달러 상당의 담뱃값 인상
- 2011년: 담배 진열 금지 방안 검토 이후 담배 진열 금지한 첫 지역(주)가 탄생함.
- 2012년: 호주는 2011년 담배포장에 대한 규제와 법이 제정돼 2012년부터 담배 포장에 로고와 디자인을 제거하고 시각적 흡연 경고 그림을 부착해 흡연에 철퇴를 가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함.
- 2013년: 12월 1일 첫 번째 담뱃값 12.5% 인상
- 2014년: 9월 1일 두 번째 담뱃값 12.5% 인상
- 2015년: 9월 1일 세 번째 담뱃값 12.5% 인상
- 2016년: 9월 1일 네 번째 담뱃값 12.5% 인상 예정

나. 담배연기의 노출로부터 보호(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FCTC 제8조 및 가이드라인은 모든 실내 작업장,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100% 금연이 이루어져야 한다.

WHO FCTC 제8조는 담배 연기에 노출이 사망, 질병 및 장애를 유발할 것이라는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당사국들로 하여금 실내 작업장, 대중 교통수단, 실내 공공장소 및 적절한 경우 기타 대중이 모이는 곳에서 담배연기 노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자동차 내에서의 금연

호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와 관련한 금연정책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특히 아이들을 차에 태울 경우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시켰다는 점이다. 자동차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 간접흡연은 건강에 해로우며, 어린이에게 특히 위험하다. 자동차의 창문을 열거나 에어컨이나 팬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을 유해한 연기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접흡연 노출에는 '안전한' 수준이 없으며,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천식(asthma), 기관지염(bronchitis), 영아급사증후군(SIDS) 및 수막구균성 질환(meningococcal disease) 등의 건강위험이 있다. 호주에서는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자동차 내의 담배 연기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2) 주별 자동차 내 금연

각 주별 자동차 내 흡연금지 조항을 살펴보면,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에서는 2007년 5월 31일부터 16세 미만이 차에 동승할 경우 차내에서 흡연하는 조항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정지할 때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위반 시 경찰과 담배관리 당국은 75달러에서 최대 2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은 호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차내 흡연금지법안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태즈매니아(Tasmania)는 18세 미만이 차에 동승할 경우 자동차 내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행하였다. 위반시 경찰관 또는 해당 관리기관은 최대 11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용 중에 있는 사람이 사용한 업무용 차량의 경우에도 흡연은 금지된다.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는 2009년 7월 1일부터 16세 미만이 동승할

경우 자동차 내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행하였다. 위반시 운전자 또는 승객에게 25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빅토리아(Victoria)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이 동승할 경우 자동차 내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행하였다. 위반시에는 최대 233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퀸즐랜드(Queensland)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16세 미만이 탄 자동차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경찰은 흡연한 자에게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에서는 2010년 9월 22일부터 17세 미만이 동승할 경우 자동차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였다. 위반시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 수도 특별자치구(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에서는 2012년 5월 1일 16세 미만이 차에 동승할 경우, 흡연을 금지했다. 위반시에는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된다.

〈표 3-7〉 호주의 주별 자동차 내 금연 조항

주	제정 연도	연령 기준	벌금액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2007년 5월 31일	16세 미만	75~200달러
태즈메니아	2008년 1월 1일	18세 미만	최대 110달러
뉴사우스웨일즈	2009년 7월 1일	16세 미만	250~1,000달러
빅토리아	2010년 1월 1일	18세 미만	233달러
퀸즐랜드	2010년 1월 1일	16세 미만	200달러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2010년 9월 22일	17세 미만	200달러
호주 수도 특별자치구	2012년 5월 1일	16세 미만	250달러

다. 담배의존 및 금연과 관련한 수요 감소 조치(14조): 금연지원 정책

호주 정부는 광범위한 교육, 의사 소통, 교육 및 대중의 인식뿐만 아니라 흡연 및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퀴트라인(Quitline)서비스는 금연지원 및 니코틴 대체 제품 보조금을 통한 의존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다. 호주 정부는 흡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 및 조언이나 상담을 제공하는 Quitline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 및 테리토리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Quitline은 무료 콜백 서비스, 금연 시도 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 니코틴 대체 제품 사용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며, 영어 및 기타 언어로 제공된다. 원주민 팀과 토레스 해협 아일 랜더 카운슬러팀도 있다.

‘끝내는 책’은 발신자에게 정보와 조언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발신자는 가장 좋은 금연법, 금단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 금연 과정 안내 및 개인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하는 지역 기관의 세부 정보가 있는 사람과 상담할 수 있다. 또 임신한 여성과 파트너에게 초점을 맞추는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및 임산부가 금연 보조제가 있다.

호주 정부는 또한 자격을 갖춘 모든 호주인(할인카드소지자 포함)에게 PBS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에 대한 니코틴 대체 요법 목록으로 흡연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제품은 일반 의사 또는 건강 전문가가 처방 한 PBS를 통해 자격이 있는 환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정부보조금에는 Barenicline(Champix®)과 PBS를 통한 Varenicline의 교육 과정(12주 또는 24주)을 포함한 부프로피온(Bupropion)⁹⁾ 및 니코틴 대체 요법이 있다.

연기 없는 환경은 주로 주 및 테리토리 정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지만 호주 정부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 직장, 항공기, 공항, 주간 고속도로 열차 및 연방에 등록된 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호주의 환경 담배 연기 및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문제는 일반적으로 주 및 테리토리 정부의 관할권에 있다. 모든 주 및 테리토리 정부는 영화관과 극장, 대부분의 대중교통 수단 및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대부분은 식당, 쇼핑센터, 술집, 나이트 클럽, 어린이를 동승한 자동차와 같은 밀폐된 공공 장소에서 광범위한 흡연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일부에서는 야외 음식점 및 술집, 건물 출입구, 스포츠 시설 및 해변과 같은 야외 공간에서의 흡연 금지를 도입했다.

각 주 및 테리토리에는 모든 고용주가 직원과 구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건강에 해가없는 작업장을 이유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여기에는 금연 환경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주와 테리토리는 법 규정에 추가하여 집행 및 검사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Victorian Tobacco Act 1987(담배 법)과 관련하여 교육 및 집

9) 부프로피온(bupropion)은 항우울제 혹은 경구용 금연치료제 의약품이다.

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 의회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 법률은 빅토리아 보건복지부와 빅토리아시협회(빅토리아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최고기관) 간의 서비스 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빅토리아 경찰은 미성년자 및 대중교통 차량에서의 흡연 금지, 빅토리아는 대중교통 정류장 및 대중교통에서 흡연을 금지하였다.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에서는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및 조사가 주 전역 15개 보건지역의 공중보건부서(Public Health Unit)의 경찰에 의해 수행된다. 집행은 뉴사우스웨일즈 보건부에서 수행한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과 남호주 경찰이 법규 위반을 감시하고 시행하며, 일부는 금연 지역으로 지목된 공무원에 의해 시행된다.

태즈메니아 보건국은 1997년 공중 보건법의 담배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2명의 담배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다. 태즈메니아 경찰 및 지역위원회 환경 보건 담당자는 1997년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 1997)에 따라 이 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수사관들이 법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제한된 권한은 또한 경찰과 지방 당국에 주어진다.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에서는 흡연을 중단하고, 구내에 입소 시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관련 품목을 점유하도록 사람들을 안내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2003년 무연 공공장소법에 따라 규제된다. 경찰은 또한 미성년자 차량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차량을 통제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밀폐된 공공장소, 야외 식사 및 음주 지역, 금연 공공장소(현재 아동 놀이 공간 및 대중교통정류장)에서의 흡연 및 호주 수도 특별자치구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가 동승했을 때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 수도 특별자치정부(Australian Capital Territory Government)는 호주 수도 특별자치구의 금연공공장소 법안을 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노던 테리토리에서는 법령 위반시 200~400호주달러(AUD) 또는 기소금이 부과된다. 노던 테리토리 보건부 공무원들은 집행을 할 수 있다. 퀸즈랜드에서는 전국의 17개 병원 및 보건서비스의 공중보건부서(Public Health Unit)의 환경 보건담당자(Environmental Health Officer)가 준수 모니터링 및 조사를 수행한다. 또한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차량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Park Rangers는 국립공원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차에 동승할 경우 차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호주의 주 및 준주마다 법률이 존재한다. 관할 구역의 법률은 미성년자가 적용 금지(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적용되어야하는 연령에 따라 다르다.

호주에서는 담배 연기에 대한 노출 방지는 기본적으로 주 및 테리토리 정부의 책임이다. 각 주 및 테리토리 정부는 실내 작업장에서 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담배 규제법을 시행했다.

호주에서는 기차, 버스, 트램, 비행기, 택시, 렌트카, 페리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일부 주 및 테리토리 정부는 대중교통에서 전자 담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전자 담배 및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 호주의 주 및 준주 정부는 간접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흡연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흡연 금지를 야외 공공장소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빅토리아에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야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었다.

한편, 2015년 7월 1일부터 빅토리아교도소의 모든 지역에서 흡연이 금지되었다. 2003년 개정된 Smoke-Free Public Places Act는 2016년 3월 18일 호주 수도 특별자치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에서 발효되어 공공 놀이터 및 대중교통 정류장은 금연장소로 지정되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는 1997년 담배 제품 규제법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야외 식당을 도입했다.

라. 담배제품 포장과 라벨링(11조), 교육, 커뮤니케이션, 훈련 및 공공인지(12조)

2006년 3월부터 호주에서 수입되거나 제조된 모든 담배 제품에는 새로운 건강경고 라벨을 붙이도록 하였다. 이 새로운 경고는 흡연자에게 넓은 범위의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담배갑 건강경고는 앞뒷면 모두 그래픽으로 나타내며, 이는 앞면의 30%, 뒷면의 90%에 해당한다.

두 세트의 건강 경고문구는 12개월마다 교대로 교체된다(2006년 3월 1일부터 세트A, 2007년 3월 1일부터 B세트). 이 새로운 교체시스템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또 2012년 12월 1일, 호주에서 판매되는 담배갑 포장은 기업 브랜드가 없는 칙칙한 올리브색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앞면의 75%에 그

래픽 건강경고가 표시된다.

2011년 담배 무광고 포장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에 따라(제 15.2조(a)항) 관련하여, 담배 제품 소매 포장은 2011년 담배 포장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허용된 표시 이외는 금지된다.

2012년 10월 1일부터 호주 내에서 제조 또는 포장된 모든 담배 제품은 맛있게 포장해야하며 2012년 12월 1일부터 호주에서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모든 담배 제품은 무광고 포장이어야 하며, 새로운 대형 그래픽 건강 경고가 부착된다.

호주 정부는 담배 제품 포장에 대한 그래픽 건강 경고로 사용되는 이미지의 일부가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다.

호주는 WHO의 FCTC 제11조 지침(Guidelines for Guidelines)에 따라 담배 제품의 성분 및 배출에 관한 정성적 정보가 아닌 정량적 정보를 제공한다. 2016년 2월 26일 호주 정부는 담배 일반 포장에 대한 PIR(Implementation Review)을 발표했다. PIR은 호주에서 담배 연기에 대한 흡연과 노출을 줄이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미래 공중보건 결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2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시행된 이후 담배갑 포장 변경으로 흡연자가 감소했다고 추정했다(Chipty, 2016, p.15.).

마. 담배제품 광고 금지(13조)

호주의 담배광고금지법(Tobacco Advertising Prohibition Act, TAP)은 현재 10년이 넘었다. 전통적인 대중 매체 형식의 마케팅을 통해 호주 대중에게 담배 광고를 노출하는 것을 제한했으나, 다른 통신 채널을 통해 담배광고 노출을 제한하는 데는 크게 효과가 없었다. 이들은 담배 산업이 법률의 규제를 받은 이후 점차적으로 변화해왔으며, 대중 매체를 통한 흡연 광고에 대중이 노출되는 것은 계속 우려로 남아 있다.

호주의 공중보건 단체는 TAP법을 검토한 후 두 가지 쟁점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제조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및 판매와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안된 회사를 대신하여 담배 제품을 홍보하고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한 홍보는 원칙적으로 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담배 판매에서의 의사소통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제품의 가용성을 고려할 때), 제품의 가

격, 가용성 및 고유한 특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이미지 및 협회의 재배에 의존하는 마케팅 기법을 사용한 홍보는 금지된다. 1년에 호주에서 19,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 즉 1년에 210억 달러가 넘는 호주 공동체에 드는 비용이 들지 않는 제품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담배 제품 홍보 및 담배 무역에 종사하지 않고 홍보를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는 타인(예: 출판사 및 방송사)의 흡연과 관련된다. 즉 담배 광고의 정의를 넓혀 부속 규정에 담배산업의 활동유형까지도 포함하여 게릴라 마케팅 기법, 행사 및 공연장 마케팅, 유사성 마케팅, POS(point-of-sale) 마케팅, 팩을 통한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직접 마케팅, 보험료/부가가치 판촉 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호주의 담배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은 2012년에 도입되었다. 호주 수도 특별자치구, 노던 테리토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 및 빅토리아주의 태즈메이니아 입법 및 각료 선언은 과일 및 과자맛을 낸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호주는 주 및 준주가 소비자에게 담배 판매를 관찰하고 있다.

호주에서 담배 및 담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부분 주와 테리토리아에는 과일 또는 과자맛을 내는 담배 제품의 판매 및/또는 마케팅을 규제하는 기존 법규가 있으며 장난감을 닮은 담배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청소년의 흡연 예방 기준). 또한 주와 테리토리아에는 판매 시점에 표지판이 있어야 하고, 법적 연령 제한에 대한 경고가 있어야 하며, 담배 제품을 구매할 경우 법적 연령에 도달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호주수도특별자치도(Australian Capital Territory)는 전자 담배를 흡연 제품으로 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 주 및 테리토리 법률은 판매 시점에서 담배 제품의 전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자동 판매기의 담배 판매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즉 빅토리아 주에서는 대중이 운영하는 자동 판매기가 바, 카지노 및 가게의 서비스 카운터에 위치해야 한다. 호주수도 테리토리(Australian Capital Territory)에서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여 흡연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에서는 자동 판매기가 18세 이상에게만 허용되며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와 마찬가지로 직원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퀸즐랜드, 태즈메이니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및 노던테리토리에서는 모두 미성년자가 담배자판기에서 담배제품을 구입할 수 없다.

또한 일부 관할지에서는 미성년자에게 ENDS/ENNDS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태즈메이니아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담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처음 위반 시 최대 19,000달러, 두 번째 위반 시 최대 38,000달러, 추가 위반 시 최대 57,000달러로 증가했다.

태즈메이니아에서는 소매업자에게 판매된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의 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바. 세금정책(6조)

2013년 12월 1일, 담배 소비량이 12.5% 증가함에 따라 25개 1팩의 가격이 1.10달러로 인상되었다. 또 담배 소비량이 3년 동안 매 9월 12.5%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2016년 말까지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전적인 견지에서 2016년에는 담배 25개피 1갑당 최소 \$6.3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5월 3일, 연방 정부는 4년 동안 연평균 12.5%의 인상을 발표했는데, 이는 즉 2020년까지 담배 가격을 1팩당 40달러로 올리고, 면세 담배가격을 50달러에서 25달러로 내리기로, 무광고 담배값 포장에 대한 무역분쟁에 대응(defence)을 지원하고, 불법 담배를 관리하기 위한 국경 강제력(Border Force) 강화를 위해 77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호주 정부는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유일한 방법을 담배값 인상으로 보고 있다.

호주에서는 2010년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담배 소비가 11% 감소했다. 또 호주 정부는 2013년 12월 1일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에 연간 12.5%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였으며, 2014년 9월 1일, 2015년, 2016년 및 2017년에 12.5 %를 추가로 인상했다. 이러한 인상은 2018년과 2020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또한 호주는 담배값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지지 않도록 주당 평균수입(Average weekly ordinary time earnings, AWOTE)의 담배 소비를 색인하는 유일한 국가다.

이와같이 호주 담배소매 가격의 소비세 비율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기준인 70%에 훨씬 가깝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를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담배 생산업체는 가격을 인상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방 예산의 일환으로, 담배 제품에는 제조된 담배와 동일한 세제가 적용되었다. 이 법안은 제조 담배에 부합하는 롤백 담배 제품에 과세함으로써 담배 세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7월 1일부터 호주에 입국한 지 18세 이상인 여행객은 면세 담배 25그램과 오픈 패킷 1개를 구입할 수 있다. 담배는 어떤 형태든 상관없으며 대략 25개피이며, 이 이상은 구입할 경우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 담배농업(17조)

담배농업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담배를 재배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에 대한 정책과 권고사항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호주에서 담배의 제조는 불법이다.

아. 환경보건(18조)

제18조(환경의 보호와 사람의 건강)의 이행과 관련하여 호주에서는 상업 담배의 생산 및 제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연방 정부와 주 및 테리토리 정부는 환경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및 산업보건안전법에 대한 규정 및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담배 제조사는 호주에 사업을 반환하는 경우(if they return their operations to Australia)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토지 내에서의 담배 제조와 관련한 환경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며, 환경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건강을 고려한다. 또 WHO FCTC 제 17조 및 제18조와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담배 재배 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에 대한 정책 옵션과 권고 사항을 활용한다. 또 담배관리 법률 위반 시 강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민사 책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불리한 건강 영향에 대한 보상 및/또는 의료, 사회 또는 기타 관련 비용의 상환을 제공하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 규정은 없다.

관할 구역 내에서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악영향과 관련하여 담배 회사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포함하여 형사 및/또는 민사상 책임을 취한 적이 있으나, 담배 사용과 관련된 의료, 사회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전액 또는 부분 상환하는 경우 담배 산업에

대한 입법, 집행, 행정적 및/또는 기타 조치를 취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다.

자. 5.3조 이행 결과

호주의 정부 기관들은 현재 호주의 정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고 있다.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Department of Health는 직원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에서 WHO FCTC 제5.3조의 이행을 위한 지침 즉 공공 상담에 담배 산업 참여(Tobacco industry participation in public consultations)를 사용하고 참조한다.¹⁰⁾

〈표 3-8〉 호주의 담배 규제 정책

법률명	제정시기	주관기관 (부처)	내용
Air Navigation Regulations 1947 (as amended) 항공운항규정	1947.8.10.	기반시설 및 지역개발부	모든 국내 및 국제항공기에 서의 흡연금지 (폐지)
Interstate Road Transport Regulations 1986 Statutory Rules 1986 No.291 as amended 주 간(Interstate) 고속도로 교통 운행규정	1987.1.1.	기반시설, 지역개발 및 도시부	연방정부에 등록된 주 간 고속버스에서의 흡연 금지
Public Health Act 공중보건법	1991	보건부	건강에 관한 경고없이 날개 로 담배판매 금지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as amended) 방송광고금지법	1992.7.15	통신 및 예술부	1992담배광고금지법 제8 조 및 제13조의 목적을 위 해 'broadcast services' 정의
Tobacco Advertising Prohibition Act 1992 담배광고금지법	1992.12.24.	보건부	담배의 광고, 판촉, 후원 규제
Tobacco Advertising Prohibition Regulations 담배광고금지규정	1993.7.1.	보건부	담배광고 후원 및 장소 규 제
Airport(Control of On-Airport Activities) Regulations 1997(as amended) 공항 규정	1997.5.15.	기반시설, 지역개발 및 도시부	공항에서의 흡연 규제
Public Health (Tobacco) Regulation 공중보건법 규정	1999	보건부	담배뿐만 아니라 표지, 광 고, 진열 금지
Smoke free Environment Act Smoke free Environment Regulation 금연 환경법, 연기없는 환경 규제	2000	보건부	실내공공장소 흡연금지

10) <https://extranet.who.int/dataform/655321?token={TOKEN}<=en>

72 담배 규제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법률명	제정시기	주관기관 (부처)	내용
Smoke free Environment Act Smoke free Environment Regulation 금연 환경법, 연기없는 환경 규제	2004	보건부	허가된 점포내 흡연금지
Trade practices (Consumer Product Information Standards) (Tobacco) Regulations 2004 (as amended) 무역 관행 규제(소비자 제품 정보 표준)	2004.9.1	재무부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 (건강경고) → the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으로 대체됨.
Trade practices(Consumer Product Information Standards)(Reduced Fire Risk Cigarettes) Regulations 2008(as amended) 무역 관행 규제(소비자 제품 정보 표준)	2008.9.23	재무부	소비자담배 안전 기준(요구 사항, 테스트, 포장 및 표시사항) (모든 제조담배)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Schedule 2, The Australian consumer Law 경쟁 및 소비자 (담배) 정보표준	2011. 1.1.	법무부, 재무부, 통신 및 예술부, 기반시설/지역개발 및 도시부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Trade Marks Amendment(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 상표법 개정안	2011.12.1.	산업혁신과학부	담배포장, 상표
Competition and consumer (Tobacco) Information Standard 2011 경쟁 및 소비자 (담배) 정보표준	2012.1.1.	법무부, 재무부, 통신 및 예술부, 기반시설/지역개발 및 도시부	담배 그래픽 건강 경고
Tobacco Plain Packaging Regulations 2011(as amended) 담배 무광고포장법 규정	2012.10.1.	보건부	담배 포장
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 담배 무광고포장법	2012.10.31.	보건부	그래픽 건강 경고
Competition and consumer (Tobacco) Amendment (Rotation of Health Warnings) Information Standard 2013 경쟁 소비자 (담배) 정보표준	2013.7.25	법무부, 재무부, 통신 및 예술부, 기반시설/지역개발 및 도시부	그래픽 건강 경고 교체를 제조업체와 수입업자에게 위임

자료: <http://world.moleg.go.kr/web/main/index.do> 세계법제정보센터

글로벌법률센터 홈페이지(담배규제법) <https://www.tobaccocontrolaws.org/legislation/factsheet>의 각국의 자료 재구성, 인출일자 2018.12.20.

제2절 미국

1. 현황

미국의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약 3억2천4백만명이며, 고소득(high-income) 국가이다. 미국은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WHO FCTC)에 2004년 10월에 서명하였으나,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금연정책은 2009년 제정한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연방정부 담배 라벨 및 광고규제법(Federal Cigarette Labelling and Advertising Act), 공중보건담배흡연법(Public Health Cigarette Smoking Act), 담배산업진입규제(US Code Title 26, Subtitle B) 규율 등이 있다.

금연 관련 법 중 2009년 제정한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통해 모든 담뱃갑과 담배광고에 9개의 경고그림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또한 미국에서 담배 관련한 법률 중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담배규제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연방식품의약청(FDA)에 부여함으로써 담배를 연방기관이 규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법률에 의해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하여금 보건부 장관에게 담배성분 및 첨가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담배의 수요 억제와 담배 공급 감소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제하였다(장욱, 2009).

〈표 3-9〉 미국의 국가 담배규제프로그램(2016년 12월 말 기준)

구 분	내용
담배 관리에 관한 국가정부 특정 목표 Specific national government objectives in tobacco control	Yes
담배 관리를 위한 국가 기관 또는 기술 단위 National agency or technical unit for tobacco control	Yes
전담 직원 수 Number of full-time equivalent staff	...
담배관리에 대한 정부 지출(2015년) Government's expenditures on tobacco control, latest available year(2015), in currency reported by country	...

〈표 3-10〉 Summary of MPOWER measures

정책		내 용
M	모니터링	성인과 청소년 모두를 위한 대표 및 정기 데이터 (Recent, representative and periodic data for both adults and youth)
P	금연 정책	흡연금지 조치의 부재 또는 2가지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 (Complete absence of ban, or up to two public places completely smoke-free)
O	금연프로그램	National quit line, NRT와 몇몇 금연서비스 비용 모두 커버 (National quit line, and both NRT and some cessation services cost-covered)
W	건강 경고	모든 적절한 특성을 가진 큰 경고 (Large warnings with all appropriate characteristics)
	대중매체	공중파TV와 라디오를 포함한 최소 7개 appropriate characteristics을 가진 국가 캠페인 수행 (National campaign conducted with at least seven appropriate characteristics including airing on television and/or radio)
E	광고금지	금지의 완전한 부재 또는 전국 TV, 라디오 및 인쇄 매체를 포함하지 않음 (Complete absence of ban, or ban that does not cover national television, radio and print media)
R	세금정책	판매가의 26-50%가 세금 (26-50% of retail price is tax)
	2008년 이후 저가 담배	경향 없음

자료: WHO.(2017).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7 Country profile USA. p.12.

2. 미국의 금연 관련 정책

가. 담배 사용 및 예방 정책 모니터링(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미국의 흡연율(Prevalence of tobacco use)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인의 tobacco 현재 흡연율은 12.4%(남성 22.1%, 여성 15.2%)이며, 성인의 매일흡연율은 12.4%(남성 13.5%, 여성 11.5%)이다. 성인의 cigarette 현재 흡연율은 15.1%(남성 16.7%, 여성 13.6%)이며, 매일 흡연율은 11.4%(남성 12.2%, 여성 10.7%)이다. 청소년의 cigarette 흡연율은 13.4%(남자 14.6%, 여자 12.2%)이며 현재 흡연율은 4.1%(남자 4.2%, 여자 4.1%)이다.

성인의 무연흡연율은 2.2%(남 4.3%, 여 0.2%)이며, 청소년의 무연흡연율은 2.7%(남 4.0%, 여 1.3%)이다.

〈표 3-11〉 미국 성인의 흡연율(2016.12.31.기준)

(단위: %)

구분	성인 tobacco 흡연율 (Adult tobacco smoking)		성인 cigarette 흡연율 (Adult cigarette smoking)	
	현재 (current)	매일 (daily)	현재 (current)	매일 (daily)
남	22.1	13.5	16.7	12.2
여	15.2	11.5	13.6	10.7
계	18.5	12.4	15.1	11.4

자료: 청소년(Youth): 13~15세, National Youth Tobacco survey, 2015

성인(Adult), 18세 이상,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 2015; National

나. 금연구역 정책(8조)

: 담배 연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미국의 금연구역정책(8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2009년부터 연방정부 건물(Government facilities)은 완전 금연지역이다. 또 26개 주 모든 정부건물이 금연 구역이며, 19개 주는 민관기관의 건물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2006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뉴욕주 등의 몇 개 도시에서는 개인 주거공간 이외의 거리, 인도, 주차장, 공원 등의 야외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2007년부터 모든 식당과 바를 금연지역으로 하는 흡연구제법을 통과(2009년)시켰으며, 특히 뉴욕주에서는 타임스퀘어 등 보행자가 많은 공간에서도 흡연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미성년자가 차량에 동승하고 있는 경우 차량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였고, 하와이에서도 2017년부터 미성년자동승 차량 내에서 흡연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다. 또 2016년 오리건주 애슬랜드시에서는 도시 내 모든 대로의 인도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2017년부터 공동주택으로 연방정부 소유 공공임대주택 내 주거지, 사무실, 공동 소유지, 건물로부터 25피트(7.5m)이내 지역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다. 흡연자 금연지원정책(14조)

미국에서는 담배수요 감소조치로 Healthy people 2020을 통한 금연정책으로 담배 이용과 관련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장애,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흡연자 금연지원정책으로는 청소년의 흡연 시작 연령을 낮추고 청소년의 담배이용률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또 2008년 기준, 6개의 주 정부가 니코틴 의존성 치료에 메디케이드 보증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 주 정부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 병원, 치과병원, 약물치료시설 등 보건시설에서의 담배차단장치를 늘리고, 금연상담소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라. 건강경고(11조, 12조) : 담배갑 포장 경고, 금연홍보

미국에서의 담배 광고의 제한은 1970년 공중보건을 위한 흡연법(Public Health Cigarette Smoking Act)의해 시작되어, 1971년에는 TV와 라디오를 통한 담배광고가 금지되었다. 또 담배표지와 광고에 관한 연방법률(The federal cigarett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에서는 1971년 1월부터 모든 담배에 포장과 광고에 관한 건강경고문을 부착하도록 규정하였다(장욱, 2009).

마. 담배제품 광고 금지(13조)

: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미국에서는 일찍이 1965년 연방정부 담배 라벨 및 광고규제법을 통과시켰고, 1969년 공중보건 담배흡연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두 가지 법에는 담배갑 포장의 건강경고 부착, 미디어에서의 담배광고금지, 흡연의 건강결과에 대한 연례보고서 발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최은진, 2012). 또 2009년 오바마 정부에서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를 통과시킴으로써 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유해성분 기준 설정, 담배제조 사전승인, 경고문 표시 및 광고

등을 규제하였고, 담배제품에 ‘mild, light 등 표시를 금지하고,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담배(flavored cigarettes) 판매를 금지(박하향 제외) 등을 규정함으로써 포괄적인 담배관리 제도를 시행하였다(최은진, 2012).

바. 세금정책(6조)

: 담배세 인상(raise taxes on tobacco)

2009년 제정된 미국의 담배규제법(Tobacco Control Act)에는 담배의 가격정책이나 금연구역 지정을 통한 담배수요 감세조치에 대한 규정은 없다(장욱, 2014). 미국에서 담배세 부과를 통한 가격정책 및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주정부에 우선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州)가 2009년 말 이후 7년 만에 꺾인 한 갑당 담뱃세를 1달러 인상함으로써 한 갑당 1.6달러(약1,760원)가 2.6달러(약 2,860원)가 되었다. 또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되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시가(cigar) 및 시가릴로(cigarillo)를 제외한 각종 신종담배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표 3-12〉 미국의 담배 규제 정책

법률명	제정시기	주관기관 (부처)	내용
Federal Cigarett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Public Law 89-92 연방정부 담배 라벨 및 광고규제법	1965.7.27.	보건부 식품의약국 연방거래위원회	모든 담배의 포장과 광고에 건강경고문 부착
Federal Cigarett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as amended), 15 USC §§ 1331-1341 연방정부 담배 라벨 및 광고규제법	1966.1.1.	보건부(식품의약국) 연방거래위원회	모든 담배의 포장과 광고에 건강경고문 부착
Interim Mandatory Safety Standards for Underground Coal Mines, 30 USC § 877 주 간 지하석탄광산 의무안전기준	1979.10.17.	내무부, 노천채광복구추진 실	지하광산에 흡연재료, 성냥 또는 라이터 휴대금지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15 USC §§ 4401-4408 포괄 무연 담배 건강 교육법	1986.2.27.	보건부	무연 담배법에 위임된 세 가지 건강 경고를 표시 및 교대사항 설명
Pro-Children Act of 1994 프로-아동법	1994.4.31.	보건부	환경담배연기
Limitation of Smoking on Interstate Passenger Carrier Vehicles, 49 CFR § 371.201 주(state) 간 승용차 차량의 흡연 제한	1997.4.1.	교통부	사업지역 및 터미널 흡연 금지

78 담배 규제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법률명	제정시기	주관기관 (부처)	내용
Smokeless Tobacco Master Settlement Agreement 무연 담배 마스터 합의안	1998.11.	주 법무부 (캘리포니아주, 뉴멕시코주, 매사추세츠주, 캔터키주)	미국 일부 주정부와 5개 담배회사간 맺은 합의이며, 연방정부차원의 구속력은 없음.
Prohibition Against Smoking on Passenger Flights, 49 USC § 41706 여객선에서의 흡연 금지	2000.4.5.	교통부	항공기 흡연금지
Foreign Air Carriers and Foreign Operations of U.S.-Registered Aircraft Engaged in Common Carriage, 14 CFR § 129.29 미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외국 항공사와 외국 항공 사가 일반 운송 규정	2000.6.9.	연방항공국 교통부	항공기 내 흡연금지
Smoking Aboard Aircraft Regulations, 14 CFR § 252 항공기 흡연규정	2000.6.9.	교통부	항공기내 흡연금지
Pro-Children Act of 2001 프로 아동법	2002.1.8.	보건부	환경담배연기
Contraband Cigarette Trafficking Act, 18 USC 2341 § et seq. 밀수품 담배 밀매금지법	2003.1.24.	법무부	밀수담배금지
Fair and Equitable Tobacco Reform Act (FETRA), 7 USC §§ 518-519 공정하고 공평한 담배 개혁법	204.10.22.	농림부	담배 쿼터제
Federal Property Management Regulations, 41 CFR §102-74 연방 재산 관리 규정	2008.12.19.	조달청	연방시설내 금연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Act, Rate of Tax for Tobacco Products and Cigarette Papers and Tubes, 26 USC § 5701 아동건강보험법, 담배 제품 및 담배 종이 및 튜브 에 대한 세율	2009.4.1.	재무부	제조 및 수입담배/시가/종이/관련 튜브/무연담배 세금부과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Tobacco Products, 21 USC §§387-387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2009.6.22.	보건부의 식품의약국	담배를 질환의 원인으로 규정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Public Law 111-31, June 22, 2009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	2009.6.22.	보건부의 식품의약국	담배수요/공급 감소치 등 포괄적 조치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tanding Advisory Committees, Tobacco Products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21 CFR §14.100(5) 식품의약국, 상임 자문위원회, 담배 제품 과학 자 문위원회	2008.8.12.	보건부의 식품의약국	담배 제품 과학 자문위원회의 역할
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552 (as amended) 정보자유법	2009.10.28.	국무부	대중의 담배제품 정보센터에 접근보호법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2009.12.1.	법무부	담배밀수

법률명	제정시기	주관기관 (부처)	내용
Organizations (as amended), 18 USC Ch.96 Racketeer 영향 및 부패 조직법			
Prevent All Cigarette Trafficking Act of 2009, Public Law 111-154, March 31, 2010 담배 밀매 전면 금지법	2010.3.31.	법무부	담배의 밀수 및 불법거래 등 단속
Collection of State Cigarette Taxes, 15 USC §§375-378 주정부 담배세 징수	2010.7.1.	주정부 담배세 관리부	담배 제품의 제조자와 수입자 및 수출 창고 소유주의 허가사항
Tobacco Products as Nonmailable, 18 USC §1716E 담배제품 우편금지	2010.7.1.	법무부	담배제품 우편사용금지
Enforcement Action Plan for Promotion and Advertising Restrictions, Office of Compliance & Enforcement, Center for Tobacco Products,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판촉 및 광고 제한을 위한 실천 계획	2010.10.	보건부의 식품의약국	담배 제품 판촉 및 광고 제한 실천 계획
Tobacco Products Regulations, 21 CFR §§1107.1-1150.17 담배제품 규제	2011.7.5.	보건부의 식품의약국	변형된 담배제품의 판매 제한
FDA Regulations, Harmful and Potentially Harmful Constituents in Tobacco Products and Tobacco Smoke; Established List 담배제품의 유해하고 잠재적으로 유해한 성분	2012.4.3.	보건부의 식품의약국	담배제품에 위해성분 표시
“Doggett Amendment” to Omnibus Appropriations Act, Public Law 113-76 옴니버스 세출법에 대한 Doggett 수정안	2014.1.17.	상무부, 법무부, 과학 및 관련 기관, 세무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판매, 수출 촉진, 및 마케팅 조치에 대해 외국에서의 감축 또는 제거 제한
Postal Service Publication 52, Part 47 우편서비스 출판	2014.5.		담배를 위험하고 제한적이며 부패하기 쉬운 우편물
International Mail Manual (excerpts) 국내 우편물 취급 설명서	2014.7.7.	우정청	담배를 위험하고 제한적이며 부패하기 쉬운 우편으로 분류
Domestic Mail Manual (excerpts) 국내 우편물 취급 설명서	2014.7.7.	우정청	담배 및 무연담배를 우편물에서 제한
Deeming Tobacco Products To Be Subject to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as Amended by 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Restrictions on the Sale and Distribution of Tobacco Products and Required Warning Statements for Tobacco Products, 81 Fed. Reg. 90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에 의해 개정된 연방 식품, 의약 품 및 화장품 법의 적용을 받는 담배 제품 간주. 담배 제 품의 판매 및 유통 제한 및 담배 제품에 대한 필수 경고문	2016.5.10.	보건부의 식품의약국	18세 미만에게 담배제품 판매금지, 담배제품 포장 및 광고에 건강경고 표시 요구

자료: <http://world.moleg.go.kr/web/main/index.do> 세계법제정보센터

글로벌법률센터 홈페이지(담배규제법) <https://www.tobaccocontrolaws.org/legislation/factsheet>의 각
국의 자료 재구성, 인출일자 2018.12.20.

제3절 영국

1. 현황

영국은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WHO FCTC)에 2003년 6월에 서명하였고, 2004년 12월에 비준하였다. 영국의 인구는 약 6천5백만 명이며, 고소득(high-income) 국가이다.

영국은 FCTC 조치에 대한 준수 수준이 높으며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의 다양한 담배통제 계획 하에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HSC)의 담배 통제 프로그램은 담배 통제 정책의 양도되지 않은 측면(non-devolved aspects)에 대한 영국의 국가 조정기구이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는 별도의 보건부가 있으며, 모두 담배규제프로그램(Tobacco Control Programs)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영국은 'Smokefree세대를 위한 담배통제계획'을 2017년 7월에 시행함으로써 연기 없는 세대를 위한 흡연율을 인구의 5% 이하(북아일랜드 2025년, 스코틀랜드 2034년)로 감소시킨다는 국가의 전략을 세웠다. 2016년 담배 및 관련 제품 규정을 통해 표준화된 담배 포장에 영국 전역에 도입되었다.¹¹⁾

영국 정부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2016-2017년부터 2020-2021년까지 5년간 1500만 파운드의 공적 개발 원조(ODA) 기금을 투자하고 있다. FCTC 사무국이 이끄는 FCTC2030 프로젝트로 목표를 살펴보면, FCTC 2030 프로젝트를 통해 15개국을 직접 지원하여 담배 통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11) Towards a Smokefree Generation: A Tobacco Control Plan for England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owards-a-smoke-free-generation-tobacco-control-plan-for-england>
 Towards a Smokefree Generation: A Tobacco Control Plan for England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owards-a-smoke-free-generation-tobacco-control-plan-for-england>
 A Tobacco Control Strategy for Scotland
<http://www.gov.scot/resource/0041/00417331.pdf>
 Tobacco Control: Northern Ireland
<http://www.publichealthagency.org/sites/default/files/Tobacco%20Control%20Northern%20Ireland%202015.pdf>
 Stops smoking Wales
[http://www.stopsmokingwales.com/sitesplus/documents/1006/Eng%20Smoking%20Report%](http://www.stopsmokingwales.com/sitesplus/documents/1006/Eng%20Smoking%20Report%202015.pdf)

WHO FCTC의 제5조(일반 의무)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담배 관리 거버넌스를 개선하며, 담배세를 인상하고, (i) 담배 포장 및 (ii) 담배 광고금지에 관한 두 가지 WHO FCTC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WHO FCTC의 기타의 조항을 이행한다.

〈표 3-13〉 영국의 국가 담배규제프로그램(2016년 12월 말 기준)

구 분	내용
담배 관리에 관한 국가정부 특정 목표 Specific national government objectives in tobacco control	Yes
담배 관리를 위한 국가 기관 또는 기술 단위 National agency or technical unit for tobacco control	Yes
전담 직원 수 Number of full-time equivalent staff	...
담배관리에 대한 정부 지출(2015년) Government's expenditures on tobacco control, latest available year(2015), in currency reported by country	...

주: 1) 담배관리조치에 대한 법적 challenges를 defending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Does not include costs associated with defending legal challenges against tobacco control measures.)

〈표 3-14〉 Summary of MPOWER measures

정책	내 용
M	모니터링 성인과 청소년 모두를 위한 대표 및 정기 데이터 (Recent, representative and periodic data for both adults and youth)
P	금연 정책 모든 공공장소는 완전 금연(또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법규 적용) (All public places completely smoke-free (or at least 90% of the population covered by complete subnational legislation))
O	금연프로그램 국가금연 line, NRT와 비용 절감 서비스 모두 (National quit line, and both NRT and some cessation services cost-covered)
W	건강 경고 모든 적절한 특성을 가진 큰 경고 (Large warnings with all appropriate characteristics)
	대중매체 공중파TV와 라디오를 포함한 최소 7개 appropriate characteristics을 가진 국가 캠페인 수행 (National campaign conducted with at least seven appropriate characteristics including airing on television and/or radio)
E	광고금지 모든 형태의 직간접 광고 금지(또는 인구의 90% 이상이 하위법률에 적용) (Ban on all forms of direct and indirect advertising (or at least 90% of the population covered by complete subnational legislation))
R	세금정책 판매가의 75% 이상이 세금 (75% of retail price is tax)
	2008년 이후 저가 담배 Cigarettes less affordable -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2000개피 사는 데 필요한 1인당 GDP가 2008년과 2016년 사이 평균적으로 증가 (Cigarettes less affordable- per capita GDP needed to buy 2000 cigarettes of the most sold brand increased on average between 2008 and 2016.)

자료: WHO.(2017).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7 Country profil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2. 영국의 흡연 관련 정책

가. 담배 사용 및 예방 정책 모니터링

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영국의 2016년 12월 31일 기준 성인의 현재 흡연율(Prevalence of tobacco use)을 살펴보면, 전체 18.3%(남 20.7%, 여 15.9%)이며, 매일 흡연율은 17.8%(남 20.1%, 여 15.4%)이다. 청소년 현재 흡연율은 7.0%(남 6.0%, 여 8.0%)이며, 매일 흡연율은 4.0%(남 4.0%, 여 5.0%)이다.

〈표 3-15〉 영국의 성인 흡연율(2016.12.31.기준)

(단위: %)

	현재	매일	가끔	이전 흡연	흡연경험 없음
남	17.7			28.5	53.8
여	14.1			23.4	62.5
전체	15.8			25.9	58.3

자료: ONS - Annual Population Survey - January to December 2016 and ONS - Opinions and Lifestyle Survey - January to December 2016 (for average number of cigarettes consumed per day only) accessed at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healthandsocialcare/healthandlifeexpectancies/bulletins/adultsmokinghabitsingreatbritain/2016/related data](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healthandsocialcare/healthandlifeexpectancies/bulletins/adultsmokinghabitsingreatbritain/2016/related%20data)

〈표 3-16〉 영국의 청소년 흡연율(2016)

	남	여	전체
12세	1.0	0	0
13세	1.0	1.0	1.0
14세	3.0	5.0	4.0
15세	6.0	7.0	7.0
전체			

자료: <https://digital.nhs.uk/catalogue/PUB30132>

Regular Smokers: 11-15 year olds Pupils in England who are regular smokers (defined as usually smoking at least one cigarette per week).

영국에서는 성인의 28%가 간접흡연을 경험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6-24세 사이에서 가장 높아 최소 1회 이상 노출한 비율이 50% 이상이다. 간접흡연을 경험한 장소는 공공장소, 음식점, 카페 등 야외 흡연구역 등이 많다. 또 남성(31%)이 여성(26%)보다 더 많았다(NHS, 2016).

2015년 영국에서 사망자 중 79,000명이 흡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망자의 16%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36,000명이 포함되어 있어 2015년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약 27%는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관, 폐 및 기관지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79%, 후두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78%, 식도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64%, 상기도 암으로 63%, 암 이외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사망의 약 85%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5-2016년에는 흡연으로 인한 입원이 약 474만 건이었다(NHS, 2016).

나. 금연구역 정책(8조)

담배 연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영국 4개 정부 모두 거의 모든 폐쇄된 작업장과 공공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금연법에 의해 허용되는 예외는 거의 없으며 특정 카테고리의 구내에서 특정 영역으로 제한된다. Smoke-free(Private Vehicles) Regulations 2015를 통해 자동차 내에서의 흡연도 금지하고 있다.

영국에서 금연법은 지방 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거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¹²⁾ 2016년부터는 어린이와 동승할 경우 자동차에서의 흡연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다¹³⁾.

다. 흡연자 금연 지원 정책(14조)

웨일즈 정부는 교도소에 금연 규정을 도입했다. 영국은 2018년에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형무소에서는 금연 정책 및 지원 포로를 도입하여 니코틴 대체 요법을 포함한 다양한 금연 지원 및 조언을 통해 금연을 지원한다.

거의 모든 공공 장소 및 작업장은 모든 술집, 회원 클럽, 카페 및 레스토랑을 포함한 작업장과 공공장소의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Health Act 2006).

12) http://www.cieh.org/policy/smokefree_workplaces.html

13) <http://www.legislation.gov.uk/ukdsi/2015/9780111126004/contents>

영국에서는 니코틴 대체 요법(NRT)을 일반 판매용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처방전 없이 약국 및 기타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일부 양식의 NRT(패치 및 껌)는 GP 및 지역 금연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의약품 및 건강관리 제품 규제 기관인 MHRA는 2016년 11월에 최초로 전자 담배를 허가했으나, 아직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는 않다.

소비자 제품으로 판매되는 모든 면허가 없는 전자 담배는 EU 담배 제품 지침에 의거한 규제 통제가 강화되며 흡연자를 위해 소매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 의약품 및 보건 제품 규제 기관(MHRA)의 검토를 거쳐 12세 이상의 청소년, 임산부 및 심혈관 질환자가 NRT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NRT는 널리 보급하며,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판매세는 최저 금액으로 하였다.¹⁴⁾

한편, 정부는 공중보건단체와 공동으로 NRT와 같은 담배 대신 담배를 끊을 수 없거나 대체할 수 없는 흡연자들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국립보건 및 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는 금연에 대한 유해 감소 접근법의 사용에 관한 공중 보건지도를 작성하였다.

1) NHS 금연 헬프라인

영국 정부는 NHS 금연 헬프라인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임신 중에도 금연을 돕는 무료 도움,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웨일즈는 공중보건 웹사이트¹⁵⁾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전화 헬프라인 및 웹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⁶⁾. 북아일랜드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Agency)은 지역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¹⁷⁾

2) NHS 금연 서비스

이 외에도 NHS 금연 서비스를 통해 지방 당국은 흡연자가 무료 NRT뿐만 아니라 금연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무료 지역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4) www.mhra.gov.uk/home/groups/pla/documents/websiteresources/con2023239.pdf

15) <http://www.helpmequit.wales/>

16) <https://www.nhsinform.scot/care-support-and-rights/nhs-services/helplines/quit-your-way-scotland>

17) <http://www.want2stop.info/>

훈련된 금연상담사와 일대일 또는 그룹 세션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 흡연중단 전문가도 있다. 또 스트레스, 체중 증가를 다루고 니코틴 대체 요법의 사용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조언도 제공한다.

한편 조산사 및 건강방문자를 대상으로 건강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여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 흡연 중인 임산부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이로 인해 임산부의 일상적인 일산화탄소 모니터링이 증가했으며 임산부의 흡연 빈도는 10.7%로 감소하였다.

3) 공중보건 캠페인

정부는 28일간의 공중 보건 캠페인인 Stoptober를 운영하여 흡연자들이 10월 한 달 동안 금연 중단을 공개적으로 중단하지 않도록 돕는다. 소셜미디어는 행동주의적 경제 원칙을 사용하여 설계된 이 캠페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참가자들은 담배를 끊을 때의 건강과 재정적 이익에 관한 정보가 담긴 toptober pack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라. 건강경고(11조, 12조): 담배갑 포장 경고, 금연홍보

호주의 담배값의 무광고 포장(2012년)정책의 뒤를 이어 영국도 프랑스와 2015년부터 담배의 무광고 포장법을 시행하였다. 2015년부터 영국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등 담배판매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2015년 3월, 영국 의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표준 포장된 담배 및 손으로 찢는 담배(HRT)를 소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켈런 및 HRT 포장에 상표 및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담배 포장의 디자인 특성(예: 브랜드, 색채, 활판 인쇄, 크기, 모양 및 여는 방법)을 규제하고 있다. 이 법안(표준화된 포장 및 제품 규정 2015)은 2016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또 같은 기간에 담배제품 지침이 개정되었다.

마. 담배제품 광고 금지(13조)

HRT와 cigarettes에 대해 표준화 된 담배 포장이 도입되었으며, 향료는 이들 제품에서 금지되었다(2020년까지 멘톨 제외).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TAPA)에 따라 금지된 담배 제품은 광고할 수 없다.

바. 세금정책(6조)

: 담배값 인상(raise taxes on tobacco)

2017년 가을, 영국 정부는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소매물가지수 인플레이션보다 2% 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Hand rolling tobacco는 1% 포인트가 추가되어 2017년 11월 22일에 발효되었다. 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2017년 11월 22일부터 1,000개비 당 최소 280.15파운드로 책정됨으로써 소매가가 인상되었다.¹⁸⁾

사. 5.3조 이행 결과

FCTC 제5.3조의 이행 경과를 살펴보면, 정부는 Smokefree세대를 향한 영국의 담배 통제 계획'을 통해 WHO FCTC에 따른 의무를 지지하기 위해 재조정된 '규제 및 집행' 포함하였다. 이 계획에서 정부는 담배 업계와의 모든 회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상업적 또는 운영상 중요한 정보는 예외로 하였다. 또 규제 조항이나 운영 문제의 이행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담배 업계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담배 회사가 서면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투명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정부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하였다.

WHO FCTC 제5.3조의 가이드라인은 “건강한 삶 건강한 사람: 영국을 위한 담배 통제 계획” 및 “연기 없는 세대를 향한 담배 통제 계획: 영국을 위한 담배 통제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또한 교역표준연구소(TSI)와 지방당국거래표준부서(TSD)뿐만 아니라 해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차 정부 훈련 및 지침을 개발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¹⁹⁾

1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excise-duty-tobacco-duty/excise-duty-tobacco-duty-rates>

〈표 3-17〉 영국의 흡연 관련 정책

법률명	제정시기	주관기관 (부처)	내용
Consumer Protection Act 1987(c.43) 소비자보호법	1987.10.1	보건부	담배포장 및 라벨링
Children and Young Persons(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c.23) 아동 및 청소년법	1991.6.27.	보건부	담배자판기 사용금지
The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Commencement) Order 2002 (S.I.2002 No.2865) 담배광고 및 판촉법(시행령)	2002.11.20.	보건부	담배광고 및 판촉법(TAPA) 특정 조항 효력발생일 설정
The Tobacco Products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Safety) Regulations 2002 (S.I. 2002 No. 3041) 담배 제품 (제조, 표시 및 판매) (안전) 규정	2002.12.31.	보건부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The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 (Commencement No. 3) (Amendment and Transitional Provisions) Order 2003 (S.I. 2003 No. 258) 담배광고 및 판촉법(시행령 no.3)	2003.2.11.	보건부	담배광고 및 문화/스포츠행사에 담배회사의 후원 금지
The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 (Commencement No. 6) Order 2003 (S.I. 2003 No. 396) 담배광고 및 판촉법(시행령 no.6)	2003.2.26.	보건부	담배광고 및 문화/스포츠행사에 담배회사의 후원 금지
The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 (Commencement No. 7) Order 2004 (S.I. 2004 No. 3138) 담배광고 및 판촉법 (시행령 no.7)	2004.12.21.	보건부	담배광고 및 판촉법(TAPA) 특정 조항 효력발생일 설정
The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Point of Sale) Regulations 2004(S.I. 2004 No.765) 2004 담배광고 및 홍보(판매시점) 규제	2004.12.21.	보건부	담배광고 및 진열 제한
The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Specialist Tobacconists) Regulations 2004 (S.I. 2004 No. 1277) 담배 광고 및 홍보 규정	2004.12.21.	보건부	2010 담배 광고 및 판촉 (Special Tobacconists) 규정에 의해 폐지
The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Brandsharing) Regulations 2002 2004 (S.I. 2004 No. 1824) 담배광고 및 홍보 규정	2005.7.31.	보건부	브랜드 공유 및 금지 조항에 대한 예외적 제한 사항 규정
The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 (Commencement No.9) Order 2006 (S.I. 2006 No. 2372 (C. 81)) 담배광고 및 홍보	2006.9.26.	보건부	TAPA 조항의 발효일 설정

19)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87119/Guidance_for_Overseas_Posts_on_support_to_the_Tobacco_Industry.pdf

88 담배 규제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법률명	제정시기	주관기관 (부처)	내용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2002 etc. (Amendment) Regulations 2006 (S.I. 2006 No.2369) 담배광고 및 판촉법	2006.9.28.	보건부	TAPA에 인터넷과 같은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사항 포함포함
Health Act 2006 (c. 28) 보건법	2007.7.1.	보건부	공공장소, 직장 및 공공교통에서의 흡연 규제
The Smoke-free (Vehicle Operators and Penalty Notices) Regulations 2007 (S.I. 2007 No.760) 연기없는 (차량운전자 및 벌금 고지) 규정	2007.7.1	보건부	공공차량에서의 흡연 규제
The Smoke-free (Penalties and Discounted Amounts) Regulations 2007 (S.I. 2007 No.764) 금연 규정(벌금 및 할인액)	2007.7.1	보건부	흡연 위반에 대한 벌금 책정
The Smoke-free (Premis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2006 (S.I. 2006 No.3368) 금연규정(전제 및 시행)	2007.7.1	보건부	"봉인된" 및 "실질적으로 봉인된" 규정 및 집행기관의 권한 설정
The Smoke-free (Exemptions and Vehicles) Regulations 2007 (S.I. 2007 No.765 금연규정 (면제 및 차량)	2007.7.1	보건부	흡연금지에 대한 면제 명시 및 enclosed vehicles 정의
The Tobacco Products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Safety) (Amendment) Regulations 2007 (S.I.2007 No 2473) 담배제품 규제(제조, 표시, 판매)	2008.10.1.	보건부	담배 및 관련 제품 규정 (2016년 폐지)
Air Navigation Order 2009 (S.I.2009 No.3015)	2010.1.1.	교통부	흡연이 금지된 항공기 내에서 금연 표지 요구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Product Placement) Regulations 2010 (S.I.2010 No.831)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품 배치) 규정	2010.7.6.	문화체육부	담배 제품 배치 및 전자제품 또는 무연담배, 라이터와 같은 담배 부속품 및 담배 파이프 또는 담배 제품
UK Code of Broadcast Advertising 영국 방송광고법	2010.9.1	문화체육부	Ofcom(TV, 라디오 및 휴대 전화)에서의 담배 광고금지
Ofcom Broadcasting Code Ofcom 방송법	2011.2.28.	Ofcom	방송매체에서 흡연 규제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Display and Specialist Tobacconist) (England) (Amendment) Regulations 2011 (S.I.2011 No.1256J) 담배광고 및 홍보	2011.6.30.	보건부	담배광고 및 홍보 규정
Health Act 2009 (c. 21) 보건법	2011.10.1.	보건부	소매점에서 담배 제품 전시 금지, 웹사이트에서 제품 전시 제한, 담배 자판기 금지
The Protection from Tobacco(Sales from Vending Machines)(England) Regulations 2010	2011.10.1.	보건부	담배 자판기 사용 금지

법률명	제정시기	주관기관 (부처)	내용
(S.I. 2010 No. 864) 담배로부터의 보호(자동 판매기의 판매) 규정 COMMENTS:			
The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Display of Prices) (England) Regulations 2010 (S.I.2010 No.863) 담배 광고 및 판촉(가격 표시) 규정	2012.4.6	보건부	담배 가격표에 대한 요건
The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Display) (England) Regulations 2010 (S.I. 2010 No.445) 담배 광고 및 판촉(진열) 규정	2012.4.6.	보건부	소매점에서 담배 제품 표시 및 진열 금지
The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Display and Specialist Tobacconists) (England) (Amendment) Regulations 2012 담배 광고 및 판촉 (진열 및 담배전문가) 규정	2012.4.6	보건부	담배광고 및 홍보요건
Smoke-free (Signs) Regulations 2012 (S.I. 2012 No. 1536) 금연 (기호) 규정	2012.10.1.	보건부	금연 기호 요건
Revised Guidelines for Overseas Posts on Support to the Tobacco Industry 담배 산업 지원에 관한 해외법령 개정 지침	2013.12.	보건부	담배산업에 대한 상업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의 담배 관리(5.3조)
The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Specialist Tobacconists) (England) Regulations 2010 (S.I. 2010 No. 446) 담배 광고 및 판촉 (담배전문가) 규정	2016.4.6.	보건부	담배판매점 내 광고 및 진열요건 설정
Smoke-free (Vehicle Operators and Penalty Notices) (Amendment) Regulations 2015 (S.I. 2015 No. 939) 금연 (차량 운전자 및 벌칙 통지) 규정	2015.10.1.	보건부	18세 미만의 아동 동승 개인차량 흡연금지에 따른 운전자 벌칙통지규정
Smoke-free (Private Vehicles) Regulations 2015 (S.I. 2015 No. 286) 금연 (개인 차량) 규정	2015.10.1.	보건부	18세 미만 아동이 동승한 개인차량에서의 흡연금지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April 3, 2014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2014/40/EU지침	2016.5.20.	유럽의회/이사회	담배 제품 포장의 앞뒷면의 65%를 차지하는 그림 및 건강경고문자
Standardised Packaging of Tobacco Products Regulations 2015 (S.I. 2015 No. 829) 담배 제품 표준화 포장 규정	2016.5.20.	보건부	담배포장(표준 색상, 모양, 재료, 허용된 텍스트 및 기타 담배 제품 포장 요건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Regulations 2016 (S.I. 2016 No. 507) 담배 및 관련제품 규정	2016.5.20.	보건부	담배 제품 포장에 대한 건강 경고 요건

자료: <http://world.moleg.go.kr/web/main/index.do> 세계법제정보센터

글로벌법률센터 홈페이지(담배규제법) <https://www.tobaccocontrolaws.org/legislation/factsheet>의 각국의 자료 재구성, 인출일자 2018.12.20.

제4절 프랑스

프랑스의 담배 규제를 다루는 기본법은 1976년 7월 9일에 통과된 베일 법(Veil Law)²⁰⁾과 1991년 1월 10일에 통과된 예방법 (Evin Law)²¹⁾과 2006년 11월 15일자로 행정명령²²⁾으로 발전하여 1953년도에 최초로 제정된 현재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²³⁾에 성문화되어있다.

○ 금연 장소 (FCTC 8조 Protect)

- 실내 공공장소 및 작업장에서는 흡연이 일반적으로 금지. 그러나 일부 장소

-
- 20) 1976년 7월 9일자 베일 법은 프랑스에서 담배에 관한 유해성을 알리기 시작한 최초의 법률로 담배 광고에 관한 규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배 광고는 인쇄 매체에 한하여 허가하고, 담배 각에 '위험한 남용 (Abus dangereux)'이란 문구의 삽입을 의무화하였다. 군대와 학교에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담배 회사의 스포츠 경기 후원을 금지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도 금지하는데 이를 통해 당시 지속적으로 증가 하던 담배의 소비가 억제되는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 21) 1991년 1월 10일자 예방 법률은 술과 담배를 규제하는 법률로 담배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구체적인 입법 조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담배 가격 인상을 유도
 - 기차역과 버스 정류장을 포함하여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원칙을 확립 (단 흡연자들을 위해 제한된 공간에서 흡연이 가능하나 이는 행정명령을 통해 구체화)
 - 담배에 관한 모든 직접, 간접 광고를 금지 (프랑스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스포츠 경기를 포함하여 외국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를 방송하는 경우에도 담배 광고가 금지되고, 방송국에게도 담배 광고를 방송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
 - 담배 판매점에 걸려 있는 간판을 제외하고 담배의 모든 무료 배포를 금지
 -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
 - 법원의 민사 소송에서 흡연예방을 위한 협회에게 특정 조건 하에서 권한을 부여
- 이를 통해 담배에 관한 인식이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해로운 제품이라는 것으로 전환되었고, 특히 담배 가격의 인상은 담배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 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가격과 관련하여 인상폭을 살펴보면,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담배 가격은 3,60유로에서 5유로로 증가하였는데 아래의 그래프에서 살펴보듯이 다른 시기에 비해 담배 판매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 이후에는 인상폭이 60상팀 정도에 그쳐 가격이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었다.
- 22) 2006년 11월 15일자 행정 명령은 예방 법을 수정한 것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무 공간과 대중을 상대하는 모든 공간 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건강 관련 시설에서도 흡연이 금지되었으며, 대중교통 시설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에서도 흡연이 금지되었다. 특히 학교 운동장과 같이 열린 공간 도 이러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교육시설에서의 흡연이 광범위하게 억제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술집, 호텔, 레스토랑, 담배가게, 카지노, 디스코텍, 게임장과 같은 특정 분야의 시설들도 2008년 1월 1일까지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케 하는 의무가 부여되면서 프랑스에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는데 기여했다.
- 23) 프랑스의 공중보건법전(공중보건법전은 1953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여러 법적 도구로 지속적으로 개정)은 자국내 공중보건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범포괄적 기본법률로 여기에는 담배 중독을 포함하여 특정 질병 및 중독과 관련된 법률(제4편, 1991년 담배 및 알콜중독 방지에 관한 법률)이 포함 (Legifrance.gouv.fr의 공중보건법전 링크는 공중보건법전의 최신 버전을 제공)되어 있음.

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된 흡연구역으로 만들 수 있다.

- 상업용 선박의 택시 및 야외 장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중교통수단에서 흡연이 금지한다. 또한 일부 야외 지역, 특히 미성년자가 정기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지역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 하위 국가 관할권은 국내법보다 엄격한 금연법을 제정할 수 있다.

○ 담배 광고, 홍보 및 후원(FCTC 13조 Enforce)

-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국내 및 국경 간 담배 광고 및 홍보가 금지되어 있다. 제품의 진열은 현재 POS(Point of Sale)에서 허용된다. 담배 산업에 의한 모든 형태의 재정적 지원이나 기타 후원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브랜드 확장 제품의 직접 또는 간접 광고가 포함된 모터 스포츠대회의 재방송을 허용하며 담배 광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 실시된다.

○ 담배 포장 및 표시(FCTC 11조~12조 Warn)

- 모든 담배 팩 및 롤링 담배에는 표준화된(일반) 포장이 필요합니다. 포장은 표준색상, 크기 및 모양이어야 하며 지정된 정보와 처방 된 건강 경고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든 훈제된 담배 제품은 담배 제품 포장의 앞면과 뒷면의 65%를 차지하는 텍스트/사진 건강 경고를 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경고는 회전해야 합니다. 구성성분 및 배출물에 대한 일반적인 경고 및 정보 메시지가 하나가 포장의 각 면의 50%를 차지해야 합니다. 무연 담배 제품의 경우, 허가된 문자 경고문이 담배 제품 포장의 앞면과 뒷면의 30%를 차지해야 합니다. “light” 및 “low tar” 및 기타 기호와 같은 용어를 포함할 수 있는 오도된 포장 및 라벨링은 금지된다.

○ 담배 세금 및 가격(FCTC 6조 Raise)

- 세계보건기구(WHO)는 소매가격의 7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담배 소비세를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프랑스의 담배 소비세는 이러한 권장 사항보다 낮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e publique) 제4편 담배중독 및 약물중독의 방지(Livre 4: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utte contre le dopage)를 통해서

담배를 규제하고 있고 주요 관리사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의 제한’, ‘담배제품의 성분 리스트의 제출’,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 등이다. 또한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을 바탕으로 하여 “담배 중독의 감소에 대한 국가프로그램 2014-2019”(le Programme National de Reduction de Tabagisme 2014-2019, 이하 PNRT)을 발표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흡연자 수를 10% 감소시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담배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위험성 경고를 통하여 담배제품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18〉 프랑스의 담배 관련 정책

법률명	제정시기	주관기관(부처)
공중보건법전 (Code of Public Health)	1953년 10월 7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신청 조건 설정(1992 년 5월 29일 자 법령 82478호) [Decree No. 82478 of May 29, 1992 Setting the Conditions on the Application of the Ban on Smoking in Places Intended for Public Use]	1992년 5월 29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1992년 12월 31일자 담배 숏에서 담배 광고 포스터의 특성 확립 [Order of December 31, 1992 Establishing the Characteristics of Posters for Advertising of Tobacco in Tobacco Shops]	1992년 12월 31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조세일반법전 제283조 부속서 2 [General Tax Code, Article 283, Annex 2]	1996년 10월 11일	관세청
세금 코드 제56조 AQ 담배 패키지에 관한 필수 통지(건강 관 련 사항 제외) Tax Code Article 56 AQ on Required Notices (Other than Health-related) on Tobacco Packages	2002년 6월 11일	관세청
담배의 타르, 니코틴 및 일산화탄소의 최대 함유량, 분석 방법, 포장 내용에 대한 규정 및 담배 포장 포장에 대한 건강 경고문 작성을 위한 포장의 정확성 확인제품 (아레테 2003.03.05) [Order of March 5, 2003 on Maximum Content of Tar, Nicotine and Carbon Monoxide in Cigarettes, Methods of Analysis, Provisions for Writing these Contents and Verification of the Accuracy of Notices on Packages, as well as Arrangements for Writing Health Warnings on Packaging for Tobacco Products]	2003년 3월 5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법률명	제정시기	주관기관(부처)
담배 요금 및 세금에 관한 조세일반법전 제 575조 (General Tax Code Article 575 on Tobacco Fees and Taxes)	2003년 12월 30일	관세청
청소년 중 담배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LAW No. 2003-715 of July 31, 2003 to Restrict Tobacco Use Among Youth)	2003년 7월 31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담배 및 재판매업 소매업 자에 대한 조세일반법전 제1항(2004년 1월 16일자 법령 번호 제2004-68호) [Decree No. 2004-68 of January 16, 2004 issued drawn from an application of the first paragraph of the General Tax Code with respect to retailers of tobacco and resellers]	2004년 1월 16일	관세청
담배 롤링 포장 단위의 건강경고 인쇄 절차(2004년 5월 27일의 명령) [Order of May 27, 2004 Concerning Procedures for the Printing of Health Warnings on Packaging Units of Cigarette Rolling Paper]	2004년 5월 27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16 세 미만 미성년자 담배 판매 금지(2004년 9월 6일자 법령 No.2004-949) [Decree No. 2004-949 of September 6, 2004 Concerning the Prohibition of the Sale of Tobacco to Minors Under 16]	2004년 9월 6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일반적 사용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2006년 11월 29일 회람) [Circular of November 29, 2006, Concerning the Prohibition of Smoking in Places of Common Use]	2006년 11월 29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2006년 12월 12일의 회람, 사회적 행동 및 가족 행동 강령 제 L312 조 제1절 제6, 7, 8 및 9항에 언급 된 섭취 및 수용을 보장하는 사회 및 의료 사회 시설에서의 담배 통제 캠페인 [Circular of December 12, 2006, Concerning the Campaign for Tobacco Control in Social and Medical-Social Establishments Ensuring Intake and Accommodation Mentioned in Paragraphs 6, 7, 8 and 9 of Section I of Article L312-of the Code of Social Action and Families]	2007년 2월 1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공동 사용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제2단계 시행 절차에 관한 회람(2008년 9월 17일자 DGS / MC2 / 2008 / 292) [Circular No. DGS/MC2/2008/292 of September 17, 2008, Concerning Proced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cond Phase of the Prohibition of Smoking in Places of Common Use]	2008년 9월 17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담배 제품 포장 단위에 대한 건강 경고문 작성 절차(2010년 4월 15일의 명령) [Order of April 15, 2010, Concerning Procedures for the Writing of Health Warnings on Units of Packaging of Tobacco Products]	2010년 4월 15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94 담배 규제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법률명	제정시기	주관기관(부처)
조세일반법전 제 570조 개정 (General Tax Code, Article 570)	2010년 5월 28일	관세청
공중보건법전미성년자에게 판매 금지(제D3511-15조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의 모델 수립(2010년 5월 28일의 명령) [Order of May 28, 2010 Establishing a Model of the Notice Required under Article D3511-15 of the Public Health Code (Prohibiting Sales to Minors)]	2010년 5월 28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공공보건법전 제 R3511-6 조에 의해 요구되는 징후를 위한 모델 수립(2010년 12월 1일의 명령) [Order of December 1, 2010 Establishing the Models for Signs Called for by Article R3511-6 of the Code of Public Health]	2010년 12월 1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담배 규제 조치에 관한 2011년 8월 3일자 시행령(2009년 7월 21일 법 No. 2009-879에서 환자, 건강 및 영토 관련 병원의 개혁의 내용을 담음) [Circular of August 3, 2011 Concerning Measures for Tobacco Control Set Forth in Law No. 2009-879 of July 21, 2009 Concerning Reform of Hospitals Relating to Patients, Health and the Territories]	2011년 8월 3일	노동-고용-건강부
전자 증기 장치 광고 규제(2014년 9월 25일자 회람 번호 DGS / MC2 / 2014 / 273) [Circular No. DGS/MC2/2014/273 of September 25, 2014 on the regulation of advertising of electronic vapor devices]	2014년 9월 25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담배 제품에 사용될 경고그림 라이브러리 설치(2014년 10월 10일 EU 지침 2014 / 109 / EU EU 지침 2014 / 40 / EU 부속서 2 개정) [Commission Delegated Directive 2014/109/EU of October 10, 2014 amending Annex II to Directive 2014/40/EU by establishing the library of picture warnings to be used on tobacco products]	2015년 1월 4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중립성 및 포장 및 종이 및 롤링 담배의 균일성에 대한 조건, (2016년 3월 21일 행정 명령, 2016 년 5월 31일 통합) [Administrative Order of March 21, 2016, on Conditions for Neutrality and Uniformity of Packaging and Paper for Cigarettes and Rolling Tobacco (consolidated on May 31, 2016)]	2016년 3월 21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니코틴 함유 수증기 제품(2016년 5월 19일 주문) [Order of May 19, 2016 on Vapor Products Containing Nicotine]	2016년 5월 20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표준화] 특정 담배 제품의 포장 (중립에 관한 2016년 3월 21일자 법령 No.2016-334) [Decree No. 2016-334 of March 21, 2016 Concerning Neutral Standardized) Packaging of Certain Tobacco Products]	2016년 5월 20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법률명	제정시기	주관기관(부처)
담배 제품 및 관련 제품의 제조, 전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 (2014 / 40 / EU의 개정에 관한 명령에 따른 2016년 5월 19 일자 2016-623) [Order No. 2016-623 of May 19, 2016, Concerning Transposition of Directive 2014/40/EU on the Manufacture, Display and Sale of Tobacco Products and Related Products]	2016년 5월 20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담배 이외의 식물에서 제조 한 담배 제품, 곡물 및 제품의 제 조, 전시, 판매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16년 8월 11일 법령 2016-1117) [Decree No. 2016 - 1117 of August 11, 2016, on the Manufacture, Display, Sale and Use of Tobacco Products, Vaping Products and Products for Smoking Made from Plants Other Than Tobacco]	2016년 8월 12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법무부
담배 제품, 곡물 제품, 담배 이외의 식물로 만든 흡연 제품 및 담배 롤 종이(2016년 8월 22일 행정명령) [Administrative Order of August 22, 2016, Concerning Tobacco Products, Vaping Products, Products for Smoking Made from Plants Other Than Tobacco, and Cigarette Rolling Papers]	2016년 8월 22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재무부/국무 부
담배판매점 간판(2016년 9월 6일 행정 명령) [Administrative Order of September 6, 2016 on Signage for Tobacco Shops]	2016년 9월 6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주 예산장관)
담배 제품의 포장 단위에 대한 건강 경고 인쇄 절차, Vaping 제품, 담배 및 담배 롤링 종이가 아닌 공장에서 추출한 흡연 제 품에 관한 절차(2016년 5월 19일 행정 명령) [Administrative Order of May 19, 2016, Concerning Procedures for the Printing of Health Warnings on Packaging Units of Tobacco Products, Vaping Products, Smoking Products Derived from Plants Other than Tobacco and Cigarette Rolling Papers]	2017년 1월 1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우리의 건강시스템의 현대화에 대한 법률안 (LOI n° 2016-41 du 26 janvier 2016 de modernisation de notre système de santé)	2016년 1월 26일	사회보장·건강·여성 권리부

자료: 글로벌법률센터 홈페이지(담배규제법) <https://www.tobaccocontrolaws.org/legislation/factsheet>의 각
국의 자료 재구성, 인출일자 2018.11.25

제5절 캐나다

1867년에 제정된 캐나다의 헌법은 입법권을 캐나다 연방정부의회(Parliament of Canada)와 주의회(Legislatures of the Provinces)로 분배한다. 연방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사안에 대해 캐나다 전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 수 있으며, 주정부는 대개 주 거주민에 대해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서 관할권을 갖는다. 예를 들면, 연방정부는 담배 업계가 지켜야 하는 기준에 대한 법률이나 규제를 정하지만, 주정부는 주로 어디서 누가 담배를 필 수 있는지나 불법 담배의 유통과 소지에 대한 법률과 규제를 제정한다. 따라서 금연장소 규제는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로 주로 주나 시정부의 입법영역이기는 하지만 연방정부도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장소와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장소에 한해 금연 장소를 규제하고 있다. 만약 금연장소 규제가 연방, 주, 시정부 등 여러 단계에서 존재한다면 통상 가장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주나 시정부들은 공공장소와 일터 내에서는 대부분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가. 금연장소 규제 - 연방정부 규제

연방정부는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장소와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장소(이를테면 연방정부 건물 혹은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특정 공항들, 은행, 방송국 등)에 한해 금연 장소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연방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 장소들에 대해서는 ‘비흡연자의 건강에 관한 법률(Non-smokers’ Health Act)17)’로 정해진 흡연실을 제외하고는 금연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률이 영향을 미치는 장소들에 대해서는 정해진 흡연구역을 제외하고 금연이 의무화되었다. 이 법률은 1985년에 발의되어 1988년에 연방의 회를 통과하였으며 연방 인력 자원 개발부(The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가 관장하며 관련 규제에 대한 권한은 내각(Governor in Council)이 갖는다.

‘비흡연자의 건강에 관한 법률(Non-smokers’ Health Act)’ 이외에도 2003년 연방 정부는 Bill C-45(S.C. 2003, c.21)18)를 통해 ‘고용주는 작업장에서 피고용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적절히 제거해야 한다’라고 연방 형법(the Criminal

Code of Canada)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의 결과로 고용주가 ‘안전한’, 예를 들면 금연구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금연장소 규제 - 주(Province 혹은 Territory)정부 규제

거의 모든 경우, 주정부에서는 금연 장소에 대해 연방정부보다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1) 공공장소/사업장(레스토랑과 술집을 포함) 내에서의 금연 규제

모든 주에서는 실내 공공장소나 사업장에서의 흡연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흡연실이나 흡연구역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야외 공간

4개의 주와 1개의 준주, 또한 많은 시정부에서도 레스토랑과 술집에 있는 노천카페나 테라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7개의 주/준주와 많은 시에서는 학교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며,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 최초로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운동장과 공공 스포츠시설과 주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3) 아동을 동승하는 차량 내부

총 9개 주와 1개의 준주, 몇몇 시정부에서는 아동을 동승하는 차량 내부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4)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 관한 금연정책은 현재 보통 개별 건물이나 건물주의 재량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어떤 지역이나 시에서는 정부가 강제하기도 한다. Newfoundland and Labrador, Nova Scotia, Yukon 주정부 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빌딩에서는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타리오 주에서는 모든 공동주택에서의 공공장소(이클레먼트 주차장, 로비, 엘리베이터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 금연 장소 (FCTC 8조 Protect)

- 직장 및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제한은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 및 지방 정부 (캐나다는 10개 주 및 3개 영토)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연방법에 따라 모든 연방 정부 작업장에서 흡연은 주거 공간 및 교대 근무 중에 단 한 사람 만 정상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예: 차량 작업 공간)에 대한 몇 가지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다. 연방 규제 작업장에는 운송, 방송, 통신 및 은행 업무를 비롯한 특정 상업 부문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및 연방 정부기관(예: 군대, 캐나다 왕립 경찰, 크라운 기업, 연방 교도소)이 포함된다. 기타 사업장 및 공공장소는 지방, 영토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권에 속한다. 국가 별 법률에 따라 단체 생활 시설, 장기 요양 시설 및 지정된 호텔 객실의 지정된 흡연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실내공공장소 및 작업장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 담배 광고, 홍보 및 후원 (FCTC 13조 Enforce)

-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의 대부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담배 제품은 성인 전용 장소에서 지명된 성인에게 직접 우편으로 광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경 간 광고는 제한되지 않는다. 담배산업에 의한 후원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후원에 대한 홍보는 금지되어 있다.

○ 담배 포장 및 표시 (FCTC 11조~12조 Warn)

- 회전식 그림 건강 경고문은 주요 전시 영역의 75%를 차지해야 한다. 이 요구 사항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Bidis 및 무연 담배 제품은 텍스트 전용 경고를 표시해야 한다. 시가 번들 및 상자과 파이프 담배는 특정 글꼴 크기의 건강 경고를 전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주요 디스플레이 영역의 30 % 미만일 수 있다. "light"및 "ultra"및 기타 사인과 같은 용어를 포함하여 오도 된 포장 및 표시는 금지된다.

○ 담배 세금 및 가격 (FCTC 6조 Raise)

- 세계보건기구(WHO)는 소매가격의 7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를 인상할 것을 권고하였다. 캐나다의 담배 소비세는 이러한 권장 사항보다 낮다.

〈표 3-19〉 캐나다의 흡연 관련 정책

법률명	제정시기	주관기관(부처)
담배제품 관리 규정 (Tobacco Products Control Regulations)	1988. 12. 22.	보건부
비흡연자 건강법 (Non-smokers' Health Act, NSHA)	1989. 12. 29.	보건부
비흡연자 건강 규정 (Non-smokers' Health Regulations, NSHR)	1989. 12. 29.	보건부
담배법 (Tobacco Act)	1997. 4. 25.	법무부
담배 액세스 규정 (Tobacco Access Regulations)	1999. 2. 11.	보건부
담배(발작 및 회복) 규정 [Tobacco (Seizure and Restoration) Regulations]	1999. 2. 11.	보건부
담배보고 규정 (Tobacco Reporting Regulations)	2000. 6. 26.	보건부
담배제품 정보 규정 (Tobacco Products Information Regulations)	2000. 12. 23. (2011. 9. 22.)	보건부
2003년 담배제품 규정의 스탬프 및 표시 (Stamping and Marking of Tobacco Products Regulations, 2003)	2003. 8. 13.	국세청
담배점화 성향 규정 (Cigarette Ignition Propensity Regulations)	2005. 6. 7.	보건부
캐나다 교정 서비스, 국장지시 259, 간접 흡연에 대한 노출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Commissioner's Directive No. 259,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2008. 5. 5.	교정서비스국
담배제품 표시 규정(담배 및 리틀시가) (Tobacco Products Labelling Regulations (Cigarettes and Little Cigars))	2011. 9. 22.	보건부
담배제품 정보규정 개정 규정 (The Regulations Amending the Tobacco Products Information Regulations)	2011. 9. 22.	보건부
담배제품 및 부속품의 판촉 규정(금지조항) (Promotion of Tobacco Products and Accessories Regulations (Prohibited Terms))	2011. 9. 22.	보건부
담배제조 금지법 (Tackling Contraband Tobacco Act)	2014. 11. 6.	의회(하원)
담배법(멘솔) 개정주문 일정 [Order Amending the Schedule to the Tobacco Act (Menthol)]	2017. 10. 2.	보건부
담배 법 개정 및 비흡연자 건강 법 (Nonsmokers' Health Act) 및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법개정 [An Act to amend the Tobacco Act and the Nonsmokers' Health Act and to make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Acts]	2018. 5. 23.	보건부

자료: 글로벌법률센터 홈페이지(담배규제법) <https://www.tobaccocontrolaws.org/legislation/factsheet>의 각
국의 자료 재구성, 인출일자 2018.11.25

제6절 일본

일본에서는 2002년 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칸막이 없이 흡연석과 금연석을 나누는 이른바 ‘분연’이 실시되는 한편노상 또는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지자체도 다수 등장했지만, 규제의 취지가 윤리적인 측면, 즉 매너에 방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와중에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것을 계기로 간접흡연의 심각성이 광범위하게 환기되면서 실내흡연을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고, 실제로 전면금연, 시간대금연, 전면분연 등 자율조치에 나서는 업체 등이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일원화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간접흡연의 위해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인 실내금연 조치에는 무비판적으로 응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기인하며, 중앙정부나 동경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움직임과 관련 단체들의 엇갈린 행보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실내흡연 금지를 두고 사회 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²⁴⁾.

일본 전국 도도부현(시정촌) 가운데 최초로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제정한 곳은 홋카이도 비바이 시(美唄市)로, 의사회가 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시민검토위원회가 다방면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을 거쳤다. 비바이시는 담배 연기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2015년 12월에 「비바이시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7월부터 이를 시행했다. 아래 <표 3-19>에서 조례의 개요를 정리했다.

24) 더불어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논의에도 이목이 쏠린다. 전자담배는 아직 유해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데다 기존의 쉐련담배와는 다른 범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20〉 일본 비바이시 간접흡연 방지 조례의 개요

조항	항목	내용
1조	목적	① 담배 연기가 흡연자와 주변인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의 공유 ② 시민, 보호자, 사업자, 시설관리자 등의 역할을 규정해 미성년자 및 임산부 등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의 유지를 도모
2조	정의	① 담배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한 간접흡연의 용어 정의 ② 공공 공간 및 시설, 사업자, 시설관리자, 금연, 분연 등 관련 용어의 정의
3~6조	책무 및 역할	① 시의 책무: 환경정비, 정보제공, 관할 시설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 규정 ② 시민, 보호자, 사업자 및 시설관리자의 각자 역할 규정
7조	연계 및 협의	① 시민, 보호자, 사업자, 시설관리자와 시의 상호 연계 및 협동 규정
8조	간접흡연 방지 대책	① 제1종 시설(유치원, 학교, 보육원 기타 유사 시설, 병원 또는 진료소, 공공교통기관 이용 객의 사용시설과 전철 및 기타 차량, 고령자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유사시설, 공공시설)의 시설관리자에 대한 부지 내 금연 또는 시설 내 금연 조치 노력의 의무 규정 ② 제2종 시설(점포, 금융기관, 우편사업, 가스사업 및 열공급사업소, 기타 서비스업 시설, 동일 건물 내 복수 점포가 벽 등으로 구분돼 있지 않은 부분 등)의 시설관리자에 대한 시설 내 금연 또는 분연 조치 노력의 의무 규정. 미성년자 배려 차원에서 흡연 가능 구역에서 흡연 금지 구역으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고 흡연 금지 구역과 흡연 가능 구역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 규정
9조	미성년자에 대한 배려	① 미성년자의 흡연 가능 구역 및 흡연소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관리자 및 보호자의 노력 의무 규정 ② 아동, 학생의 등하교 시 교문 반경 100미터 이내 노상 및 공원 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흡연자의 노력 의무 규정
10조	흡연 중지 등의 요구	① 흡연 금지 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시설관리자의 흡연 중지 또는 해당 흡연 금지 구역의 퇴장을 요구하는 노력 의무 규정
11조	적용 제외	① 식품위생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한 음식점 영업 및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풍속영업 업무를 위한 공공 공간에 대한 예외 규정
12조	부칙	① 조례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장의 권한 규정

자료: 일본 비바이시 홈페이지(<http://www.city.bibai.hokkaido.jp>) 한국행정연구원 규제동향지 “이슈분석: 일본 간접흡연 및 전자담배 규제”, 2017년 겨울호 재구성

한편, 비바이 시는 조례 시행을 전후해 2015년부터 자치조직 대표자회의와 지구간담회, 식품페스타, 그리고 우편을 통해 간접흡연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쿄 도도 2017년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5,085명(전자메일 2,541명, 우편/팩스 2,544명)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방지 조례(가칭)의 기본안에 대한 의견을 모집해 총 16,927건의 회답을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규제 강화를 포함한 찬성은 6,464건, 일부 반대는 3,185건, 반대는 5,007건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자담배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규제해야 한다는 일부 반대 의견

과 실내금연 전면화와 실외 흡연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이처럼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결과는 도경도 복지보건국이 2017년 9월 8일에 내놓은 기본안 <표 3-21>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²⁵⁾.

<표 3-21> 일본 동경도 간접흡연 방지조례(대상시설 및 흡연금지 장소의 범위) 안

시설유형		내용	
의료시설		부지 내 금연 (미성년자 및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초·중·고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관공서		실내 금연(흡연전용실 설치 불가) 다수가 이용하며 다른 시설로 대체하기 어려운 시설	
노인복지시설			
대학, 체육관			
호텔, 여관(객실제외)		원칙상 실내 금연(흡연전용실 설치 가능) 이용자 측이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거나 기호성이 높은 시설	
직장 사업소			
오락시설, 백화점, 역, 공항청사			
음식점	식당, 라면집 등	<div>- 원칙상 실내 금연 (흡연전용실 설치 가능)</div> <div>- 이용자 측이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거나 기호성이 높은 시설</div>	<div>- 30제곱미터 이하로, 종업원이 없거나 모든 종업원이 동의한 가게, 미성년자 미출입 가게 (이용자의 선택을 위한 게시를 의무화하고 흡연금지 장소에서 제외)</div>
	술집 등		
	바, 스넥바 등		
버스, 택시, 항공기		차내 금연(흡연전용실 설치 불가)	
철도, 선박		원칙상 차내 금연(흡연전용실 설치 가능)	

자료: 동경도 홈페이지(<http://www.yokoso.metro.tokyo.jp/>) 동경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가칭)의 기본(안) 및 한국행정연구원 규제동향지 “이슈분석: 일본 간접흡연 및 전자담배 규제”, 2017년 겨울호 재구성

또한 노상흡연에 대한 금지조례도 2002년 건강증진법 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상흡연, 또는 보행 중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노상흡연 금지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동경도 지요다 구가 2002년에 제정한 「안전하고 쾌적한 지요다 구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는 연이어 유사한 조례

25) 이를 고려하여, 여당 자민당의 담배의원연맹은 위 기본안에 대해 음식점의 경우 업소 측이 금연/분연/흡연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되 해당 사실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학교나 체육관 등의 흡연전용실 설치를 허용하며, 버스나 택시도 전세 이용에 한해 흡연 등의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로 조례안의 통과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를 제정했지만, 강제성을 띠지 않는 노력 의무로 규정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그리고 지요다 구의 조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어디까지나 윤리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매너' 확립이 취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래 <표 3-22>에서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노상흡연금지 규제 현황을 재구성하였다.

<표 3-22> 일본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노상흡연금지 조례 규제 현황

지방자치단체명	시행일	조례명	내용
동경도 지요다 구	2002년 10월 1일 2002년 11월 1일 별칙 운용 개시	안전하고 쾌적한 지요다 구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지요다 구 생활환경 조례)	노상흡연에 대해 과태료(2천 엔)를 적용한 일본 최초 의 조례. 2010년 도부터 적용 제의 지역이었던 나가 타초, 가스미가세키, 우치사이와이초 도 적용 대상에 포함. 공원/차내/사 유지 등 적용 대상 예외 규정.
후쿠오카 현 후쿠오카 시	2003년 8월 1일 2003년 10월 1일 별칙 운용 개시	안전하고 쾌적하며 주민친화적인 마을 후쿠오카를 만드는 조례	텐진 및 하카타 역 주변을 노상흡연 금지 지구로 지 정. 위반 시 2만 엔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후 현 시라카와무라	2003년 봄	시라카와무라 담배꽂초 버리기 등 방지 조례	관광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세계유 산 오기마치 지구 약 45헥타르 내 재떨이 설치 장소 이외 흡연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도치기 현 넛코 시	2003년 5월 1일	환경미화 도시에 관한 조례	세계유산 등록 건물군 103채와 주위 산림 50.8헥타 르 내 보행 중 흡연 금지. 별칙 규정 없음.
동경도 도 스기나미 구	2003년 10월 1일	스기나미 구 생활안전 및 환경미화에 관한 조례	지정 지역 내 보행 중 흡연 금지. 위 반 시 과태료 징 수.
도야마 현 도야마 시	2003년 7월 1일 2005년 4월 1일 (신조례)	도야마 시 마을의 환경 미화 조례	시내 지정 노상금연 지역에서 보행 중 흡연 또는 담 배꽂초 투기를 할 경우 2만 엔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경도 오타 구	2004년 6월 1일 개정 시행	청결하고 아름다운 오타 구를 만드는 조례	기존 조례에 오타 구 전역의 보행 중 및 자전거 운전 중 흡연 금지 조항 추가. 구장이 정한 노상흡연 금지 구 역 내에서 조례를 위반하거나 담배 꽂초를 투기할 경우 1만 엔 이하 과 태료 부과.
동경도 시나가와 구	2003년 10월 1일	보행 흡연 및 담배꽂초 · 빈칸 등의 투기 방지에 관한 조례	아오모노요코초 역 등 지정 역사 4 곳 주변에 아침 저녁 2시간씩 지도 원 2~5명 순찰. 벌금 1천 엔.
지바현 사쿠라 시	2003년 10월 1일	사쿠라 시 쾌적한 생활 환경에 지장을 주는 민폐 행위의 방지에 관한 조례	역 주변을 흡연금지 구역으로 지정. 별칙 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명	시행일	조례명	내용
히로시마 현 히로시마 시	2003년 10월 1일 2004년 1월 별칙 운용 개시	히로시마 시 담배공초 버리기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	지정 「흡연제한구역」 내 노상흡연 및 「미화추진구역」 내 담배공초 등 의 투기 등 금지. 2004년 1월부터 2만 엔 이하 과태료 부과.
동경도 고가네이 시	2003년 12월 1일	고가네이 시 마을을 아름답게 하는 조례	노상금연지구 내 노상에서 흡연한 자는 2천 엔 이하 과태료 부과 명시.
오이타 현	2004년 4월 1일	아름답고 쾌적한 오이타 현 만들기 조례	보행 중 흡연 금지는 노력 규정으로 별칙 없음. 휴대 용 재떨이 지참 시 보행 중 흡연 가능.
동경도 이타바시 구	2004년 7월 1일 개정 시행	에코폴리스 이타바시 클린 조례	보행 중 흡연 담배공초 투기를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자료: 일본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한국행정연구원 규제동향지 “이슈분석: 일본 간접흡연 및 전자담배 규제”, 2017년 겨울호 재구성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7년 2월 현재 전국 1,741개 시구정촌 가운데 14%에 해당 하는 243개 지 자체에서 노상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한 상태로, 구체적으로는 ‘보행 중 흡연 금지’가 129건 (53%), ‘휴대용 재떨이 지참 시 흡연 허용’이 96건(40%), 그리고 ‘재떨이 설치 장소 및 사유지 내 흡연 허용’이 162건(67%)로 조사됐다²⁶⁾.

또한 일본에서는 대중교통수단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2017년 3월에 특정자동차(버스, 택시)와 특정항공기에 대해 서는 차내 금연을 실시하고, 특정철도 등 차량과 특정 선박에 대해서는 차내 금연을 실 시하되 흡연전용실의 설치를 허용 한다는 내용의 기본안을 통해 후생노동성령이 정하 는 기술적 기준을 충족시킨 전용실을 도도부 현의 지사나 보건소가 설치된 시의 시장 이 지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택시의 전면금연은 2007년 6월 오이타 현에서 도입된 이후 2011년 7월 1일부터 일본 전역에서 실시돼 왔지만, 법률상 근거 가 되는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운수규칙’은 어디까지나 승무원에 대해 승객이 탑승 중인 차내 흡연 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며, 승객을 포함한 전면금연은 강제성을 지니지 않는다. 이런 측면 은 건강증진법 제25조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것과 맞닿아 있다. 다만 가나가와 현에서는 2010년 4월 1일 부터 「가나가와 현 공공적 시설 내 간접흡연 방지 조례」에 따라 택시가 제1종 금연시 설로 지정돼 위반 시 2만 엔의 과태료가 부 과된다. 일본 국내의 정기 노선버스는 장거

26) 한국행정연구원 규제동향지 “이슈분석: 일본 간접흡연 및 전자담배 규제”, 2017년 겨울호

리 노선을 포함해 모두 금연이며, 금연 표시된 버스 안에서 흡연할 경우 도로운송법 28조 위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수규칙 제53조 6호 위반)으로 동 법 104조 3호에 의거해 2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항공기의 경우 2001년 이후부터 일본을 발착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의 금연이 실시되었고, 2004년 1월 15일부터 개정 항공법에 따라 기내 화장실 내 흡연에 대해 기장이 내린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선박은 금연이 지정된 곳에서 흡연할 경우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특히 가나가와 현을 발착하는 여객선은 금연으로 조례 위반 시에는 2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흡연실 설치 가능). 그리고 철도는 2015년 현재 도카이도, 산요, 규슈 신칸센, 일부 침대열차를 제외하고는 전면금연을 실시하고 있고, 철도영업법에 의거해 정차장이나 금연 구역 및 차량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가나가와 현이나 효고 현과 같이 간접흡연 방지와 관련된 별도 조례에 따라 2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최근 급증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진행되고 있다. 다만, 관련 주체들의 사정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일본의 전자담배 규제는 아직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걸음마 단계에 있으며,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2017년 12월 20일 후생노동성은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증진법 개정과 관련 해, 전자담배도 원칙상 금연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분연 체제가 갖춰진 음식점에 한해 흡연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후생노동성은 2018년 초에 개정안을 종합해 공표할 예정이었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궐련담배보다는 느슨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후생노동성의 계획에 따르면, 병원이나 학교,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전자담배는 원칙상 궐련담배와 동일한 금연 대상이지만, 연기가 새지 않는 공간에 환기설비를 갖추는 등 기준을 충족시킨 「흡연실」을 마련하면 식사 중 흡연을 허용하는 한편, 궐련담배는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한 「흡연전용실」에서만 흡연이 가능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장래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모이면 재차 규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점포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 또는 자본금이 일정액 이하인 가게일 경우 흡연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자민당과 조정 중이며, 신규 개업 또는 대형 체인점 점포는 흡연실 또는 흡연전용실을 마련해야만 흡연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 등 모든 의약품 등에 대해 약사법을 적용

하고 있기 때문에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이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경우 후생노동성의 허가 없이는 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단,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개인이 해외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전자담배에 한해 흡연을 허용하는 업체도 다수 등장했다. 후생노동성은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이전 시행을 목표로 내년 일반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²⁷⁾.

○ 금연 장소 (FCTC 8조 Protect)

- 국가 차원에서 흡연은 실내 공공 장소, 작업장 또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법으로 금지되거나 금지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많은 곳에서 흡연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 금연 구역을 다루는 유일한 국내법은 벌금 조항 없이 담배 연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 관리자 또는 고용주가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거나 “시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침을 위한 토대. 하위 국가 차원에서 2개의 큰 현에서는 비공식에 대한 별칙이 부과되는 실내 공공 장소에 대한 금연 법령을 제정하고, 혼잡 한 옥외 도시 거리 및 보도는 전국적으로 공통이다.

○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FCTC 13조 Enforce)

-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일부 제한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을 금지하고 있다.
-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제한은 광고주가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흡연을 권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는 담배 사업법에 따라 “업계 자체 규제”의 한 형태로 작동한다.

○ 담배 포장 및 표시 (FCTC 11조~12조 Warn)

- 하나 이상의 텍스트 전용 진술은 담배 포장의 주요 영역의 30 %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오도 된 설명자는 금지되지 않다.

27) 한국행정연구원 규제동향지 “이슈분석: 일본 간접흡연 및 전자담배 규제“, 2017년 겨울호

- 그러나 “low tar”, “light”, “ultra light” 또는 “mild”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제품보다 적지 않은 언어도 사용해야 한다.

○ 담배 세제 및 가격 (FCTC 6조 Raise)

- 세계 보건기구 (WHO)는 소매 가격의 7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담배 소비 세를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일본의 담배 소비세는 이러한 권장 사항보다 낮다.

〈표 3-23〉 일본의 담배 관련 정책

법률명	제정시기	주관기관(부처)
미성년자의 흡연(꺾연) 금지법(1900년 제33호) [Act Prohibiting Smoking by Minors, No. 33 of 1900]	1900. 4. 1.	경제산업성
노동기준법 (1947년 4월 7일 제49호) (Labor Standards Act, No. 49 of April 7, 1947)	1900. 4. 7.	노동성
도도부 현 및 시립 담배 세, 지방 담배세에 대한 세율에 관한 기본 조례 (Basic Ordinances Concerning Tax Rates for Prefectural and Municipal Tobacco Taxes, Local Tobacco Tax)	1900. 5.	각 지자체
담배세 및 특별 담배세에 대한 세율에 관한 기본 조례, 소비세에 대한 세율 (Basic Ordinances Concerning Tax Rates for Tobacco Taxes and Special Tobacco Taxes, Tax Rates for the Consumption Tax)	1900. 5. 7.	재무성
산업안전보건법 VII-2 장,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1972년 6월 8일자 법 No. 57)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Chapter VII-2, Measures for Creating a Comfortable Work Environment(Act No. 57 of June 8, 1972)]	1972. 6. 8.	후생노동성
담배사업법 (1984년 제68호) (Tobacco Business Act, Act No. 68 of 1984)	1984. 8. 10.	재무성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정책 (1992년 7월 1일, 노동부 고시 제59호) [Policies Concerning Measures to be Taken by Employers to Create a Comfortable Work Environment (July 1, 1992) (Ministry of Labour, Health, and Welfare Notification No. 59)]	1992. 7. 1.	후생노동성
건강증진법 (2002년 제103호) Health Promotion Act(No. 103 of 2002)	2003. 5. 1.	후생노동성
작업장에서의 수동 흡연 방지 지침 (2003년, 후생노동성 후생노동 대신 지침 제 0509001호)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Directive to Prefectural Undersecretaries No. 0509001, Guidelines	2003. 5. 9.	후생노동성

법률명	제정시기	주관기관(부처)
on Passive Smoking Prevention Measures in the Workplace (2003)		
담배 사업법 시행 규칙 (2003년 재무부 부령 제 103호에 따라 개정) [Regulations for Tobacco Business Act Implementation (as amended by 2003 Ministry of Finance Ordinance No. 103)]	2003. 11. 13.	재무성
담배 광고에 관한 지침(재무부 고시 제109호) (Ministry of Finance Notification No. 109, Guidelines on Advertisements Concerning Tobacco)	2004. 4. 1.	재무성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Ministerial Ordinance to Amend the Tobacco Business Act)	2005. 6.	재무성
관련 부처 및 기관 담배 대책 조정위원회 (Related-Ministries-and-Agencies Coordinating Committee for Tobacco Countermeasures)	2005. 6. 15.	일본정부 (담배 대책 조정위원회)
건강서비스국 (HSB) 통지 0225 2호 [Health Service Bureau (HSB) Notification 0225 Number 2]	2010. 2. 25.	후생노동성
관세율, 관세에 관한 기본 조례 [Basic Ordinances Concerning Custom Duty Rates, Tariffs]	-	재무성(지자체)

자료: 글로벌법률센터 홈페이지(담배규제법) <https://www.tobaccocontrolaws.org/legislation/factsheet/>의 각국의 자료 재구성, 인출일자 2018.11.25.

제7절 시사점

WHO의 FCTC는 각 나라의 흡연 관련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는 나라 중 하나로, 흡연 욕구를 낮추고자 2013년부터 담배갑의 포장을 단순화하는 ‘무광고포장법(Plain Packaging)’을 처음 시행하였다. 또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를 인식하고, 어린이가 동승할 경우 차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개인 공간에서의 금연을 도입하였다. 호주는 강력한 금연정책에 따라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호주의 금연 관련 정책은 보건부를 중심으로 공중보건법, 담배 무광고포장법 등을 통해 연방차원의 강한 금연의지를 실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항, 무역, 방송광고, 상표 등 관련 법률을 통해 담배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FCTC를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2009년 오바마 정부에서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통해 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유해성분 기준 설정, 담배제조 사전승인, 경고문 표시 및 광고 규제, 담배제품에 'mild, light' 등 표시 금지,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담배(flavored cigarettes) 판매를 금지 등 포괄적인 담배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보건부의 식품의약국에 담배 정책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식품의약국에서 담배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한편 흡연자 금연정책으로 청소년의 흡연개시율을 낮추고, 니코틴 의존성 치료에 메디케이드 보증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 주 정부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 병원, 치과병원, 약물치료시설 등 보건시설에서의 담배차단장치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미국 또한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는 항공, 교통, 법무, 농림, 재무부, 우정청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흡연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이며, 주요 법률로는 보건법(Health Act)이 있으며 이외 다수의 규정(예: 담배광고 및 판촉법(The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을 두고 있다. 담배 관련 정책은 주로 보건부가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담배 관련 정책 또한 무광고 담배 포장을 도입하고, 향료 사용 금지, 담배 제품 광고 금지 등 FCTC이행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또 담배소비세를 인상함으로써 흡연을 억제하고자 하며, 금연헬프라인 운영 등을 통해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담배규제 방안으로 가격정책은 주로 「조세일반법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가격정책은 「공중보건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2001/37/CE 지침」과 「공중보건법전」을 근거로 하여 발표한 「2003년 3월 5일의 아레테」에서 담배제품의 성분 기준 설정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1년 12월 1일의 아레테」를 통해서 담배제품의 생산에 사용한 모든 성분들과 그 양을 보건 담당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담배규제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담배규제법(Tobacco Control Act) 및 규정을 책임지고, 5개 지역별 보건당국은 주 정부 법 및 규정을 집행하는 형태이다. 담배관리 방안으로 가격정책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담배세법(Tobacco Tax Act)」 및 담배세법 규정으로 책 임관리하고 있고, 보건부가 비가격정책으로, 「담배법」, 「비흡연자 건강 법」, 「비흡연자 건강 규정」 및 「담배제품 관

리 규정」, 「담배제품 정보 규정」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담배규제는 재무성에서 「담배세법」, 「담배사업법」, 「일본담배주식회사법」, 「담배경작조합법」 등으로 제조허가, 광고, 경고문구 등 담배관련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의 「건강증진법」을 통한 간접흡연 방지와 경제산업성의 「미성년자 흡연방지법」에 의한 친권자처벌 조항처럼 부모에게 자녀들의 흡연에 대해 책임을 지워 가정에서의 철저한 금연지도를 유도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및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담배가격정책 및 비가격정책을 통해 흡연 및 간접흡연에 대한 위험 인식을 크게 증가시켜왔으며, 흡연구역 확대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점차 확대하는 등 금연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차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제외국의 금연정책 동향을 근거로 지속적인 금연정책을 확대시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4 장

담배규제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제1절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제2절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인 인식조사

4

담배규제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

담배규제정책에 관한 인식조사는 전문가 대상조사와 일반인 인식조사 등 두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전문가조사는 담배규제정책과 정책효과저해요인 등에 관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렴하였다. 일반인 인식조사는 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의 행동과 인식을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절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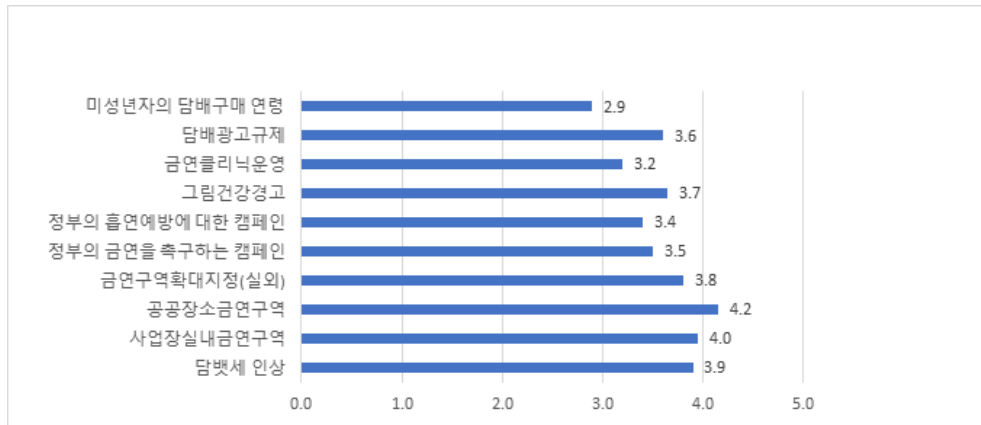
1. 조사개요

2018년 11월 담배 관련 연구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서면자문을 실시하였다. 총 20명이 서면자문에 응하였고 담배규제정책이 효과성 있게 지속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2. 조사결과

최근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남자성인흡연율(2017년 기준, 38.1%)은 OECD국가 중에서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청소년 흡연율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가향담배, 전자담배가 미성년자의 흡연을 조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 흡연자의 금연의향을 감속시킬 수 있다는 데에는 엇갈린 의견이 있었다. 지난 3년간 담배규제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균적 의견은 공공장소 실내금연구역, 사업장 실내금연구역 정책에 가장 많이 모아졌다. 미성년자 담배구매 연령규제정책에 대한 성과는 가장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금연클리닉운영도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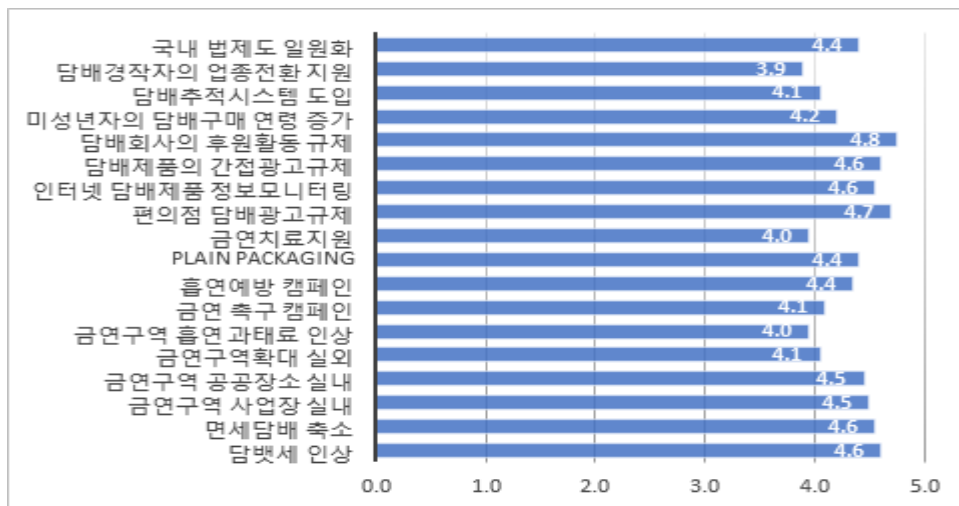
[그림 4-1] 지난 3년간 담배규제정책의 성과 요인



주: 전체항목평균은 5점만점에 3.6임.

세계보건기구의 FCTC의 이행을 위해서 향후 5년간 강화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담배 회사의 후원활동규제,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등 담배회사의 판촉활동에 대한 규제가 가장 중요한 규제대상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담뱃세 인상과 금연구역의 지속적인 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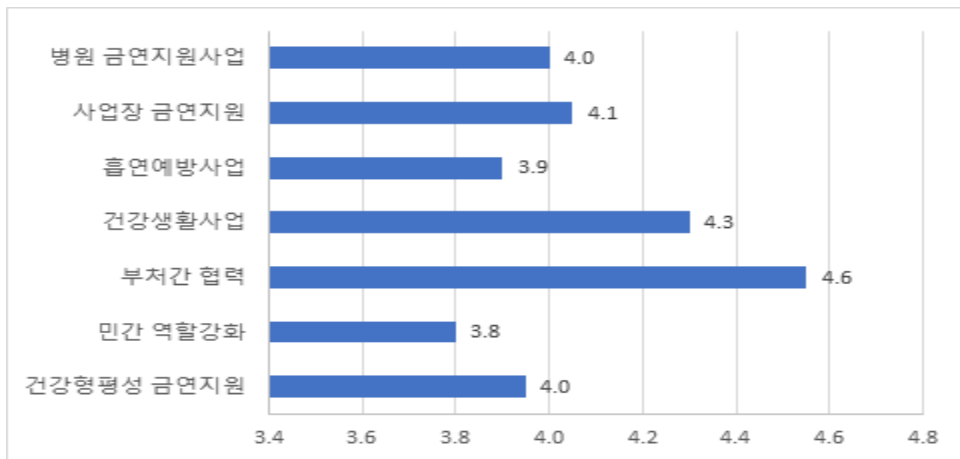
[그림 4-2] FCTC의 이행을 위해서 향후 5년간 강화되어야 할 정책 10가지



주: 전체항목평균은 5점만점에 4.3임.

우리나라국민의 흡연율 감소를 위한 주요 정책요소는 중앙부처간에 협력을 통한 노력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같이 전반적인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금연생활을 유도하는 것에 또한 많은 의견이 모아졌다.

[그림 4-3] 흡연을 감소를 위한 정책요소



주: 전체항목평균은 5점만점에 4.1임.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과제는 담뱃값 추가 인상, 청소년 담배구매금지제도를 실효성 있게 단속을 강화해야 하고 대학생 흡연예방사업이 조속히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종담배의 진입규제 또는 차단, 흡연예방 및 금연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편의점 광고규제, 온라인을 통한 담배마케팅 근절 등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었다. 금연구역 확대와 단속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담배제품에 추가되는 가향물질과 기타 첨가물을 규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첨가물질을 등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신종담배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금연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2절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인 인식조사

설문지 구성은 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설문항목을 개발하였고 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공통질문으로 구성하였다.

- 담배의 제조형태, 표시성분에 따른 일반인의 소비욕구와 소비행태
- 담배의 유통, 광고, 판촉, 후원과 관련된 인식과 경험 및 소비행태
- 신종 전자담배의 사용경험과 건강영향에 대한 오도성 인식정도
- 미성년자 담배구매 관련 현행규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온라인 조사 응답자는 19세~49세로 총 5,280명이었다. 흡연자 3,221명, 과거흡연자 1,171명, 비흡연자 888명이었다.

응답자의 지역별 구성은 대도시 51.7%, 중소도시 45.7%, 농어촌 2.6% 등이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 21.4%, 대학교 69.3%, 대학원졸이상 9.4% 등이었다. 직업별로는 비생산직(사무직, 서비스업 등) 70.2%, 생산직 10.4%, 기타(학생, 주부, 무직) 19.4% 등이었다. 개인이 속한 가구의 평균월소득은 300만원이하 31.8%, 301-500만원 40.7%, 501만원이상 27.5% 등이었다.

〈표 4-1〉 온라인 설문조사대상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체		구분					
				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 체		(5280)	100.0	(3221)	100.0	(1171)	100.0	(888)	100.0
성별	남	(4187)	79.3	(2767)	85.9	(979)	83.6	(441)	49.7
	여	(1093)	20.7	(454)	14.1	(192)	16.4	(447)	50.3
연령	19~29세	(1516)	28.7	(970)	30.1	(251)	21.4	(295)	33.2
	30~39세	(1920)	36.4	(1132)	35.1	(522)	44.6	(266)	30.0
	40~49세	(1844)	34.9	(1119)	34.7	(398)	34.0	(327)	36.8
지역별	대도시	(2731)	51.7	(1708)	53.0	(579)	49.4	(444)	50.0
	중소도시	(2413)	45.7	(1445)	44.9	(553)	47.2	(415)	46.7
	농어촌	(136)	2.6	(68)	2.1	(39)	3.3	(29)	3.3

구 분		전체		구분						
				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가족수(평균)		3.0		3.0		3.0		3.1		
거주유형	아파트	(3380)	64.0	(2075)	64.4	(730)	62.3	(575)	64.8	
	기타	(1900)	36.0	(1146)	35.6	(441)	37.7	(313)	35.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29)	21.4	(691)	21.5	(224)	19.1	(214)	24.1	
	대학교 졸업	(3657)	69.3	(2243)	69.6	(822)	70.2	(592)	66.7	
	대학원 졸업 이상	(494)	9.4	(287)	8.9	(125)	10.7	(82)	9.2	
직업	비생산직	(3707)	70.2	(2363)	73.4	(849)	72.5	(495)	55.7	
	생산직	(549)	10.4	(347)	10.8	(131)	11.2	(71)	8.0	
	기타 (군인/학생주부/무직)	(1024)	19.4	(511)	15.9	(191)	16.3	(322)	36.3	
근로 형태	정규직	(3186)	84.7	(2042)	86.1	(722)	83.3	(422)	81.2	
	비정규직	(574)	15.3	(331)	13.9	(145)	16.7	(98)	18.8	
결혼 상태	기혼	(2427)	46.0	(1407)	43.7	(653)	55.8	(367)	41.3	
	기타 (미혼/별거/이혼/사별)	(2853)	54.0	(1814)	56.3	(518)	44.2	(521)	58.7	
가정월소 득	~300만원	기초수급	(67)	1.3	(38)	1.2	(10)	0.9	(19)	2.1
		일반	(1610)	30.5	(946)	29.4	(366)	31.3	(298)	33.6
	301만원~500만원		(2151)	40.7	(1311)	40.7	(498)	42.5	(342)	38.5
	501만원~		(1452)	27.5	(926)	28.7	(297)	25.4	(229)	25.8

〈표 4-2〉 남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 분		전체		구분						
				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 체		(4187)	100.0	(2767)	100.0	(979)	100.0	(441)	100.0	
연령	19~29세	(1157)	27.6	(813)	29.4	(190)	19.4	(154)	34.9	
	30~39세	(1554)	37.1	(975)	35.2	(454)	46.4	(125)	28.3	
	40~49세	(1476)	35.3	(979)	35.4	(335)	34.2	(162)	36.7	
지역별	대도시	(2174)	51.9	(1480)	53.5	(484)	49.4	(210)	47.6	
	중소도시	(1915)	45.7	(1230)	44.5	(465)	47.5	(220)	49.9	
	농어촌	(98)	2.3	(57)	2.1	(30)	3.1	(11)	2.5	
가족수(평균)		3.0		3.0		3.0		3.0		
거주유형	아파트	(2724)	65.1	(1812)	65.5	(627)	64.0	(285)	64.6	
	기타	(1463)	34.9	(955)	34.5	(352)	36.0	(156)	35.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25)	19.7	(537)	19.4	(168)	17.2	(120)	27.2	
	대학교 졸업	(2952)	70.5	(1970)	71.2	(703)	71.8	(279)	63.3	
	대학원 졸업 이상	(410)	9.8	(260)	9.4	(108)	11.0	(42)	9.5	
직업	비생산직	(3008)	71.8	(2043)	73.8	(730)	74.6	(235)	53.3	
	생산직	(507)	12.1	(329)	11.9	(120)	12.3	(58)	13.2	
	기타 (군인/학생주부/무직)	(672)	16.0	(395)	14.3	(129)	13.2	(148)	33.6	
근로 형태	정규직	(2676)	86.5	(1816)	87.3	(639)	85.2	(221)	83.4	
	비정규직	(418)	13.5	(263)	12.7	(111)	14.8	(44)	16.6	
결혼 상태	기혼	(1911)	45.6	(1218)	44.0	(542)	55.4	(151)	34.2	
	기타 (미혼/별거/이혼/사별)	(2276)	54.4	(1549)	56.0	(437)	44.6	(290)	65.8	
가정월소 득	~300만원	기초수급	(50)	1.2	(28)	1.0	(9)	0.9	(13)	2.9
		일반	(1248)	29.8	(787)	28.4	(295)	30.1	(166)	37.6
	301만원~500만원		(1740)	41.6	(1148)	41.5	(430)	43.9	(162)	36.7
	501만원~		(1149)	27.4	(804)	29.1	(245)	25.0	(100)	22.7

〈표 4-3〉 여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 분		전체		구분						
				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 체		(1093)	100.0	(454)	100.0	(192)	100.0	(447)	100.0	
연령	19~29세	(359)	32.8	(157)	34.6	(61)	31.8	(141)	31.5	
	30~39세	(366)	33.5	(157)	34.6	(68)	35.4	(141)	31.5	
	40~49세	(368)	33.7	(140)	30.8	(63)	32.8	(165)	36.9	
지역별	대도시	(557)	51.0	(228)	50.2	(95)	49.5	(234)	52.3	
	중소도시	(498)	45.6	(215)	47.4	(88)	45.8	(195)	43.6	
	농어촌	(38)	3.5	(11)	2.4	(9)	4.7	(18)	4.0	
가족수(평균)		3.1		3.0		2.9		3.2		
거주유형	아파트	(656)	60.0	(263)	57.9	(103)	53.6	(290)	64.9	
	기타	(437)	40.0	(191)	42.1	(89)	46.4	(157)	35.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4)	27.8	(154)	33.9	(56)	29.2	(94)	21.0	
	대학교 졸업	(705)	64.5	(273)	60.1	(119)	62.0	(313)	70.0	
	대학원 졸업 이상	(84)	7.7	(27)	5.9	(17)	8.9	(40)	8.9	
직업	비생산직	(699)	64.0	(320)	70.5	(119)	62.0	(260)	58.2	
	생산직	(42)	3.8	(18)	4.0	(11)	5.7	(13)	2.9	
	기타 (군인/학생주부/무직)	(352)	32.2	(116)	25.6	(62)	32.3	(174)	38.9	
근로 형태	정규직	(510)	76.6	(226)	76.9	(83)	70.9	(201)	78.8	
	비정규직	(156)	23.4	(68)	23.1	(34)	29.1	(54)	21.2	
결혼 상태	기혼	(516)	47.2	(189)	41.6	(111)	57.8	(216)	48.3	
	기타 (미혼/별거/이혼/사별)	(577)	52.8	(265)	58.4	(81)	42.2	(231)	51.7	
가정월소 득	~300만원	기초수급	(17)	1.6	(10)	2.2	(1)	.5	(6)	1.3
		일반	(362)	33.1	(159)	35.0	(71)	37.0	(132)	29.5
	301만원~500만원		(411)	37.6	(163)	35.9	(68)	35.4	(180)	40.3
	501만원~		(303)	27.7	(122)	26.9	(52)	27.1	(129)	28.9

담배제품 사용유형은 남자 흡연자의 경우 일반담배(궐련)사용이 82%였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5.7%였다. 가향담배를 사용하는 지에 대한 질문항목에 대해서는 궐련사용자 40%, 궐련형 전자담배사용자 44.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4-4〉 남자 현재흡연자의 담배제품별 사용현황

(단위 : 명, 행N%)

		사례수	일반담배(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전자담배	기타
전체		(2767)	82.0	15.7	2.2	0.1
연령	19-29세	(813)	83.1	13.5	3.2	0.1
	30-39세	(975)	78.3	19.9	1.8	0.0
	40-49세	(979)	84.9	13.3	1.6	0.2
거주지	대도시	(1480)	83.2	15.0	1.8	0.0
	중소도시	(1230)	80.2	16.7	2.8	0.2
	농어촌	(57)	89.5	10.5	0.0	0.0

(단위 : 명, %)

	사례수	가향담배 사용여부			평균 니코틴함량 (mg)	평균 타르 함량(mg)
		아니오	예	모름		
일반담배(궐련)	(2270)	56.4	40.1	3.5	0.29	3.12
궐련형전자담배	(434)	49.5	44.5	6.0		
전자담배	(60)	46.7	41.7	11.7		
기타	(3)	100.0	0.0	0.0		

여자 흡연자의 담배제품 사용유형은 일반담배(궐련)가 86%, 궐련형 전자담배 11%였다. 가향담배사용에 대해서는 궐련사용자 45%, 궐련형 전자담배사용자 4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4-5〉 여자 현재흡연자의 담배제품별 사용현황

(단위 : 명, 행N%)

		사례수	일반담배(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전자담배	기타
전체		(454)	85.9	11.2	2.9	0.0
연령	19-29세	(157)	91.1	6.4	2.5	0.0
	30-39세	(157)	84.1	13.4	2.5	0.0
	40-49세	(140)	82.1	14.3	3.6	0.0
거주지	대도시	(228)	82.9	14.5	2.6	0.0
	중소도시	(215)	88.4	8.4	3.3	0.0
	농어촌	(11)	100.0	0.0	0.0	0.0

(단위 : 명, %)

	사례수	가향담배 사용여부			평균 니코틴함량 (mg)	평균 타르 함량(mg)
		아니오	예	모름		
일반담배(궐련)	(390)	47.4	45.1	7.4	0.28	3.13
궐련형전자담배	(51)	43.1	49.0	7.8		
전자담배	(13)	15.4	76.9	7.7		
기타	-	0.0	0.0	0.0		

흡연자의 흡연시작연령은 남자 19.2세, 여자 19.9세였다. 하루 평균 흡연량은 일반담배(궐련) 12.5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13.8개비였다. 주된 흡연장소는 건물의 흡연장소 71%, 건물내 흡연실 32%, 길거리 28% 등이었다. 전자담배를 사용할 때 전자기기로 인한 손상경험은 7%였다. 일반담배(궐련)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브랜드스위치를 해본 경험률은 37%였고, 브랜드 스위치의 주된 이유는 냄새가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56%였다.

흡연자의 66%는 흡연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해 보았다. 본격적인 금연시도경험은 46.4%였다. 금연하려는 주된 이유는 본인의 건강 61%, 주변인의 간접흡연 우려 17% 등이었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면세담배를 더 구매했다는 응답은 41%였다.

〈표 4-6〉 흡연자의 흡연행동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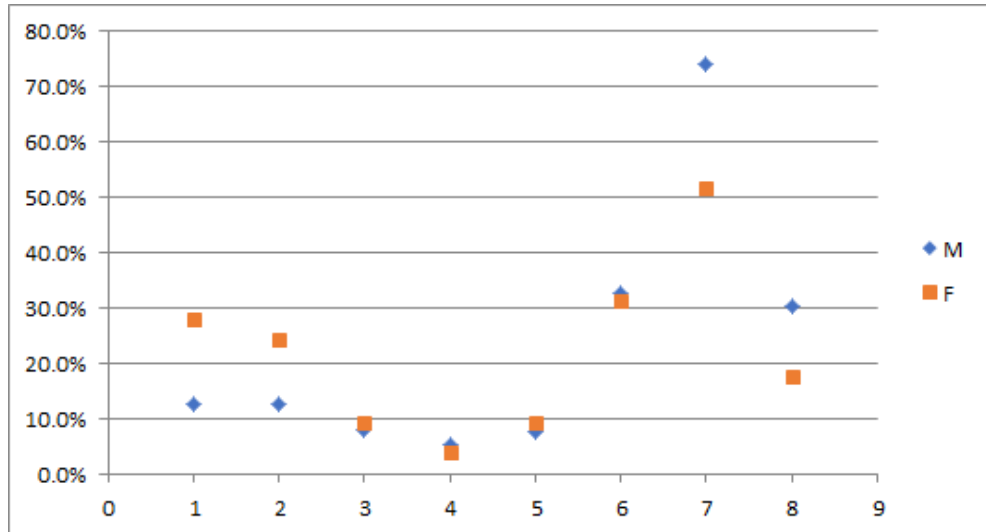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N)	분포	표준편차
전 체		(3221)		
처음 흡연시작 평균연령	남	(2767)	19.2	3.0
	여	(454)	19.9	4.7
처음 담배한개비를 다 피운 평균연령	남	(2767)	19.7	3.0
	여	(454)	20.7	4.8
하루 흡연량(개비) 평균	일반담배	(2660)	12.5	8.5
	궐련형 전자담배	(485)	13.8	8.2
주된 흡연장소	가정실내 화장실	(477)	14.8%	
	가정실내 베란다	(463)	14.4%	
	이외의 가정 실내 공간	(263)	8.2%	
	사업장 실내사무실	(164)	5.1%	
	건물 화장실 또는 복도, 계단	(257)	8.0%	
	건물내 흡연실	(1043)	32.4%	
	건물 외 흡연실(흡연장소)	(2283)	70.9%	
	길거리	(919)	28.5%	
전자기기의 손상경험자 비율		(230)	7.1%	
브랜드 스위치 경험	일반=>전자	(1200)	37.3%	
	전자=>일반	(178)	5.5%	
흡연량 감량 시도 경험		(2116)	65.7%	
저니코틴/저타르담배 사용		(1148)	35.6%	
가향담배 사용		(1339)	41.6%	
면세담배구매사용		(1316)	40.9%	
브랜드 스위치 이유	일반=>전자	향기(맛) 때문에	(138)	11.5%
		냄새가 없을 것 같아서	(673)	56.1%
		건강에 해가 덜할 것 같아서	(361)	30.1%

구 분		사례수(N)	분포	표준편차
	전자=>일반	기타	(28)	2.3%
		향기(맛) 때문에	(62)	34.8%
		냄새가 없을 것 같아서	(67)	37.6%
		건강에 해가 덜할 것 같아서	(34)	19.1%
		기타	(15)	8.4%
금연의향		1개월 안에	(455)	14.1%
		3개월 안에	(463)	14.4%
		6개월 안에	(433)	13.4%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1094)	34.0%
		현재로는 전혀 생각이 없다	(776)	24.1%
금연시도경험		(1493)	46.4%	
금연시도 이유		흡연장소가 줄어들었거나 없어서	(85)	5.7%
		본인의 건강에 대한 염려로	(914)	61.2%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간접흡연)	(252)	16.9%
		담뱃값이 부담되서	(198)	13.3%
		금연공익광고(TV,라디오)	(14)	0.9%
		담뱃값의 경고문구를 보고	(13)	0.9%
		기타	(17)	1.1%
금연시도시 방법		간식 및 군것질	(207)	13.9%
		그냥 피우지 않기	(801)	53.7%
		금연 보조제/약 이용	(198)	13.3%
		금연관련 서비스/프로그램	(82)	5.5%
		물 마시기	(27)	1.8%
		비구매 및 폐기	(58)	3.9%
		운동	(21)	1.4%
		전자담배	(34)	2.3%
		절연	(52)	3.5%
		흡연장소 피하기	(10)	0.7%
		기타	(47)	3.2%

흡연자의 주된 흡연장소는 남녀별로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가정실내화장실, 가정실 내베란다, 건물내 화장실, 복도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성은 건물의 흡연실, 길거리에서 피우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그림 4-4).

[그림 4-4] 흡연자의 성별 흡연장소 비교



주: 1. 가정실내화장실 *** 2. 가정실내베란다*** 3. 기타 가정실내, 4. 직장실내사무실, 5. 건물화장실복도, 6. 건물내 흡연실, 7. 건물의 흡연실***, 8. 길거리***
 평균비교시 통계적 유의성 *** $p < .0001$

과거흡연자의 과거 일일흡연량은 12개비였다. 과거 흡연기간은 평균 28개월이었으나 편차가 컸다. 과거흡연자의 주된 금연방법은 스스로 금연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4-7〉 과거흡연자의 과거흡연행동 특성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N)	분포	표준편차
전 체		(1171)		
처음 흡연시작 평균연령	남	(979)	18.1	3.1
	여	(192)	19.0	3.6
처음 담배한개비를 다 피운 평균연령	남	(979)	18.8	2.6
	여	(192)	19.7	3.7
과거 흡연량 평균 (개비)		(1171)	12.1	8.4
과거흡연기간 (개월)		(1171)	28.0	65.2
전자기기의 손상경험자 비율		(56)	4.8%	
금연시도 횟수		(1171)	4.0	9.2
금연시도시 방법	간식 및 군것질	(120)	10.2%	
	그냥 피우지 않음	(670)	57.2%	
	금연 보조제/약품 이용	(88)	7.5%	
	금연 관련 서비스/프로그램 이용	(32)	2.7%	
	물 마시기	(24)	2.0%	

구 분	사례수(N)	분포	표준편차
비구매 및 폐기	(26)	2.2%	
운동	(24)	2.0%	
전자담배	(32)	2.7%	
절연	(13)	1.1%	
흡연장소 피하기	(9)	0.8%	
다른일몰두/취미생활	(6)	0.5%	
절주	(19)	1.6%	
지인 도움	(19)	1.6%	
기타	(107)	9.1%	
잘 모름	(4)	0.3%	

담배제품을 선택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에서 가향성분 60%, 디자인 15% 등이었다. 가향성분요인의 영향은 여성에게 더 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표 4-8〉 담배제품 선택의 요소

(단위: 명, %)

구 분(1순위)	사례수(N)	전체	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남	여	남	여	남	여
전 체	(528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디자인	(787)	14.9	13.1	9.9	15.7	13.5	24.5	20.4
타르함량	(580)	11.0	14.4	9.0	7.0	6.8	7.9	5.4
니코틴함량	(701)	13.3	13.7	13.4	12.9	14.1	12.0	12.3
가향성분	(3156)	59.8	57.7	66.7	63.3	65.1	53.3	61.7
기타	(56)	1.1	1.1	0.9	1.0	0.5	2.3	0.2

인터넷 블로그의 담배정보 노출은 전체 9%수준으로 낮았으나, 인터넷 담배관련 상품판매가 흡연욕구를 증가시킨다는 것이 여자 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에서 높았다. 새로운 담배제품이 고시되는 것을 보고 흡연욕구가 생긴다는 응답도 여자 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등에서 높았다.

인터넷 오락매체에서 흡연장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2%였다.

편의점 가판대의 광고가 흡연욕구를 더 증가시킨다는 응답이 여성흡연자와 과거흡연자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진열된 담배에 대한 구매욕구는 여성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여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담배경작자의 전환 지원필요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담배제조와 생산을 친환경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흡연자집단에서 높았다. 담배산업의 환경유해성에 대한 인식개선교육홍보가 필요하다.

〈표 4-9〉 담배 광고판촉후원정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N)	전체	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남	여	남	여	남	여
인터넷블로그정보노출(종종본다, 자주본다)	(462)	8.8	10.2	10.8	5.1	8.3	7.5	6.9
고시된 담배구매욕구(그렇다고 생각한다)	(1682)	31.9	28.4	32.4	36.2	33.3	33.3	40.9
인터넷 담배관련 상품판매의 흡연욕구 증대(그렇다)	(1681)	31.8	26.2	33.5	37.5	35.9	37.0	46.1
인터넷 해외 담배 구매 경험 (있다)	(401)	7.6	9.6	10.1	3.2	2.6	6.8	5.1
후원활동경험 (있다)	(270)	5.1	6.8	7.3	2.3	3.1	2.7	1.8
인터넷 오락매체 흡연장면 경험 (있다)	(2214)	41.9	38.4	39.6	52.0	52.6	36.1	45.2
(비흡연자만 응답) 편의점가판대 담배광고의 흡연욕구 (4,5)*	(31)	3.5					3.6	3.4
편의점가판대 담배광고의 흡연/구매욕구 증가 영향 (4,5)	(924)	17.5	15.1	20.3	23.0	21.4	13.8	19.7
(비흡연자만 응답)진열담배 흡연욕구 (4,5)	(46)	5.2					5.2	5.1
진열담배 흡연/구매욕구 증가 영향(4,5)	(1037)	19.6	17.0	23.3	26.1	26.6	12.5	21.9
(흡연자만 응답) 광고담배구매경험 (있다)	(980)	30.4	30.1	32.2				

주: 4, 5 로 표시된 부분은 5점척도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 비율임

담배규제정책 중 Plain packaging의 영향에 대한 설문항목에서는 비흡연자의 흡연예방효과에 대해서 42%가 영향이 클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4-10〉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N)	전체	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남	여	남	여	남	여
Plain packaging(4,5)* 미성년자 흡연예방효과	(1767)	33.5	29.5	27.3	42.7	40.6	36.7	37.6
Plain packaging (4,5) 비흡연자 흡연예방효과	(2242)	42.5	37.7	42.3	48.4	55.2	46.3	49.9
Plain packaging (4,5) 흡연자 금연결심함양	(1503)	28.5	24.3	26.4	36.2	37.0	31.5	32.9
금연구역흡연시 평균과태료인상수준 (만원)	1/4분위	5.0	1.0	5.0	10.0	10.0	10.0	10.0
	2/4분위	10.0	5.0	7.0	10.0	10.0	10.0	10.0
	3/4분위	15.0	10.0	10.0	30.0	20.0	30.0	20.0
금연정책 우선순위 (1순위)	실내 금연구역 확대	(1303)	24.7	24.9	26.7	22.2	21.4	26.5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	(877)	16.6	14.7	16.7	19.7	20.3	18.8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강화 (과태료 인상)	(1164)	22.0	15.5	18.9	31.6	30.7	32.2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614)	11.6	17.3	14.1	3.2	3.6	4.0
	금연구역 및 홍보강화	(345)	6.5	7.8	7.0	5.2	5.2	3.6
	미성년자 담배구매가능 연령을 낮춘다	(275)	5.2	7.3	5.1	2.0	2.6	2.5
	담뱃세 인상	(359)	6.8	4.7	3.5	11.3	8.9	9.3
	담배갑 그림건강경고 확대	(68)	1.3	1.2	1.5	1.5	1.0	1.1
	담배 광고 전면금지	(275)	5.2	6.5	6.4	3.3	6.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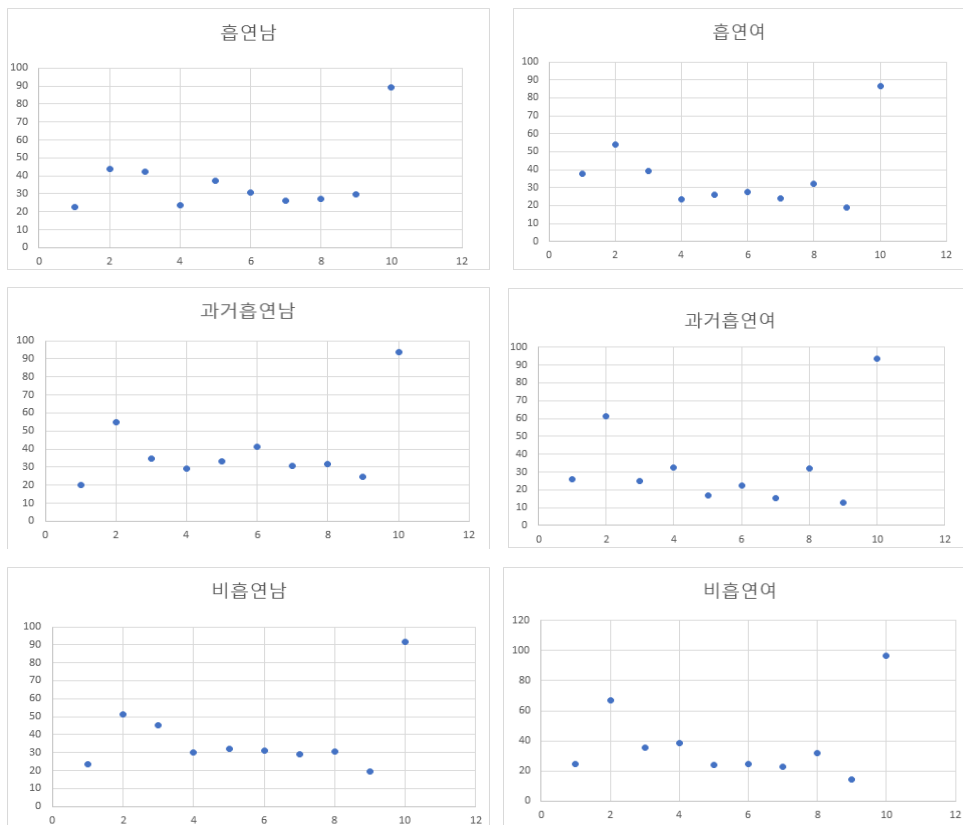
주: *5점척도의 4점, 5점을 의미함.

실내 간접흡연 노출 경험은 가정실내에서는 24%, 사업장 실내에서는 32%정도였고, 음식점 실내 간접흡연경험율은 30%이내였다. 상대적으로 간접흡연노출경험이 높은 곳은 아파트 베란다, 계단, 복도, 기타 실외가 주된 장소였다.

금연구역에서 과태료 인상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로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림 4-5] 흡연자 유형에 따른 간접흡연 경험 장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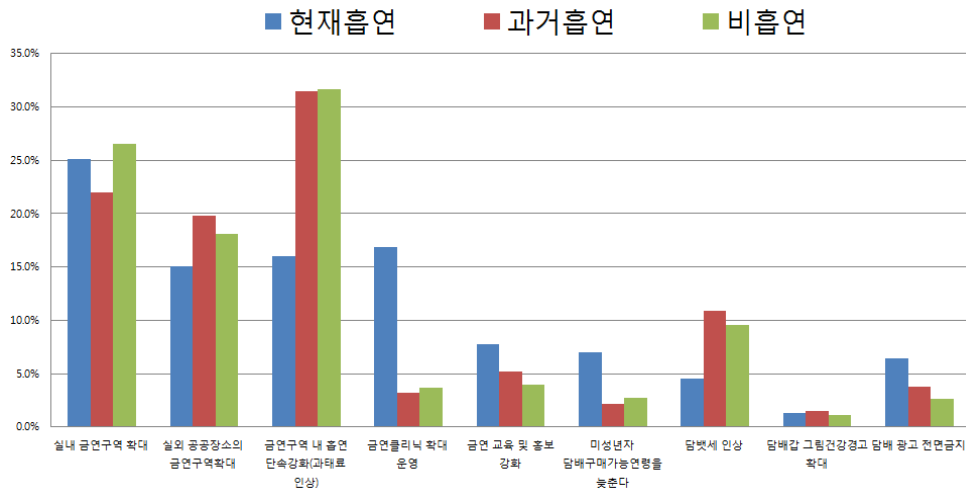


주: 간접흡연경험장소: 1. 가정 실내, 2. 아파트 베란다, 복도, 계단, 3. PC방, 4. 음식점, 5. 당구장, 6. 직장(사업장) 실내, 7. 직장 내 화장실, 8. 직장 내 복도와 계단, 9. 업무용 차량, 10. 길거리

일반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담배규제정책은 금연구역내 흡연단속강화, 실내금연구역확대,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구역확대, 금연클리닉 확대운영, 담뱃세 인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 흡연자의 응답에서는 실내금연구역확대와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확대운영이 필요도가 높았다.

[그림 4-6] 담배규제정책확대의 우선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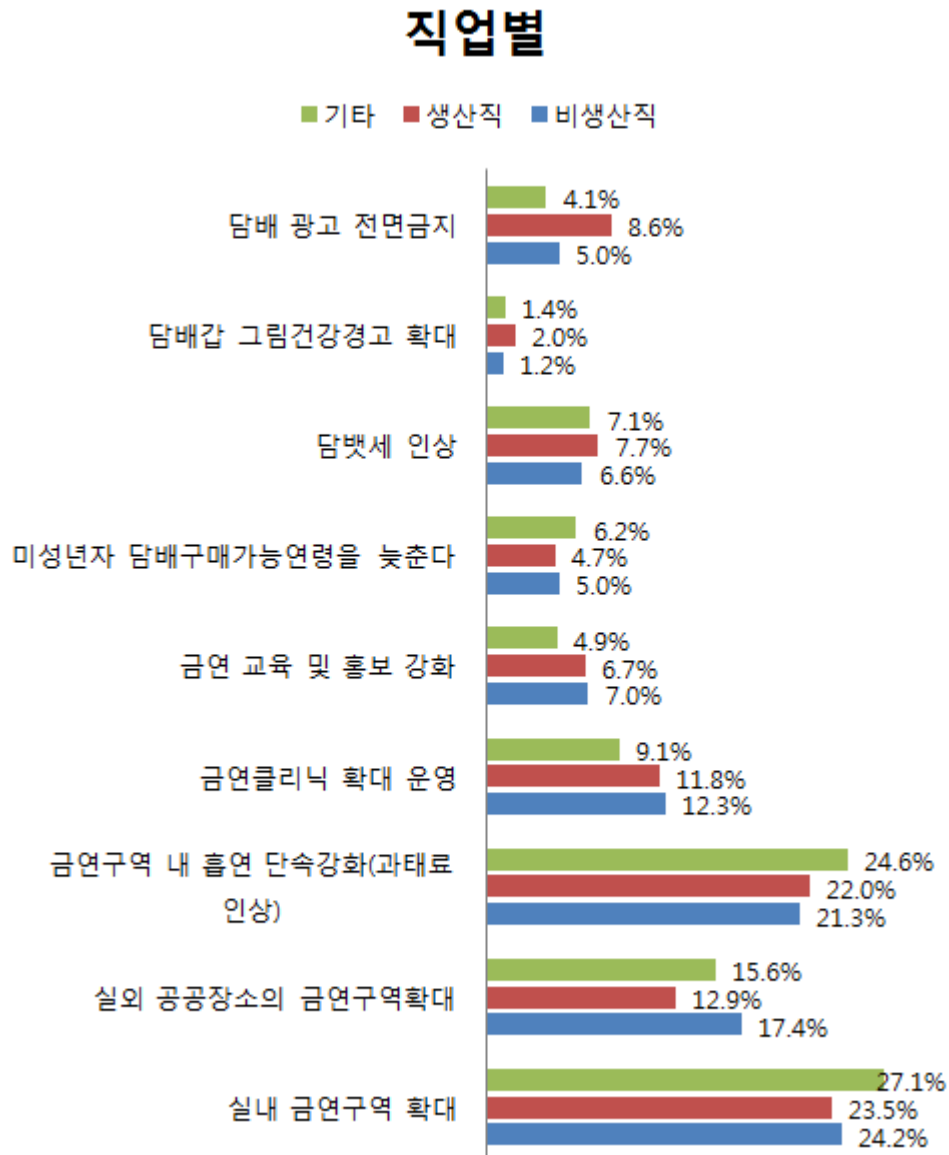
주: 1. 실내 금연구역 확대, 2.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 3.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강화(과태료 인상), 4.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5. 금연교육 및 홍보강화, 6. 미성년자담배구매가능 연령지연, 7. 담뱃세 인상, 8. 담배갑 그림 건강경고 확대, 9. 담배 광고 전면금지

담배규제정책 중 Plain packaging의 영향에 대한 설문항목에서는 비흡연자의 흡연예방효과에 대해서 42%가 영향이 클 것으로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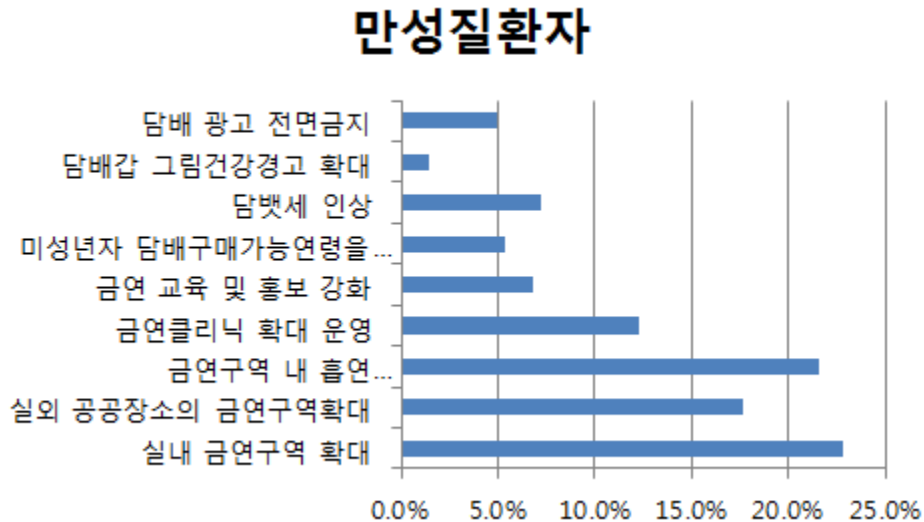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는 직업별, 만성질환유무별, 어린이동거가정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향후 정책추진시 대상인구집단의 건강취약상태, 직업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월간 간접흡연의 경험빈도수를 합하여 선호하는 담배규제정책을 분류한 결과 담뱃세 인상과 금연구역내 단속강화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그림 4-9). 취약계층일수록 간접흡연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담배규제정책의 우선순위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7] 사회적 특성에 따른 담배규제정책의 우선순위(직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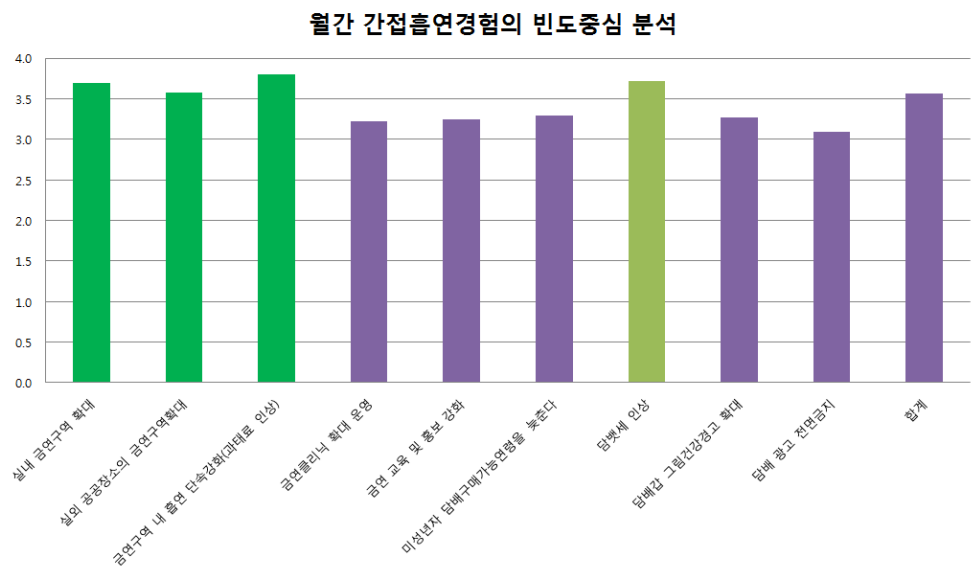


[그림 4-8] 건강취약 특성에 따른 담배규제정책의 우선순위



[그림 4-9] 담배규제정책별 응답자의 간접흡연경험빈도수

(단위: 월간 경험 건수)



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담배규제정책의 사각지대

제2절 정책제언: 담배규제의 성과향상을 위한 이행

제3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우리나라 남성의 15세이상 매일흡연율은 2010년 40.8%에서 2016년 32.9%로 감소하였으나 OECD주요 국가의 흡연율은 2016년 기준 평균 23.0%이다. 일본 남성의 15세이상 매일흡연율은 2010년 32.2%에서 2016년 30.2%로 낮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금연정책성과의 주요 요소는 공공장소실내금연구역, 사업장 실내금연구역의 확대, 실외 금연구역확대지정, 그림건강경고 등이었다. 금연정책성과와 관련하여 가장 미진한 정책은 미성년자의 담배구매연령제한이었다. 미성년자의 흡연예방, 대학생 흡연예방과 금연유도 등이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다. 담배회사의 광고판 축후원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매점이나 면세점에서 담배의 진열과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담배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제1절 담배규제정책의 사각지대

1. 담배제품의 선호도 변화

신종담배 등장은 담배선호도를 변화시키고, 담배선호도 변화는 담배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주어 담뱃세 인상의 효과, 즉 흡연율 감소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최성은 등, 2017). 본 연구에서 가향담배, 껀련형 전자담배 등에 대한 선호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지속적인 흡연을 모니터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담배를 소비하다가 껀련형 전자담배로 바꾸는 주된 이유에는 건강에 해가 적을 것 같다는 잘못된 인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향담배는 학생 같은 어린 연령층에 더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확인되었다. 가향담배를 비롯한 다양한 담배제품의 성분과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은 국민의 인식과 선택을 개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가 단면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건강수준은 비흡연 남성과 여성

에서 상대적으로 모두 높았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남자 과거흡연자에서 가장 많았다.

흡연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담배는 일반담배가 82.6%로 많았지만 여성이 더 많이 일반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궤련형 전자담배의 사용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궤련형 전자담배를 소비하는 사람의 인구학적 특성은 기혼자, 가정의 월소득이 높은 경우, 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 직업의 종류는 비생산직인 경우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일반담배사용자는 혼인상태가 기혼 이외인 모든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학생, 주부, 무직),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 더 많았다.

일반담배를 피우다가 최근 1년간 궤련형 전자담배로 바꾸었다는 경험은 남성에서 많았고, 연령대는 30대에서 많았다. 10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사는 사람에서 더 많았고, 기혼자일수록 궤련형 전자담배로 바꾼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업 이상에서 궤련형 전자담배로 바꾼 비율이 높았다.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에서 더 많았다. 궤련형 전자담배로 바꾼 이유는 냄새(56%), 건강(30%), 향기, 맛(12%) 등이었다.

가향담배의 사용은 성별로는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하고, 연령대로는 20대에서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직업별로는 기타(군인, 학생, 주부, 무직 등)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학력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하이거나 대학원졸업이상에서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결혼상태가 기혼 이외의 경우일 때 가향담배사용이 많았다.

새로운 담배가 출시될 때 심사하고 허가하는 조치에 대한 강도를 높여서 진입을 차단하는 기전이 필요하다. 가열담배의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생활속 직간접 담배광고

편의점 담배광고와 담배제품진열은 청소년의 흡연과 구매욕구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황지은 등, 2018). 즉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담배회사의 마케팅이 청소년에 집중한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유현재 등(2017)의 연구에서는 흡연청소년의 흡연욕구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청소년의 담배구매욕구를 증가시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현재 등(2015)의 담배회사 CSR연구 FGI에서도 편의점 담배제품진열이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길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성인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응답되었다.

2018년 연구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에서는 흡연욕구증가경험이 신제품 고시때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새로운 담배제품의 고시방식이 비흡연성인에게도 흡연의 욕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인의 경우는 과거 흡연자, 즉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더 흡연욕구를 유발시키는 영향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편의점 담배제품진열과 담배광고는 흡연자의 금연을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담배의 광고, 판촉, 후원 규제는 세계 평균이행률이 60%정도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2016). FCTC에서 추구하는 포괄적 금지를 달성하려면 모든 예외조항을 없애야 한다. 소매점 내의 담배광고와 담배의 진열이 비흡연자의 흡연욕구를 더 많이 자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미성년자 흡연예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흡연율과 전자담배 사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무분별하게 전자담배에 대한 영상(예: 흡입 방법)이 유포되어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자극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청소년기를 벗어나는 대학생의 흡연을 예방하고 조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 캠퍼스 금연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3. 담배가격

담배가격은 담배에 대한 접근성 감소와 관련 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강은정 등, 2009). 2005년 담뱃세인상, 2015년 담뱃세 인상은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담배값 인상의 폭이 컸던 2015년의 효과는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고, 남자흡연율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건강불평등을 크게 개선하는데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장영수, 2018).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수행한 대국민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는 담배가격인상, 금연교육홍보강화, 금연구역확대, 금연지원서비스제공, 담뱃갑 경고그림도입, 담배광고진열금지 등의 순서로 인식되고 있었고, 담뱃값 인상의 재원활

용방안으로는 흡연자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캠페인교육 외에 기타 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이선영, 황지은, 2015)

4. 흡연장소

실내 금연구역에 있는 흡연실은 간접흡연보호의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실외 금연구역 내에 있는 흡연장소는 금연문화를 규범화하고 정착시키려는 사회 정책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당구장 금연구역지정 등 우리나라의 금연구역확대정책에 대한 많은 진전이 있어 왔다(노진원 등, 2017). 그러나 불완전한 법제도로 인해 실내에서 흡연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협약8조의 담배연기노출로부터 보호를 달성하는데 제한점이 많다(양유선, 2015). 금연건물로 지정된 건물에서도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근거를 확인한 연구도 있었다(Park et al. 2016). 실내에 존재하는 담배연기가 실내의 공기중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논문도 있었다(임종명, 이진홍, 2014). 실내 모든 장소는 전면금연구역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규범이 되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하는데에는 흡연장소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내 흡연구역, 실외 흡연구역 등으로 장소를 정해주고 있으나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인구사회적 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간접흡연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담배 소매점 밀집도가 흡연을 더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된 연구도 있다(공재형, 2018). 실내에서 흡연실 설치 등으로 흡연을 허용하는 정책은 전면적인 실내금연구역정책을 저해하는 요인이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더 증가시킨다. 금연구역의 확대로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도울 수 있다는 근거도 있다(신상화, 2015).

본 연구에서 흡연자들의 흡연장소는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지정된 흡연장소보다는 가정실내에서 피우는 경향이 많았다. 흡연자들의 연간 금연시도 이유는 본인의 건강염려, 주위피해 우려, 담뭇값 부담 등 세가지가 80%를 상회하였다.

WHO FCTC의 담배연기로부터 보호 가이드라인의 원칙에 의하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모든 실내공간은 100% 담배연기가 없어야 한다. 금연구역이 있는

실내에 흡연실이 있는 경우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의 효과성이 없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 협약제8조 : 모든 직장 및 공공장소의 실내공간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조치 마련
- 협약제8조의 가이드라인 : 간접흡연(SHS, ETS)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처벌, 관리를 위한 인프라 마련. 순응과 시민의 참여 독려.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제9조4항 공중시설 금연구역지정과 실내 흡연실 설치
- 제9조6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실외 금연구역 지정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주민의 합의절차를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실 설치의 허용범위는 서울시 흡연구역설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흡연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규범화 및 이후 금연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재규범화 과정의 일부로써, 담배규제정책의 진화에 따라 완전 금연사회로의 이행 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실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장소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많다. 길거리의 흡연은 금연의 규범화를 저해하고 아동청소년의 흡연모방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외 흡연구역이 있는 경우도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통학로, 주민거주지역에 인접한 보행로가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FCTC 제8조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적발만 하는 단속업무가 강력해 질수록 흡연자의 반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빌딩 밀집지역 회사원의 금연을 독려해야 하는 사업주 측의 관심과 협조부족으로 흡연자를 계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개인 사유지에 길거리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협조가 안 될 수 있다.

흡연자는 담배산업활동의 희생자이며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 건강불평등 정책의 대상이다.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의 공공거주시설에서는 실내금연구역관리를 위해 과태료부과를 하는 대신 적극적인 금연순응을 지원한다. 흡연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가 퇴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공지를 충분히 하고 새로 이사온 사람에게 계도기간을 주며,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다양한 방법(치료서비스연계, 패치 제공 등)을 연결하고, 흡연자가 있는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도 저소득층의 주거를 후원할 때 실내금연구역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흡연자 가구가 퇴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도모하고 있다.

실외금연구역의 관리방법을 개선하는 과제와 실외 흡연구역 설치방법에 대한 과제가 동시에 개선되어야 흡연자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공흡연장소에 직접 금연광고를 보여주고, 흡연의 폐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금연을 위한 지원에 대한 안내도 하면 바람직하겠다.

흡연자에게 찾아가는 금연서비스가 필요하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흡연자들에게 패치를 제공해주며 행동요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실 설치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지자체의 건강증진담당인력과 주민,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 흡연실 설치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해야 한다.

제2절 정책제언: 담배규제의 성과향상을 위한 이행

FCTC협약의 다양한 항목을 이행하면서 담뱃세 인상, 담배갑그림경고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 성과와 흡연율감소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흡연율통계에 비하여 우리나라 남자 흡연율감소가 답보상태라는 점에서 국내 정책의 통합적 점검과 협력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인식과 행태변화를 지원하는 것은 흡연예방과 금연지원사업 등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흡연예방과 흡연자의 금연지원사업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FCTC협약 제12조에서는 일반대중에게 담배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이익, 간접흡연의

위험, 담배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인식을 증대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협약제 14조에서는 담배의존의 치료서비스의 제공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배회사의 영업적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로는 보다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미성년자 담배접근성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담배갑 라벨규제, 광고판축후원규제, 불법거래근절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임민경, 조홍준, 2018).

간접흡연은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어 건강을 위협한다. 국가적으로는 대기오염원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내오염원으로서 미세먼지관리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실외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외장소에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금연구역과 흡연시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간접흡연 경험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생산이 필요하다. 인구집단의 특성에 따라 간접흡연경험자를 세분화하고 주거공간과 모든 공공장소에서 경험하는 통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인구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간접흡연의 경험 비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건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반영하여야 한다.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근거를 생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의 역학적인 연구 혹은 정책 연구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담배산업과 정책결정을 둘러싼 이해관계, 정책과정, 정책결정가 및 일반국민들의 담배규제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및 변화, 담배산업 마케팅 전략 분석과 파급효과, 담배규제 정책변화에 따른 담배산업의 대응 전략 모니터링, 미디어의 담배 및 담배규제정책 관련 보도에 관한 프레임 연구 등 다방면에서 근거를 생산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1〉 FCTC 협약과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이행과제

조항	주요 내용	이행과제	본 연구의 조사분석 결론
5.3조	담배업계로부터 공중 보건정책의 보호	다부문적인 종합적인 전략과 계획마련/ 인 프라 강화	금연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함.(담배광고전면규제, 금연구역확대 등을 위한 조치)
6조	담배 가격 및 조세정책	담뱃세 인상과 면세 담배 축소/ 신종담배 과세에 대한 지속적 관리	담배선흡도의 변화가 흡연율감소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신종담배규제 강화 필요. 담배가격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함. 면세담배로 구매하는 비율증가우려로 구매범위를 축소해야 함.
8조	담배연기노출로부터 보호	전면적인 완전한 보호	실내 전면금연구역화,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대책 강화 실외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흡연자 대상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의 사회적 규범화 증진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함.
9조와 10조	담배제품성분 규제/ 담배제품 공개 정책	담배성분과 배출물을 측정하고 정보를 공개함/ 가향성분규제	연령증가, 학력증가에 따라 사용담배의 니코틴, 타르함량이 감소하므로 건강효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교육홍보와 성분규제 필요.
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오도성 문구 금지, 그림경고는 주요 표시면의 50%이상	포장 및 라벨규제로 담배광고효과를 감소시키고, 흡연예방효과를 증대시켜야 함.
13조	담배의 광고판촉후원 금지	포괄적인 금지(편의점 담배진열대 규제, 광고금지 등)	편의점담배진열, 담배광고는 청소년, 금연중인 과거흡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
14조	담배의존에 대한 금연 치료	금연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효과성 있는 금연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함.(행동요법, 니코틴대체요법)
16조	미성년자 담배구매 및 판매금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접근성금지	미성년자,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편의점 담배광고금지, 가향담배 규제 등 필요함.
17조	담배 재배농가의 대체, 전환정책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담배 재배 대체정책 추진/ 담배산업종사자, 노동자, 담배경작자 보호	담배경작자의 전환 지원필요에 긍정적임. 담배제조와 생산을 친환경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흡연자집단에서 높음. 담배산업의 환경유해성에 대한 인식개선교육홍보 필요.
18조	담배농업과 제조 관련 환경보호와 보건		

자료: WHO FCTC (2016) Global Progress Report.

김대진, 권경희 (2015) 미국 담배제품 규제 현황 및 고찰.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3호. 131-149

유현재 등 (2015) 담배회사 CSR 활동 및 간접 마케팅의 사례분석과 대중적 효과분석연구. 서강대학교,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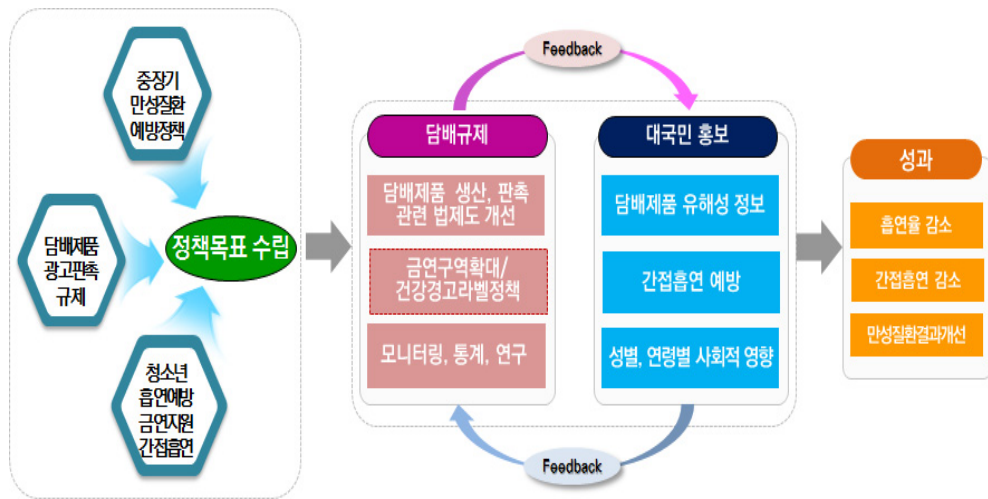
임민경, 조홍준 (2018) 세계 담배규제정책의 흐름과 한국의 현황 대한의사협회지. 3월호 61(3) 148-156.

정재도 (2015) 담배제품 규제입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연구 15(4): 1221-1264.

최성은 (2015) 전자담배 관리방안 및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건복지부.

담배규제정책의 성과증대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금연정책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만성질환의 예방, 흡연율감소, 간접흡연의 감소를 위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더불어 FCTC의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

[그림 5-1] 담배규제정책의 추진틀



제3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담배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규제방안의 근거 마련
- 담배공급감소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불법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기여함.
- 신종담배제품으로 인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자료 생산에 기여함.
-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 담배사업(제조, 수입, 판매업)의 진입규제, 양도, 허가취소 등 관련규정의 정비
를 통해 장래 사회일반의 관념변화 및 사정변경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

2. 활용방안

- 신종담배의 안전관리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 기존의 네거티브방식의 규제에서 포지티브방식의 규제방안 마련에 기초자료
로 활용
- 담배공급의 전체 사이클을 관리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 담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불법적인 유통이나 거래를 방지하는 체계를 만드
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참고문헌 <<

- 강은정, 김원년, 최성은, 이주열, 박현진, 노정미 (2009) 담배가격제도의 효과적 개선방안.
- 공재형(2018) 지역의 소매점 밀집도가 흡연자의 금연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준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 김대진, 권경희 (2015) 미국 담배제품 규제 현황 및 고찰.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3호.
131-149
- 김재진.(2008). 담배산업관리 적정화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노진원, 서수경, 유기봉, 윤진하, 박화미....이태원 (2017)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흡연노출평가. 을지대학교.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4) 금연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5) 보건복지백서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금연,
신상화(2015)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 금연정책포럼 8
월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 양유선 (2015) 국내 금연구역정책과 인식의 변화. 금연정책포럼 8월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 오충현(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수립현황과 대응방안, KOICA, 42-59.
- 유현재, 이성규, 임성원, 김진영, 손창규.....김나 (2015) 담배회사 CSR 활동 및 간접 마케팅의
사례분석과 대중적 효과분석연구. 서강대학교, 보건복지부
- 유현재, 이성규, 김진영, 조혜진, 장형우,조현화 (2017) 편의점 담배광고가 흡연의도에 미
치는 연향에 대한 연구:청소년계층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보건복지부
- 이선영, 황지은 (2015) 금연정책에 대한 대국민 여론 조사결과분석. 금연정책포럼 8월호, 한국
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 이유봉.(2015), 담배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이희영, 전자담배관리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보건의료연구원, 2010.3.
- 일본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임민경, 조홍준.(2018). 세계 담배규제정책의 흐름과 한국의 현황. 대한의사협회지.
61(3):148-156

- 임종면, 이진홍(2014) 환경담배연기로 인한 실내공기중 PM2.5 및 미량성분 오염 특성. 대한환경공학회지. 36(5). 317-324.
- 장영수 (2018) 최근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에 따른 흡연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추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사회조사의 활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학위논문.
- 장욱.(2009). 미국의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제정을 통해 본 우리의 입법과제, 법학연구 19(4), pp.115-147.
- 장욱.(2014). 미국의 담배규제정책 및 입법 동향 - 담배이용 감소를 위한 수요 및 공급 제한조치를 중심으로 - 최신외국법제정보(요청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맞춤형 법제정보
- 정재도.(2015). 담배제품 규제입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pp1249~1259
- 최성은 (2015) 전자담배 관리방안 및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건복지부.
- 최성은·지선하·김빛마로.(2018). 담배과세 인상의 흡연을 및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최은진, 이난희, 여지영, 김대중, 강일신, 양현석, 이성규.(2013)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및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대응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건강증진재단.
- 최은진, 최성은, 서미경, 김지은, 맹광호.(2010) 중장기 금연정책수립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최은진.(2012). 담배규제와 흡연예방을 위한 미국 정책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86호 (2012.04), 2012.4, 82-89 (8 pages)
- 한국건강증진재단.(2012).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 자료집
- 한국행정연구원.(2007). 이슈분석: 일본 간접흡연 및 전자담배 규제, 규제동향지, 2017년 겨울호
- 황지은, 오유미, 양유선, 이정은, 이선영, 조성일. (2018) 편의점 담배광고 및 진열노출이 회상과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5(1). 1-12.
- Cancer 2014-2019 Objet 10 Programme National de Reduction de Tabagisme 2014-2019, Ministere des Affaires Sociales, de la Sante et des Droits des Femmes, 2014.
- Chipty, T. (2016). Study of the Impact of the Tobacco Plain Packaging Measure on Smoking Prevalence in Australia. Appendix A, Post-implementation review tobacco plain packaging

- Chung-Hall J, Craig L, Gravely S., Sansone N, Fong(2018) Impact of the WHO FCTC over the first decade: a global evidence review prepared for the impact assessment expert group. Tobacco Control, 1-10; doi:10.1136/tobacco-control-2018-054389.
- <http://world.moleg.go.kr/web/main/index.do>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www.city.bibai.hokkaido.jp/> (일본 비바이시 홈페이지)
- <http://www.legifrance.gouv.fr/>
- <http://www.sante.gouv.fr/>
- <https://www.tobaccocontrolaws.org/legislation/factsheet>
- <http://www.yokoso.metro.tokyo.jp/>
- 동경도 홈페이지 동경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가칭)의 기본(안)
- <https://www.tobaccocontrolaws.org/legislation/factsheet>
- (글로벌법률센터 홈페이지(프랑스, 캐나다, 일본의 담배규제법))
- Mackay, J & Eriksen, Tobacco Atlas, 2002.
- <http://www.who.int/tobacco/en/atlas9.pdf>
- NHS.(2016). NHS Digital - Health Survey for England 2015 accessed at <https://digital.nhs.uk/catalogue/PUB22610>
- Novotny TE, Bialous SA, Burt L, Curtis C, da Costa VL, Iqtidar SU, et al. The environmental and health impacts of tobacco agriculture, cigarette manufacture and consumption.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93:877-880. doi: 10.2471/BLT.15.152744
- Park EY, Yun EH, Lim MK, Lee D-H, Yang W, Jeong BY, Hwang S-H (2016) Consequences of incomplete smoke-free legisl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results from environmental and biochemical monitoringL community based study, Cancer Res Treat. 48(1): 376-383.
- WHO.(2015).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5: Raising taxes on tobacco,
- WHO.(2017).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7
- WHO.(2017).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7 Country profil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WHO.(2017).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7 Country profile Australia. WHO.(2017).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7 Country profile USA.
- WHO FCTC (2016) Global Progress Report.

부록 <<

부록 1. 각국의 금연 정책 동향

부록 2. 설문조사표

부록 1. 각국의 금연정책 동향

〈부록표 1〉 각국의 금연정책 동향

국가		내 용	
우리나라		가격 정책	
		- 1994년 이후 7차례의 담배가격 인상	
		비가격 정책	
	1995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의해 금연구역 설정 등 본격적인 금연정책 시작	
	2001	- 한국담배인삼공사가(KT&G) 민영화 됨	
	2002	- 담배 주성분인 타르와 니코틴 성분 공개하도록 함.	
	2003	- 금연구역 대폭 확대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서명	
	2005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비준	
	2016	- 공장, 지자체 청사, 실내작업장까지 금연구역 확대	
	2010	-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자체 금연구역 확대 및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마련	
	2012	-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공장소 흡연 전면 금지 시행 - 담배갑의 경고문구 강화 및 가향물질 표시 금지	
	2013	-음식점(면적 150이상),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 전면금지 시행(2013년 하반기 유예기간 종료) - 금연구역 지도 관리를 위한 금연구역지도원제도 도입	
	2015	- 모든 음식점에 금연구역 지정, 흡연석 특례기간 종료에 따른 흡연석 모두 폐지(흡연실만 운영 가능) - 담배갑 경고그림 도입(면적을 30%에서 50%로 확대)	
	2016	-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제도 시행	
	2017	-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시 시정명령제도 시행 -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금연구역 지정 확대 - 정부차원의 궤련형 전자담배 안전성 및 유해성 분석 계획 발표(2017년 7월) - 공동주택 세대 내부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 마련(2017년 8월) - 궤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2017년 10월)	
	2018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금연구역 적용(2018. 시행 예정) - 흡연카페 금연구역 적용(2018년 7월) -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2018년 12월)	
일본	2002	- 도쿄 지요다 구, 특정 정부청사 및 비즈니스 구역 중심부의 변화가 금연구역 지정(2002년 11월)	
	2007	- 교토 시, 관광지 및 교토 역 주변거리 금연구역 지정(2007년 2월)	
	2010	- 대중장소에서 간접흡연 차단을 의무화한 건강증진법 시행(2010년) - 역내 전역에서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제정(2010년) … 신주쿠 등 3개구 - 공공장소내 전면 금연실시(2010년) … 가나와현 등 19개 지자체 법규화	
	2017	- 음식점 실내 흡연 원칙적 금지 개정안 초안 공개(2017년)	
	미국	연방 정부	2009
2010			- 식품의약국(FDA)은 과일을 비롯한 캔디, 혹은 클로바 향기 등을 내는 담배의 제조 및 시판 금지(2010년)
2014			- 흡연과 건강에 관한 1964년 공중위생국장보고서(Surgeon General's Report) 발간50주년 기념 2014년 보고서발표(2014년 1월) - 식품의약국(FDA), 청소년흡연예방캠페인 Real Cost 발표(2014년1월)

국가			내 용
호주	주정부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금연구역) 연방정부 소유 공공임대주택 내 주거지, 사무실, 공동 소유지, 건물로부터 25피트(7.5m)이내 지역 흡연 금지 추진(2017년말 시행) - 미광, 담배 구입연령 18세에서 21세로 상향조정(2017년 2월) - 미 연방법원판결에 의해 담배 제조회사에 흡연 유해성 인정하는 광고 1년간 시행 의무 부과(2017년 11월)
		2006	- (실외 금연구역) 캘리포니아 주 칼라바사스 시, 개인 주거 공간 이외의 거리, 인도, 주차장, 공원 등의 모든 야외 공간에서의 흡연 금지(2006년 조례 채택)
		2007	- (실외 금연구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시, 모든 인도 및 시내의 야외공간에서의 흡연 금지(2007년 조례 채택)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포니아주,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경우 차량안 흡연금지(2009년) - 버지니아주, 모든 식당과 바를 금연지역으로 하는 흡연규제법 통과(2009년) ※ 버지니아주는 담배재배 본산지로 금연관련법안 제안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음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 금연구역) 뉴욕주 뉴욕시, 타임스퀘어(Times Square) 및 헤럴드스퀘어(Herald Square)와 같은 보행자광장 금연구역 지정(2011년) - 뉴욕, 타임스퀘어 등 보행자가 많은 공간에서도 담배 피면 벌금 등 강력한 금연법 실시
		2016	- (실외 금연구역) 오리건주 애슬랜드시, 도시내 모든 대로의 인도 흡연금지(2016년)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몬테나주, 담뱃세 인상등 관련 법안 상원 통과(2017년 3월) - 미 뉴욕시, 대대적인 담배규제 강화조례안 발의(2017년 4월) - 미캘리포니아주 라구나시, 주택과 자동차 내부의 도시 전체 금연구역 지정(2017년 5월) - 미 샌프란시스코시, 멘톨 포함 가향담배 판매 금지 도입(2017년 6월) - 미캘리포니아주, 멘톨 함유 담배제품 판매 금지 법안 통과(2017년 9월) - 미 뉴욕시, 물담배 규제 법안마련(2017년 10월) - 미 하와이, 미성년자동승 차량 내에서 흡연 금지 법안 통과(2017년 10월)
		2018	- 미 캔터키 주, 쉼련 한갑에 부과되는 담뱃세1달러 인상(2018년 예정)
	연방 정부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디자인 담배갑(plain package) 시행(2010년) ※ 표준디자인 담배갑(plain package) 처음으로 시행한 국가 ※ 2012년부터 담배갑 녹색배경에 브랜드명과 그림경구만 표기 - 보건부 공무원은 근무 중 흡연 금지(2010년) ※ 근무시간 전·후, 점심시간만 가능하며, 건물 15미터 이내는 금연
		2015	- 담뱃세 인상(12.5%)으로 담배 한 갑 당 가격 \$27(약 22,300원), 2016년 \$30로 추가인상 예정(2015년 9월)
		2017	- 규격화무(無)광고 포장(Standardized Package) 규제 정당성과 관련하여 WTO분쟁해결 절차에서 잠정적 승소(2017년 5월)
영국	주정부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토리아주, 자동차 내에서 흡연 및 소매상의 담배전시 금지(2009년) 및 길을 포함하는 야외에서의 흡연 금지(2010년) - (실외 금연구역) 퀸즐랜드주(2010년), 태즈메이니아주(2012년), 보행자전용구역(pedestrian malls)을 금연구역으로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점에서의 담배광고금지법 상원 통과(2009년) - 담배자판기 판매 금지(2009년) - 자녀들 앞에서 흡연금지법 재정(2009년) - 집주인 90%가 흡연자에게 집을 세내는데 거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발표(2010년) - 담배 진열 판매 금지 시행(2013년) * 단 소형 상점들은 유예기간을 거쳐 '15년 4월부터 적용

150 담배 규제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국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제품의 무광고 포장 의무화 법안 통과(2015년 3월) - 18세 미만 전자담배 판매 금지 및 18세 미만 탑승한 개인 차량 내 흡연 금지(2015년) - 규격화 무(無)광고 포장(Standardized Package) 시행 관련 상급법원 소송에서 담배회사측 패소(2017년 4월)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값당 0.2 유로 담배가격 인상(2013년 7월) - 담배제품 무광고포장법 도입 결정(2015년) - 3년 내 궤련 가격 40% 인상 계획 발표(2017년 7월)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 2018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 금연, pp.20-23에서 발췌 정리

부록 2. 설문조사표

담배규제에 관한 국민인식 온라인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담배소비와 담배규제에 관련된 건강영향요인에 대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의 모든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책임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은진 연구위원)

※ 조사수행기관 : (주)에스티아이 (02) 785-9564

SQ1.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SQ_AREA_1. 귀하께서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도)

SQ_AREA_2. 귀하께서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군구)

SQ_AREA_3. 귀하께서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읍면동)

() □동 □읍 □면

SQ_A. 귀하께서는 평생 동안 다 합쳐서 담배를 5갑(100개비) 이상 피워 보셨습니까?

- ① 그렇다 ⇨ SQ_B
- ② 아니다 ⇨ SQ_C

SQ_B. 귀하께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담배 한 개비 이상 피운 날이 있었습니까?

- ① 매일 피웠다 ⇨ 현재 흡연자 질문
- ② 가끔 피웠다 ⇨ 현재 흡연자 질문
- ③ 지난 한 달 동안은 피우지 않았다 ⇨ 과거 흡연자 질문

SQ_C. 귀하께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담배 한 개비 이상 피운 날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 조사 대상에서 제외
- ② 없다 ⇨ 비흡연자 질문

〈흡연자 설문〉

지난 한 달 동안 주로 피우신 담배제품의 종류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담배제품에는 일반담배(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담배제품이 있으며, 이 중에는 향료가 첨가된 가향담배가 있습니다. 가향담배는 멘톨(멘솔, 박하향), 체리, 딸기, 바닐라, 포도, 오렌지, 애플민트, 커피, 헤이즐넛, 모히토 등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향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담배입니다. 비가향 담배는 이러한 향료 등을 첨가하지 않은 담배입니다.

일반 담배(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가열담배_Heated tobacco product)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사용)	파이프담배
			

엽권련	각련 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가향담배	
		<p>가향담배의 종류 예시: 에쎬 센스, 아이스큐브, 멘톨, 애플민트; 에쎬 체인지 W 포도껌; 클라우드9 1mg 바닐라; 레종 프레소 헤이즐넛; 레종 썬프레소 오렌지, 커피; 보헴시가 모히토 모히토</p>	

S1_1. 지난 한달 동안 주로 소비한 담배제품은 어떤 종류의 제품입니까?

- ① 일반 담배 (꺾련)
- ② 꺾련형 전자담배 (가열담배_Heated tobacco product)
- ③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사용)
- ④ 기타 (상세히)_____

S1_2.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주로 소비하신 담배제품은 가향담배였습니까?

가향담배 예시: 에쎬 센스, 아이스큐브, 멘톨, 애플민트; 에쎬 체인지 W 포도껌; 클라우드9 1mg 바닐라; 레종 프레소 헤이즐넛; 레종 썬프레소 오렌지, 커피; 보헴시가 모히토 모히토

- ① 아니오
- ② 예
- ③ 모름

S1_3. 귀하께서 소비하는 담배제품의 니코틴 함량은 어떻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____mg

S1_4. 귀하께서 소비하는 담배제품의 타르 함량은 어떻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____mg

S1_5. 가장 최근에 구매한 담배의 브랜드(제품)명, 수량과 가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브랜드(제품)명:

2) 수량

☐ __갑 ☐ __보루 ☐ 기타 (__)

3) 총 구매가격 : ____원

4) 구매장소 (예시: 편의점, 공항 등) : _____

S2. 2015년 담뱃세 인상 전에 비해 면세담배를 더 구매(본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소비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다

② 그렇다

S3. 처음 담배를 한두모금 피워본 연령은? 만____세

S4. 처음 담배 한 개비를 다 피워 본 연령은? 만____세

S5. 최근 한달기준으로 담배를 보통 하루에 몇 개비 피우십니까?

(여러 가지 브랜드를 피울 경우 최대 3가지까지 작성 / 파이프담배, 물담배 등 개비 단위가 아닌 경우 기타 단위로 기입)

종류	브랜드 (제품명)	수량	단위
[콤보박스]			
① 일반 담배 (꺾련)			<input type="checkbox"/> 개비 <input type="checkbox"/> 기타단위 ()
② 꺾련형 전자담배 (가열담배_Heated tobacco product)			<input type="checkbox"/> 개비 <input type="checkbox"/> 기타단위 ()
③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사용)			<input type="checkbox"/> 개비 <input type="checkbox"/> 기타단위 ()
④ 기타 (상세히)_____			

S6. 전자담배 기기로 인해 화상 등 인체에 손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S7. 주로 어디에서 담배를 피우십니까? (복수 응답)

- ① 가정실내 화장실
- ② 가정실내 베란다
- ③ 이외의 가정 실내 공간
- ④ 사업장 실내사무실
- ⑤ 건물 화장실 또는 복도, 계단
- ⑥ 건물내 흡연실
- ⑦ 건물 외 흡연실(흡연장소)
- ⑧ 길거리

S8. 앞으로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습니까?

- ① 1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 ② 3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 ③ 6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 ④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할 생각이 있다.
- ⑤ 현재로는 전혀 금연할 생각이 없다.

S9. 최근 1년간 24시간 이상 금연을 해 보셨습니까?

(금연: 목적의식적으로 24시간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은 행위)

- ① 아니오
- ② 예

S10. 최근 1년간 일반 담배를 피우다가 전자담배나 궤련형 전자담배로 바꾼 적이 있습니까?

- ①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나 궤련형 전자담배로 바꾼 적이 있다. (☞ S10-1로)
- ② 전자담배나 궤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담배로 바꾼 적이 있다. (☞ S11로)
- ③ 해당없음 (S11로)

S10-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향기(맛) 때문에
- ② 냄새가 없을 것 같아서
- ③ 건강에 해가 덜할 것 같아서
- ④ 기타_____

S11. 지난 1년간 흡연량을 줄이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그렇다

S12. 지난 1년간 니코틴이나 타르함량이 적은 담배로 바뀌서 피운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그렇다

(S9 ②응답자에게만 질문) S13. 가장 최근 담배를 끊으려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흡연장소가 줄어들었거나 없어서 (금연구역 지정, 금연 단속 등)
- ② 본인의 건강에 대한 염려로
- ③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간접흡연)
- ④ 담뱃값이 부담되서
- ⑤ 금연공익광고(TV,라디오)를 보고
- ⑥ 담뱃갑의 경고 문구를 보고
- ⑦ 기타(자세히)_____

(S9 ②응답자에게만 질문) S14. 최근 1년간 금연시도횟수는 몇 번입니까? () 회

(S9 ②응답자에게만 질문) S15. 금연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S16. 금연할 때 하고 싶은 금연방법은 무엇입니까?

〈과거 흡연자 질문〉

E1. 처음 담배를 한두모금 피워본 연령은? 만_____세

E2. 처음 담배 한 개비를 다 피워 본 연령은? 만_____세

E3. 과거 담배를 피우셨을때 보통 하루에 몇 개비를 피웠습니까? _____ 개비

E4. 전자담배 기기로 인해 화상 등 인체에 손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있다

E5. 담배를 끊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년__개월

E6. 과거 담배를 피웠던 기간은?

_____년__개월

E7. 가장 최근 담배를 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흡연장소가 줄어들었거나 없어서 (금연구역 지정, 금연 단속 등)
- ② 본인의 건강에 대한 염려로
- ③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간접흡연)
- ④ 담뱃값이 부담되서
- ⑤ 금연공익광고(TV,라디오)를 보고
- ⑥ 담뱃갑의 경고 문구를 보고
- ⑦ 기타(자세히)_____

E8. 담배를 끊기까지 금연시도를 해본 횟수는 몇 번이었습니까? () 회

E9. 가장 최근에 담배를 끊는 데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

〈공통질문〉

C1. 담배 브랜드(제품)를 선택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선택)

- 1. 디자인(라이트...순과 같은 문구,이미지, 색상)
- 2. 타르함량
- 3. 니코틴 함량
- 4. 담배맛(향)
- 5. 기타_____

C2. 인터넷블로그, 인터넷 카페, SNS, 신문기사에서 담배사용이나 담배제품, 관련 기기에 대한 정보를 보십니까?

- ① 거의 보지 않는다
- ② 가끔 본다
- ③ 종종 본다
- ④ 자주 본다.

C3. 새로운 담배제품이 고시(출시)되는 것을 보면 담배를 사고 싶거나 흡연하고 싶은 욕구를 더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지 않다.
- ② 그렇다고 생각한다.

C4. 인터넷블로그, 인터넷 카페, SNS 등 에서 담배관련 상품판매, 흡연이미지가 담배를 사고 싶거나 흡연하고 싶은 욕구를 더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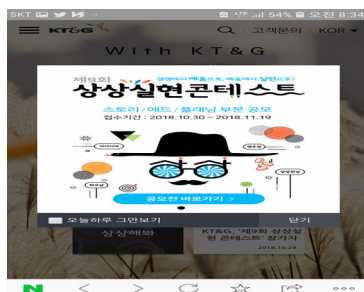
- ① 그렇지 않다.
- ② 그렇다고 생각한다.

C5. 지난 1년동안 인터넷으로 해외 담배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있다

C6. 지난 1년동안 귀하께서는 담배회사 주최로 하는 행사나 후원활동에 참여하거나 후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시〉



- ① 없다.
- ② 있다
- ③ 잘 모르겠다.

C7. 지난 1년동안 귀하께서는 오락매체(웹툰, 유튜브 등)에서 담배광고나 흡연장면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있다

(비흡연자에게만 질문) C8. 귀하께서는 편의점 등 소매점 가판대에 설치된 담배의 광고를 보면 “피우고 싶다” 또는 “피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C9. 귀하께서는 편의점 등 소매점 가판대에 설치된 담배의 광고를 보면 담배를 사고 싶거나 흡연하고 싶은 욕구가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비흡연자에게만 질문) C10. 귀하께서는 편의점 등 소매점에 진열된 담배를 보면 “피우고 싶다” 또는 “피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C11. 귀하께서는 편의점 등 소매점에 진열된 담배를 보면 담배를 사고 싶거나 흡연하고 싶은 욕구가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흡연자에게만 질문) C12. 귀하께서는 소매점 광고로 인해 평소 피우던 담배가 아닌 다른 담배 브랜드를 구매하여 피운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있다

◆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담배갑 포장에 대한 Plain Packaging의 이미지입니다. 담배의 겉포장에는 브랜드이름만 넣고 로고와 홍보문구가 없이 단색포장에 경고그림만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Q1_1. 담배갑 포장에 경고문과 경고그림만(Plain packaging) 있다면 미성년자의 흡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그렇다.
- ⑤ 매우그렇다.

Q1_2. 담배갑 포장에 경고문과 경고그림만(Plain packaging) 있다면 비흡연자가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그렇다.
- ⑤ 매우그렇다.

Q1_3. 담배갑 포장에 경고문과 경고그림만(Plain packaging) 있다면 흡연자가 금연을 결심하거나 담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그렇다.
- ⑤ 매우그렇다.

Q2. 지난 한 달 동안 다음의 장소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가정실내		
아파트 베란다, 복도, 계단		
PC방		
음식점		
당구장		
직장(사업장) 작업장내		
직장내 화장실		
직장내 복도와 계단		
업무용 차량		
길거리		

Q3. 버스정류장, 길거리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과태료는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_____만원
- ☐ 과태료 부과할 필요 없음

Q4. 앞으로 조속히 강화해야 할 금연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선택)

- ① 실내 금연구역 확대
- ②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구역확대
- ③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강화(과태료 인상)
- ④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 ⑤ 금연 교육 및 홍보 강화
- ⑥ 미성년자 담배구매가능연령을 낮춘다.
- ⑦ 담뱃세 인상
- ⑧ 담배갑 그림건강경고 확대
- ⑨ 담배 광고 전면금지

Q5.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담배의 경작으로 인해 종사자의 건강과 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다른 농업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담배의 규제방식은 어떠한가요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담배경작을 다른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담배제조와 생산을 친환경적으로 해야 한다.
- ③ 담배제조와 생산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 ④ 기타(상세히)_____

〈건강, 생활〉

H1. 평소에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음
- ② 좋음
- ③ 보통
- ④ 나쁨
- ⑤ 매우 나쁨

H2.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H2-1로)
- ② 없다 (☞ H3으로)

H2-1.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① 한 달에 1번 미만
- ② 한 달에 1번 정도
- ③ 한 달에 2~4번 정도
- ④ 일주일에 2~3번 정도
- ⑤ 일주일에 4번 이상

H2-2.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 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 ① 1~2잔
- ② 3~4잔
- ③ 5~6잔
- ④ 7~9잔
- ⑤ 10잔 이상

H3. 최근 1주일 동안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걸었던 날은 며칠입니까? (출퇴근 또는 등하교, 이동 및 운동을 위해 걷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 일

H4.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 ① 대단히 많이 느낀다.
- ② 많이 느끼는 편이다.
- ③ 조금 느끼는 편이다.
- ④ 거의 느끼지 않는다.

H5.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H6.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임
- ② 약간 마른 편임
- ③ 보통임
- ④ 약간 비만임
- ⑤ 매우 비만임

H7. 현재 본인의 키는 얼마입니까? () cm

H8. 현재 본인의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 kg

H9. 귀하께서는 3개월 이상 앓고 계신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질환
입니까?

만성질환 유무	질환명
① 있다	1. ()
② 없다	2. ()
	※ 질환이 여러 개이신 경우 질환이 중한 순서대로 2개만 적어 주십시오.

〈응답자 특성〉

SQ3. 귀하의 혼인상태(사실혼 포함)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배우자 있음 (같이 살고 있음)
- ② 이혼
- ③ 사별
- ④ 별거
- ⑤ 미혼

SQ4. 현재 귀하를 포함하여 현재 함께 사는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 () 명

SQ4-1. 현재 함께 사는 가족 중에 10세미만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SQ5. 귀하께서 지금 살고계신 곳의 거주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아파트
- ② 다세대 주택/연립주택
- ③ 단독주택
- ④ 기타 ()

SQ6.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졸 이하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대학교 졸업
- ④ 대학원 졸업 이상
- ⑤ 기타 ()

SQ7. 최근 1년 동안 귀하께서 종사하고 계신 직업은 무엇입니까? _____

직업 분류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직업군인)
	⑪ 학생/재수생 ⑫ 주부 ⑬ 무직

(SQ7에서 ①~⑩ 응답자만) SQ8. 귀하께서 하시는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고용주 및 자영업자 (내 사업을 한다) (☞ SQ9로)
- ② 임금근로자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일한다) (☞ SQ8-1로)
- ③ 무급가족종사자 (가족,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 (☞ SQ9로)

SQ8-1.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디에 해당하니까?

- ① 정규직 (정년보장)
- ② 비정규직 (한시직, 비전형, 파견, 단시간 근로자, 도급 등)

(SQ7에서 ①~⑩ 응답자만) SQ9. 귀하의 일주일간의 총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시간

SQ10. 귀하의 가정의 월간 총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300만원이하(~~☐~~ SQ10-1로)
- ② 301만원~500만원(설문 종료)
- ③ 501만원이상(설문 종료)

SQ10-1. 귀하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